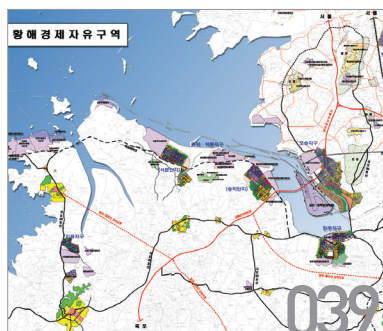


열린충남
THE CHUNGNAM REVIEW

통권 48호 2009. 10

Contents



039



117



134

권두언

- 006 세계 경제 위기 극복과 한국 경제 전망
육근만 /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장

특집 / 경제 위기 극복과 충남의 대응 전략

- 008 경제 환경 변화와 국내 경제 전망 김현욱
019 경제위기 극복 이후 충남의 산업발전 전략 한무호
030 황해경제자유구역의 발전전략 강영주

충남논단

- 048 충청남도의 농촌개발사업 추진실태에 관한 공무원 및 전문가 의식 분석
조영재 · 박지혜
073 지방재정 분권을 위한 과제 성태규
090 평생학습시대의 도래와 충남의 평생학습 발전방안 김만희 · 이영구

열린기획

- 108 세계화와 월드시티의 도시계획 양도식

해외탐방

- 130 근대 문화가 살아있는 홋카이도 권영현
143 달콤한 초콜릿, 가나의 자연환경 정종관
152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 가나자와 이충훈



170

충남의 도시

- 170 종교와 농경문화의 중심도시, 합덕 이인희

충남축제탐방

- 178 제10회 청양고추 · 구기자 축제 이용원



179

오피니언

- 182 슬로시티 운동과 충남의 지역 및 도시개발에 대한 소고 박헌주
186 시민참여형 마을(도시)만들기를 위한 제언 이건호
190 4대강 살리기는 지역발전의 원동력 외 김용웅



202

충남소식

- 197 도정
206 연구원
214 RHRD
219 상생협력갈등관리포럼
223 공공디자인클리닉센터



211

충남문화유산

- 227 신원사 노사나불래불탱



세계 경제 위기 극복과 한국 경제 전망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장 | 육근만



지난해 9월 15일 주요 언론을 통해 미국 투자은행 리만브러더스가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당시 우리나라는 추석연휴 기간이었는데 금융권 관계자들은 급히 사무실로 달려 나와 사태의 추이를 살펴야 했다. 이른바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가 최악의 금융위기로 확대되어 전세계 금융시장이 순식간에 패닉 상태에 빠져드는 순간이었다. 선진국의 자산 버블로 시작된 위기는 글로벌화된 금융시장을 통해 전세계로 전파됐으며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시장은 더 큰 후폭풍을 맞게 되었다. 주가가 속절없이 하락하고 환율이 연일 고공행진을 펼치면서 금융·외환 시장이 불안해지고 실물경기 또한 급격한 침체로 빠져들었다.

위기가 전세계적으로 번지자 각국의 정부와 중앙은행이 신속히 전면에서 나서서 이에 대응하기 시작했다. 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은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낮추고 금융기관에 긴급유동성을 지원하였으며, 정부도 부실 금융기관 및 기업에 대한 대규모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등 통화·재정 양면에서 이례적인 확장정책을 폈다. 가히 기존의 교과서적 메카니즘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은행이 여섯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5.25%에서 2.0%까지 내리고 금융시장에 27.6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는 등의 금융완화정책과 경쟁입찰방식 스왑거래를 통한 155.7억달러 규모의 외화자금 공급 및 은행 외화차입에 대한 지급보증, 미국과의 통화스왑 등을 통해 시장의 불안감을 떨쳐내고자 노력했다. 중앙은행의 강력한 시장안정 의지를 전달함으로써 금융시장 기능을 복원하고 실물경기 회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정부 또한 경제정책 기조를 빠르게 확장모드로 전환하며 위기대응 체제를 가동시켰다. 10년 전 외환위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한 추경예산 편성과 법인세, 소득세 등의 감세를 통해 작년과 올해 각각 10.8조원, 38.8조원 규모의 재정을 확대했다. 또한 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 신용보증비율 상향 조정 등을 통해 불안심리로 인한 중소기업의 자금경색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노력에 힘입어 금융위기 이후 900p대까지 급락했던 코스피지수가 최근 1,700p대를 돌파할 정도로 놀라운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한때 달러당 1,600원 가까이 치솟았던 환율도 최근 수개월 동안 1,200원대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실물경기도 침체에서

벗어나 회복의 기지개를 펴고 있다. 7월 들어 산업생산이 9개월만에 전년동월대비 플러스로 돌아섰고 지난 8월의 소비자심리지수가 2002년 3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소비도 회복 기대를 갖게 되었다. 또한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5개월 연속 상승하는 등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변화를 반영하여 IMF는 종전의 연 -3.0%이던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 전망치를 8월 들어 연 -1.8%로 대폭 상향 조정했으며 우리나라의 KDI 및 민간경제연구소들도 성장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경제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쏟아내던 해외 투자은행들의 시각도 완전히 달라졌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경쟁적으로 더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 전망치를 제시하던 이들 투자은행들이 이제는 제로 수준에 근접한 전망치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한걸음 더 나아가 플러스 성장 전망치까지 내놓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즈와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해외언론들도 우리 경제에 대해 우호적인 기사를 실는가 하면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해 금융위기 이전으로 회복시켰다.

세계 금융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고 경기가 침체국면에서 벗어나는 조짐을 보이자 그동안 위기극복 과정에서 늘어난 유동성을 줄이고 급팽창한 재정지출 등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이른바 출구전략(Exit Strategy)에 대한 논의가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9월 초 런던에서 열린 G20 경제정상 회의에서는 출구전략의 원칙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대략적인 윤곽이 드러나기도 했는데, 이와 같은 움직임은 세계 각국이 최악의 위기상황은 넘기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하지만 지나친 낙관론은 경계해야 할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아직은 주요국의 뚜렷한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지 않는 데다, 국제 원자재가격 불안, 달러가치의 불안정성, 자산시장의 버블 재연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경기회복 징후에도 불구하고 고용 및 투자 등은 침체의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1년 여간의 각별한 노력 끝에 발등에 떨어진 불을 겨우 끈 상태이다. 이제는 향후 대응체제에 대해 고민해 볼 때이다. 우선 그동안 위기극복 과정에서 시행했던 각종 대책들이 부동산 버블이나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급격한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판도 마련해야 하고 대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국제금융공조 체제도 다시 가다듬어야 한다. 또한 지속적인 투자와 고용 창출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정책적인 노력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지금은 지난 1년간 겪었던 혹독한 위기에서 벗어나 이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지혜를 모을 때이다.

경제 환경 변화와 국내 경제 전망

김현욱 |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

국제금융위기 이후의 국내외 경제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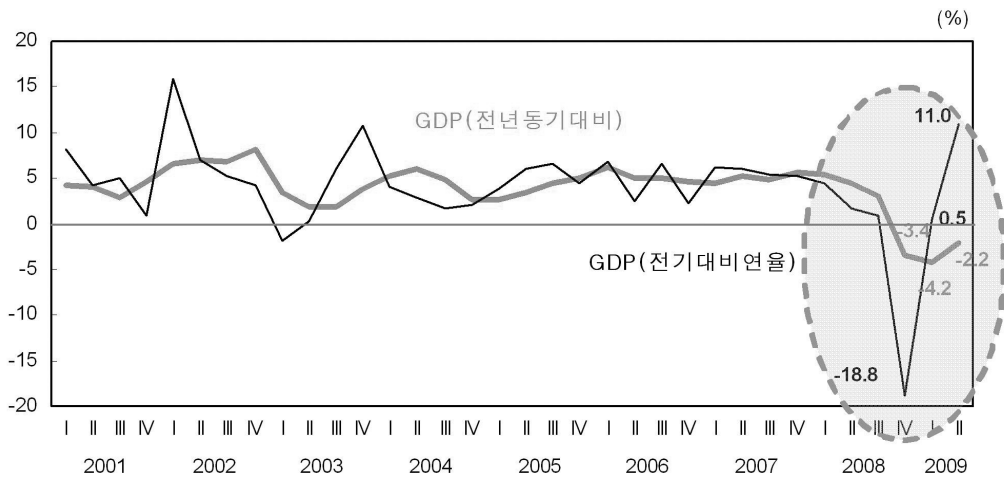
10년 전 두렵고도 절망스러웠던 외환위기의 경험이 마음속 깊은 상처로 남아있으면서도, 이번의 위기도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위기극복대책에 부심했던 작년 9월 이후의 시간들을, 이제는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는 것일까? 대공황 이후 최대의 세계경제 위기에 직면한 정부의 대응이 너무 안이하다고 분통을 터뜨리던 사람들의 입에 유동성 회수, 재정적자 축소 등이 회자되는 요즘 상황은 우리에게 격세지감으로 다가오고 있다.

작년 추석을 전후로 하여 국제금융시장은 물론 전세계 경제가 급락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도 예외는 아니었다. 리만브라더스의 파산신청 이후 급격히 확대된 국제금융위기는 먼저 선진국 금융기관들의 부채조정(de-leveraging)을 통해 외국자본의 투자자금 회수 경쟁을 초래했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금융시장도 경색되면서 수출과 내수가 크게 위축되었던 것이다. 그 이후 국제적 정책공조, 특히 각국의 정책금리가 인하되면서 국내외 금융시장이 조금씩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신용경색에 대한 우려도 다소 완화되기는 했지만, 미국 등 선진국의 주택금융시장 붕괴 가능성 등 불안요인들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성 회복 여부에 대해 아직 안심할 수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사상 최악의 대외 경제여건 하에서, 작년 4/4분기에 전기대비 -5.1%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추락했던 우리 경제는, 금년 들어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였다. 외환시장이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었으나 다행스럽게도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은 높아졌으며 국제금융위기의 여파로 국제유가 등 원자재가격도 급락하면서 외환수급 상황에 숨 돌릴 여유가

생겼다. 이와 더불어 토목건설을 중심으로 재정지출이 확대되고 금융시장에 자금이 돌기 시작하면서, 금년 1/4분기 전기대비 성장률이 0.1%로 나타나는 등 경기가 더 이상 추락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희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미국의 주택경기가 여전히 위축되어 있고, 주택가격이 더욱 큰 폭으로 상승했던 영국 등 유럽 국가들에서 주택경기 하강이 더 빠르게 진행되는 한편, 동유럽 국가들의 외채위기 가능성까지 부각되면서, 세계경제는 말 그대로 풍전등화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지난 2/4분기에는 세계경제의 많은 위험요인들이 상당 부분 해소되어 가면서 국내의 금융시장도 많은 사람들의 우려와는 반대로 오히려 안정된 모습을 나타내었으며, 이러한 가운데 우리 경제도 전기대비 2.6%라는 경이적인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예상보다 빠른 개선 추세를 나타내었다. 물론 전년동기대비로는 성장률이 -2.2%로서 국내 경기가 국제금융위기 발생 이전에 비해 여전히 위축되어 있지만, 1/4분기의 -4.2%보다는 크게 상승한 것으로서, 우리 경제가 국제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회복국면에 진입하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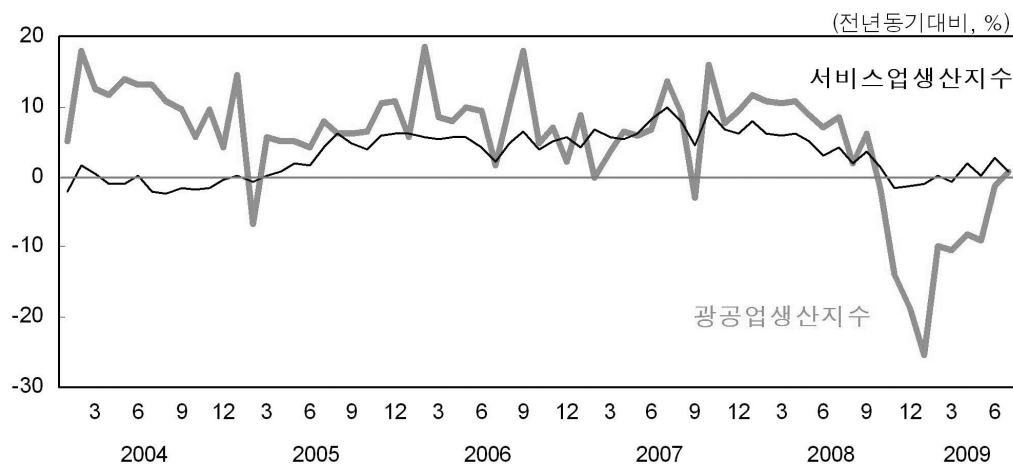


〈그림 1〉 GDP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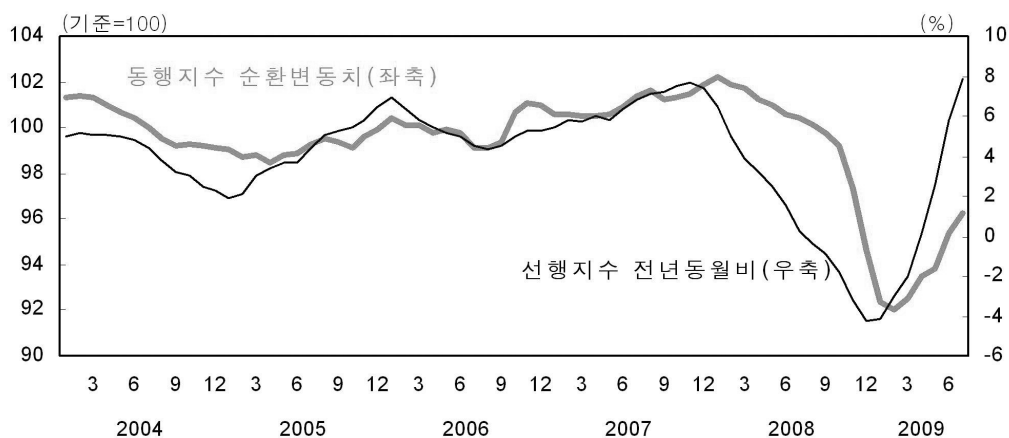
최근의 국내 경제 현황

우리 경제의 개선 추세는 3/4분기에 들어서도 지속되고 있는데, 특히 광공업생산의 경우 상반

기의 증가세가 7월에도 이어지면서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이 10개월만에 플러스(0.7%)로 전환된 것에서 나타나듯이 국제금융위기 직전 수준을 회복하였으며, 서비스업생산의 경우에는 7월에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전년동월대비로는 4월 이후 꾸준히 플러스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의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종합지표인 동행종합지수에서 추세변동을 제거하고 본 순환변동치는 물론 선행종합지수의 전년동월대비 증가율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경기 회복세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임을 의미하고 있다.



〈그림 2〉 광공업생산 및 서비스업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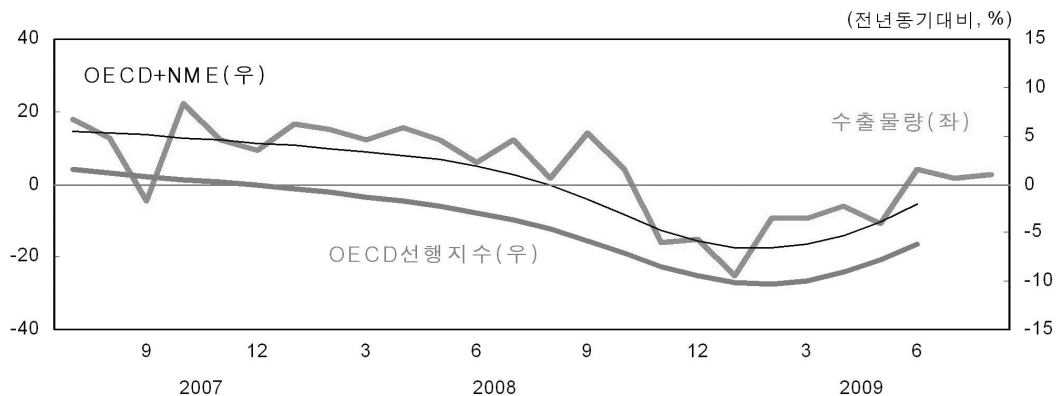
〈그림 3〉 동행지수와 선행지수

이와 같이 광공업생산의 견실한 증가세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최근의 경기 개선 추세는,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대상국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출 감소세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완화되고 있는 데 주로 기인하고 있다. 국민계정상의 물량기준으로 본 2/4분기의 수출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3.9%로 국제금융위기 발생 이전보다 여전히 위축된 상황이나, 전기대비로는 1/4분기의 -4.3%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한 10.9%를 기록하였다. 이와 같은 수출의 개선은, 상반기에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었던 선박수출과 중국의 내수부양책에 따른 LCD 등의 대중국 수출 증가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선박수출의 경우 과거 확보된 수주물량을 바탕으로 금년 상반기중 전

〈표 1〉 총수출(금액 기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2008년				2009년			
	1/4	2/4	3/4	4/4	1/4	2/4	3/4	4/4
총수출	17.4	23.1	27.0	-9.9	-25.2	-20.5	-21.8	-20.6
선박제외 총수출	17.2	23.2	21.9	-16.2	-30.7	-25.4	-23.4	-19.1
선박 및 석유제품 제외 총수출	14.3	17.8	14.3	-16.3	-29.8	-22.2	-18.5	-1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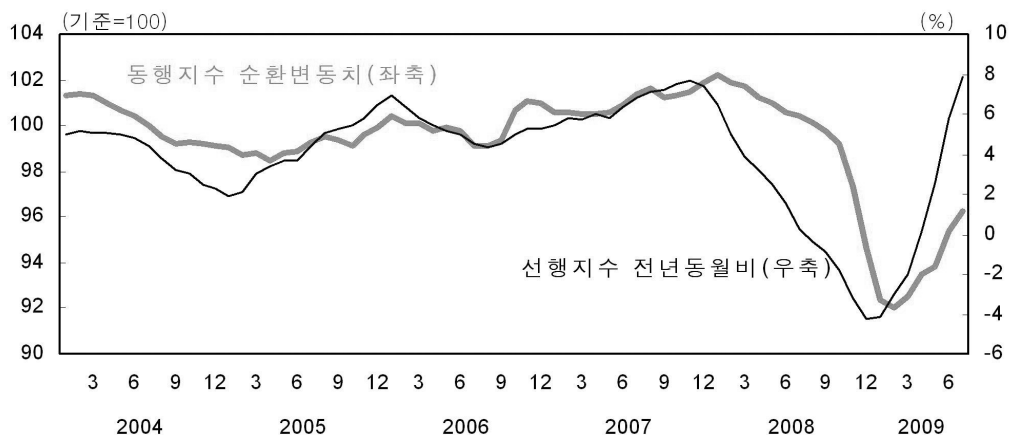
〈그림 4〉 수출물량(선박 제외) 및 OECD선행지수

주: 1) 수출물량=선박제외 총수출액/수출단가 (단, 수출단가는 6월까지지만 발표된 관계로 7~8월중에는 수출물가(달러기준)와 동일한 추세를 보인다고 가정).

2) NME(Non-member Major Economy): 중국, 브라질, 인도, 러시아,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년동기대비 31.9% 증가하였으며, LCD 수출의 경우에는 중국 정부의 내수부양 조치인 지옌샤샹(家電下鄉)정책의 결과 상반기중 대중국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44.1% 증가하였다. 3/4분기에 들어서 수출금액을 기준으로 7월과 8월의 총수출 감소폭이 다소 확대되었으나, 선박수출의 일시적 감소 및 작년 상반기의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서, 전반적인 수출 개선 추세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출과 더불어, 자산가격과 원화 가치가 회복세를 나타내고 교역조건이 개선됨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실질구매력이 강화되었던 것도 내수 위축을 완화시키면서 경기를 빠르게 개선시키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경제주체들의 실질구매력은 국내총소득(GDI)의 변화를 통해 가늠해 볼 수 있는데, 국제금융시장이 안정된 모습을 유지하고 경상수지 흑자의 지속에 따라 원화 가치가 부분적으로 회복(환율 하락)되는 한편, 반도체 가격의 상승 등으로 교역조건이 개선됨에 따라 국내총소득(GDI)이 GDP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정도로 증가한 것도 민간소비 등 내수 경기를 개선시키는 힘이 되었다.



〈그림 5〉 국내총생산(GDP)과 국내총소득(GDI)

또한 저금리 정책기조가 유지되면서 기업들의 투자 여건이 개선되었으며 주택가격 및 주가 등 자산가격이 회복세를 나타내었던 것도 민간소비 및 투자의 극심한 위축을 완화시키는 데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작년 하반기 이후 큰 폭으로 확대된 재정지출이 확장적 통화정책과 병행되면서, 거시경제에 대한 재정정책의 파급효과가 예상보다 크고 신속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내수 회복세를 강화시키는 추가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물론 국제금융위기의 충격을 완충하기 위해 재정지출이 상반기에 대규모로 조기 집행되면서 하반기에는 재정 여력이 약화되고 이에 따라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가 다소 하락하겠지만, 작년 4/4분기 이후 큰 폭으로 확대된 재정지출의 파급효과가 하반기에도 시차를 두고 나타나면서 민간부문의 소비 및 투자의 회복세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대외 경제 여건의 변화

최근의 세계경제는 주요 선진국의 경기 위축이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 신흥시장국들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비교적 견실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고용상황이 여전히 불안하고 이에 따라 소비의 부진도 지속되고 있으나, 확장적 재정정책 등에 힘입어 2/4분기 성장률이 호전되고 주요 경기선행지표들도 개선되는 조짐이 미약하나마 나타나고 있다. 미국 경제의 경우, 주요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고 주택경기과 소비침체가 완화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고 있는데, 고용 부진의 영향으로 소비를 비롯한 경제지표들이 여전히 위축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나, 2/4분기 이후 고용불안이 다소 진정되고 있다. 유로 경제의 경우 주택경기가 크게 침체되어 있는 상황으로 전반적인 불확실성이 높기는 하지만, 2/4분기 성장률이 전기대비 -0.1%를 기록하는 등 내수 및 수출의 개선으로 산업생산의 감소세가 완화되고 소비자신뢰지수가 호전되고 있다. 일본 경제의 경우에도 민간소비 등 내수가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나, 수출이 소폭 개선되면서 2/4분기 성장률이 전기대비로 플러스 0.9%를 기록하는 등 경기 급락세가 진정되고 있는 모습이다.

개도국의 경우에도 저축률과 유가 상승 등 대내외 하방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나, 아시아 신흥시장국들을 중심으로 내수 개선과 더불어 수출 등의 경제지표들이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 비교적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국 경제의 경우에는 주요 내수 경제지표의 성장세가 유지되고 수출 감소세도 진정되면서 경기가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각국의 경제동향을 반영하여 주요 경제예측기관들의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도 바뀌고 있다. 전망을 수시로 조정하는 투자은행(IB)들의 경우 이미 주요 개도국들에 대한 성장률 전망을 경쟁적으로 높이기 시작했으며, IMF를 비롯하여 다소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국제기구들

도 세계경제의 본격적인 회복이 내년이나 가능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신흥시장국들에 대한 성장률 전망은 조심스럽게 올리고 있는 분위기이다. 최근에는 주요 선진국들의 2/4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게 발표되는 등 경기 급락세가 진정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선진국들은 물론 세계경제의 성장률 전망도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유가 급등 및 국제 금융시장 불안 재현, 급격한 신흥플루 확산 등 예기치 못한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우나, 전반적인 세계경제의 개선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 2〉 주요국의 2009년도 경제성장률 전망 (IMF)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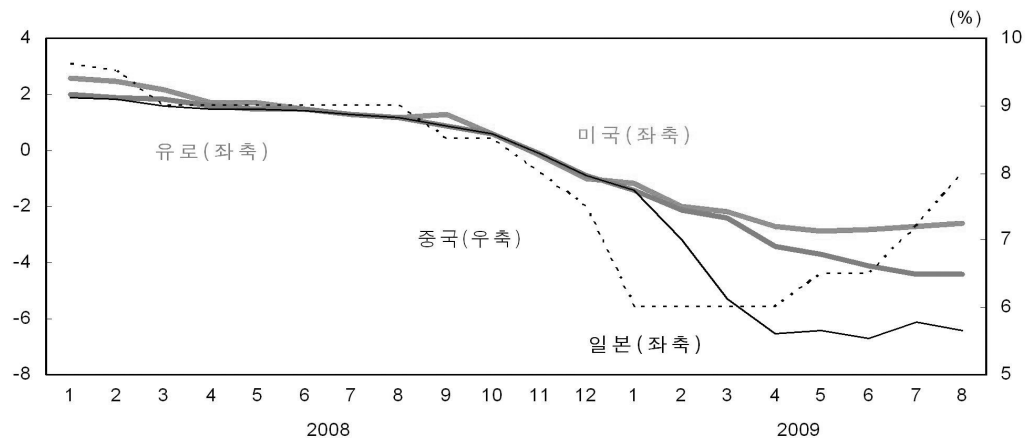
전망시점	World	미국	유로	일본	중국	NIES ¹⁾	한국
2009년 4월	-1.3 [1.9]	-2.8 [0.0]	-4.2 [-0.4]	-6.2 [0.5]	6.5 [7.5]	-5.6 [0.8]	-4.0 [1.5]
2009년 7월	-1.4 [2.5]	-2.6 [0.8]	-4.8 [-0.3]	-6.0 [1.7]	7.5 [8.5]	-5.2 [1.4]	-1.8 [2.5]

주: 1) Newly Industrialized Asian Economies: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2) 한국의 경우 2009년 8월 시점의 전망치.

3) []안은 2010년 전망치임.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January · April · July 2009 등.



〈그림 6〉 주요국의 2009년도 경제성장률 전망 수정 추이 (EI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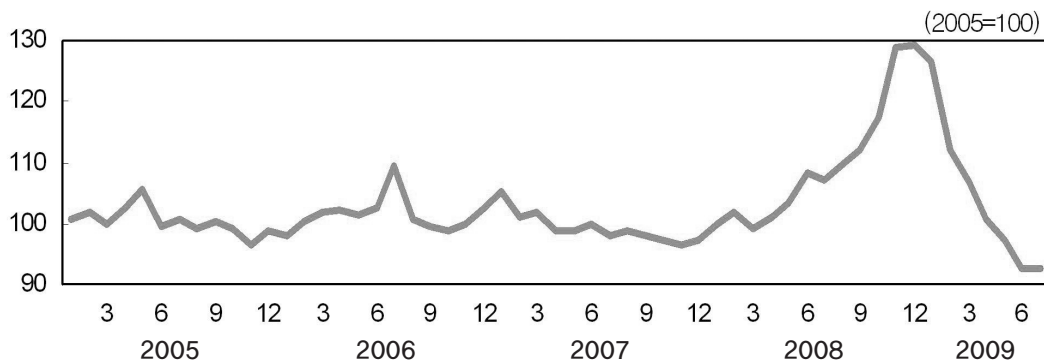
주: 가로축은 2009년 성장률 전망이 발표된 전망시점.

자료: EIU (Economist Intelligence Unit).

국내 경제 전망

세계경제가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특히 중국 등 개도국을 중심으로 한 우리의 주요 수출대상국들의 경기가 상대적으로 견실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향후 우리 경제의 수출 회복세도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기업들의 재고 조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대내외 수요 증가가 견실한 생산 증가세로 이어지는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경제는 국제유가가 급등세를 보였던 2008년 상반기부터 내수를 중심으로 위축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따라 기업들의 재고가 빠르게 축적되어 왔다. 그러한 상황에서 2008년 9월에 국제금융위기가 발생했는데, 이에 따라 기업들은 생산을 급격하게 줄이면서 재고 조정을 시도해 왔는데, 국민계정 상 재고증감의 성장기여도가 전기대비 성장률 기준으로 2008년 4/4분기에 -3.0%p, 2009년 1/4분기에 -3.3%p, 2/4분기에 -2.1%p로 나타났듯이, 급격한 재고 조정은 성장률에 상당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6월 이후 생산자제품 재고가 증가세로 반전하여 기업들의 재고 조정이 마무리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는데, 기업들의 재고가 정상 수준으로 축적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재고의 증가는 적어도 단기적으로 성장률을 견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1980년대 초반 이후 최저 수준인 60%대로 하락했던 제조업 가동률도 최근에는 80%에 가까운 수준으로 상승하여 거의 정상을 회복한 모습인데, 이는 재고 조정이 마무리되면서 수출과 내수 측면에서의 수요 증가가 기업들의 생산에 즉각 반영되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동안 크게 침체되어 있었던 설비투자도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7〉 재고율 지수 (재고/출하 비율)

이와 같이 대내외 경제 여건이 예상보다 빠르게 호전됨에 따라, 우리 경제의 성장률도 당초 예상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금년도 성장률은 정부의 전망치인 -1.5%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보이는데, 하반기의 경기회복 속도가 2/4분기보다 다소 완만해진다고 하더라도 -0.7% 내외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소비는 저금리, 물가 안정 및 실질구매력 개선 등에 기인하여 소득 증가세와 유사한 수준의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 설비투자는 국내외 금융시장 안정 및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 등으로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건설투자는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공공 및 토목부문의 투자 증가에 기인하여 다소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수지는 원자재 가격의 안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이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2009년 연간으로 300억 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의 흑자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는 고용시장에서는 실업률이 연평균 3.8% 내외까지 상승하겠으나, 취업자 수는 감소폭이 점차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 해소와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교역여건 개선 등으로 내수와 수출이 정상화되면서, 4%대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소비는 환율, 물가 및 고용상황 등 경제여건이 안정됨에 따라 소득증가율과 유사한 수준의 회복세를 지속할 것이며, 설비투자는 2009년에 급속히 위축되었던 설비투자 수요가 본격적으로 확대되면서 비교적 큰 폭의 증가세가 예상되고, 건설투자는 공공부문의 투자가 유지되는 가운데, 민간 건설부문의 부진이 점차 개선되면서 2009년의 증가세를 유지하는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경상수지는 수출부문에서 상당한 수준의 회복이 예상되나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흑자규모가 2009년보다 축소된 150억 달러 내외를 기록할 전망이다. 한편, 실업률은 경기회복에 따라 고용여건이 점차 개선되면서 3.5% 수준으로 낮아지고 취업자 수는 20만명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환율 안정 등의 영향으로 2009년과 유사한 2%대 후반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향후 정책 방향

우리 경제의 경기 국면이 국제금융위기에 따른 극심한 침체국면에서 회복국면으로 전환되

<표 3> 2009~10년 경제전망

(전년동기대비, %, 억달러)

	2008	2009					2010
	연간 ^p	1/4	2/4 ^p	3/4	4/4	연간	연간
국내총생산 (전기대비)	2.2	-4.2 (0.1)	-2.2 (2.6)	-1.4 (1.4)	4.9 (0.7)	-0.7	4.2
총소비	1.6	-2.0	0.9	1.6	6.3	1.7	4.5
민간소비	0.9	-4.4	-0.8	0.2	6.2	0.2	4.2
총고정투자	-1.7	-8.1	-2.7	-1.2	7.6	-0.7	6.0
설비투자	-2.0	-23.5	-15.9	-11.0	14.0	-9.6	13.8
건설투자	-2.1	1.6	3.7	3.8	5.7	3.9	2.0
총수출(물량)	5.7	-10.6	-3.9	-4.3	9.9	-2.3	6.6
상품수출(물량)	4.1	-14.1	-4.2	-3.9	14.2	-2.2	7.6
총수입(물량)	3.7	-18.2	-13.7	-5.0	22.1	-4.2	10.3
상품수입(물량)	4.6	-17.4	-14.3	-4.6	21.9	-4.1	9.8
경상수지	-64	86	132	60	33	311	153
상품수지	60	83	176	110	93	463	363
수출(금액)	4,334	782	897	955	1,094	3,728	4,312
(증가율)	(14.4)	(-24.0)	(-24.1)	(-18.5)	(15.0)	(-14.0)	(15.7)
수입(금액)	4,274	699	721	845	1,000	3,265	3,949
(증가율)	(22.3)	(-32.9)	(-35.9)	(-30.0)	(11.0)	(-23.6)	(21.0)
서비스 소득 · 경상이전수지	-124	2	-45	-50	-60	-152	-210
소비자물가 (근원물가)	4.6 (4.3)	3.9 (4.9)	2.8 (3.9)	2.1 (3.0)	2.2 (2.2)	2.8 (3.5)	2.7 (2.5)
실업률 (계절조정)	3.2	3.8 (3.5)	3.8 (3.9)	3.7 (3.8)	3.7 (3.7)	3.8	3.5

주: 1) p는 잠정실적치(preliminary)임. 2) 실업률은 구직기간 4주 기준임.

자료: KDI 경제전망 (2009년 9월 수정 전망 기준).

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거시경제 정책은 경기 회복세가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경기 국면의 전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될 필요가 있다.

국제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되었던 비상적인 조치들과 더불어 확장적인 재정정책과 저금리 통화정책은 금년 상반기까지의 대외 충격 및 이로 인한 국내 경기 급락을 완충하는 데에 성공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하반기에도 대외 경제여건의 하방위험에 대해 긴장을 느슨히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장기적인 목표와 연계하여 거시경제 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10년 전의 외환위기 이후 경기회복 국면에서 확장적인 거시경제 정책기조가 유지되면서 코스닥시장 버블이 나타났고, 2003년을 전후하여 세계적 IT버블 붕괴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유지되면서 신용카드를 비롯한 가계신용버블의 형성과 붕괴 등 불필요한 경기의 급변동이 초래되었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거시경제 정책기조는, 경기 회복세가 진행되는 정도에 대한 판단에 기초하여 위기관리를 위해 채택되었던 확장적인 정책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시키는 방향으로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적으로는, 국제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불가피하게 취해졌던 비정상적 정책조치들 중에서 시장을 왜곡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성격이 있는 조치들을 철회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보다 근본적으로는, 재정 확대의 고착화로 인해 재정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시적 재정지원 사업들을 계획에 맞추어 폐지하는 한편,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등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등 재정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통화 및 금융정책 측면에서는, 최근의 단기 유동성 증가세가 자산가격 급등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향후 경기 회복세가 물가 상승세를 확대시키지 않으면서 안정적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구조조정 등을 통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시중자금의 장기화를 유도함과 동시에, 선제적인 유동성 조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제금융위기가 해소되는 과정에서 대내외 유동성 공급이 급증하면서 자산시장을 과열시킬 가능성은 물론, 정책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어느 정도 시차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위기 극복 이후 충남의 산업발전 전략

한무호 | 충남전략산업기획단장

I. 서론

지난해 말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로부터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기관의 파산과 금융불안의 심화 → 주가 폭락과 신용경색 → 소비와 투자의 위축 → 소득과 고용의 감소 등 과정을 거치면서 상존해 있던 경제거품을 제거하고 선진국과 신흥개도국을 막론하고 전 세계의 실물경제의 침체로 전이되고 있다.

현 시점에서 미국발 금융위기는 위기극복을 위한 국가간의 노력과 공조로 최악의 상황을 지나 회복의 초기국면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세계경제를 위기상황에 이르게 했던 제반 요인들이 정상적인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0년대 중반의 과열성장 시기에 누적되었던 미국의 가계부채 규모는 최근 저축성향이 늘면서 줄어들고 있지만 마이너스 성장으로 소득수준도 줄어들면서 미국 가계의 부채부담이 쉽게 줄어들고 못하고 있다. 또한 제2차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켰던 동유럽의 실물경기 는 여전히 부진을 지속하고 있어 글로벌 경기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세계경제가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면서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향후 세계 경제가 순조롭게 회복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한 요소가 많다.

한편 국내경기는 지난해 급격히 위축되었으나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출과 내수지표들이 모두 빠르게 개선되고 생산활동이 활발해지면서 2분기에는 전 기대비 성장률이 2% 내외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우리나라 통화가치의 하락, 유가하락, 경기부양정책의 확대 등 국내외 여건이 우리경제에 유리하게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향후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작용했던 요인들의 효과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세계경기 상승속도가 빠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아직 우리경제가 저점을 지나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도달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글로벌 위기로 인해 지방경제는 지역의 경제기반과 역량의 차이에 따라 차등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고, 전반적으로 수도권에 비해 경기침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경제가 대내외 여건 변화에 영향을 감소시키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이번 글로벌 경제 위기를 지방경제의 체질개선의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II.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사회의 변화

이번 글로벌 경제위기는 전 세계의 경제사회에 큰 충격으로 작용하여 단순한 경기침체를 넘어 기존의 사고의 틀과 고정관념의 대변화를 통해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라이프 스타일 등 사회전반에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에도 영향을 미쳐 다음과 같이 한국 사회의 메가트렌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이번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글로벌화의 역행 및 지체될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화를 가속시켰던 금융부문의 자율과 이동성이 크게 약화될 것이고, 각국의 소비와 생산이 급락하면서 교역이 감소하고, 각국 정부가 위기 극복을 위해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에 지원을 강화하면서 많은 나라에서 직간접적인 무역장벽을 강화하는 추세가 심화될 것이다.

둘째, 경제권력이 미국과 유럽 중심에서 중국과 인도 등 신흥지역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유럽 중심의 성장엔진이 수명을 다하고 기력을 잃게 됨에 따라 세계경제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미 등 신흥시장을 이끄는 새로운 엔진의 힘에 점차 의존하고 있어 미국 중심의 글로벌 질서가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가 중심으로 재조정되며 다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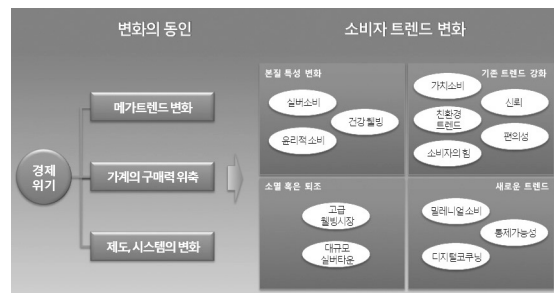
셋째, 고령화와 기후변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크게 부상하고 있다. 이번 경제위기가 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장기적인 흐름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고령자들이 가지고 있던 자산가치가 폭락하고,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인구 고령화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국가적으로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동인구는 줄고 급격히 늘어나는 연금이나 의료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또한 산업혁명 이후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 사용이 늘어나면서 CO₂ 배출량이 급증하고 기후 변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저탄소화 및 녹색산업화에 기반을 두고 경제성장력을 배가시키는 새로운 성장 개념인 녹색성장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후변화 문제를 방지할 경우 2100년까지 경제적 손실이 세계 GDP의 5~20%에 달해 1930년대 대공황에 맞먹는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녹색성장의 부상배경으로는 미국과 개도국 등에도 CO₂ 감축을 강제하는 기후변화 관련 규제 논의의 본격화, 에너지자원 고갈에 대한 우려와 국제에너지가격 급등, 그리고 녹색시장의 성장세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세계 주요국들은 이번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녹색시장을 선점하는데 국력을 집중하고 있다.

넷째, IT 기술의 융합화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미래 지향적 지식과 기술의 중요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기후변화와 자원고갈로 인한 친환경기술과 IT 융합기술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부상될 것이며, 세계 각국은 녹색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IT인프라 구축과 친환경 기술에 막대한 정부 지원을 투입하고 있다. 또한 그린 이노베이션이 IT 기술혁신과도 연계되면서 다양한 산업 분야가 창출되고 있으며, 각국은 석유고갈이 2030년 정도로 예측되고 있는 시점에서 녹색기술, 녹색 일자리 창출에 혈안이 되고 있다.

다섯째,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는 단순한 경기침체를 넘어 소비자들의 가치관과 행동양식의 커다란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제위기는 전 세계 경제성장의 하락과 함께 자산버블의 붕괴, 실업의 증가 등을 가져올 것이며, 이는 경제사회 메가트렌드의 변화를 통해 그 하위 개념인 소비자의 트렌드를 변화시킬 것이다. 먼저 실버소비 트렌드나 웰빙 트렌드는 세부시장의 변화가 예상되고, 친환경 트렌드나 신뢰에 대한 요구는 더욱 강화되고, 디지털 코쿠닝 및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N세대의 부상 등이 새로운 트렌드로 나타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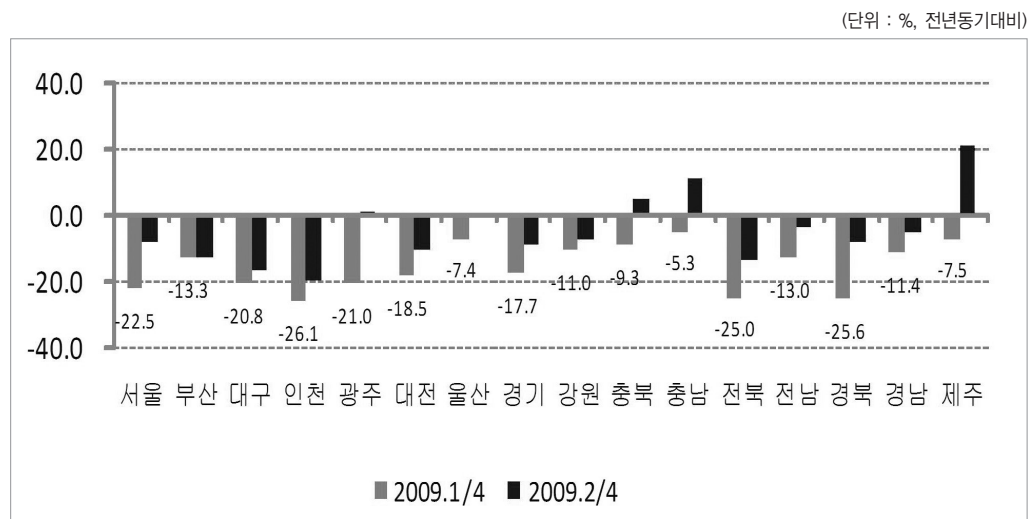
자료 : 정재영, 2009.

〈그림 1〉 경제위기와 소비자 트렌드

Ⅲ. 글로벌 경제위기와 충남의 경제현황

1. 지역내총생산

2007년 현재 충남의 지역내총생산은 55조 1,484억원으로, 전국총생산의 5.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00년에 비해 전국대비 구성비가 1.1%p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성장세를 시현하였다.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지방경제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광주, 대구 등 일부 지역의 산업생산이 30% 이상 급감하였으나 충남은 자동차, 반도체 및 IT기기, 화학분야의 수출주력산업이 집적되어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의 산업생산지수는 2009년 1분기는 전년동기대비 -5.3% 감소하였으나 2분기는 1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 통계청, KOSIS.

〈그림 2〉 시도별 산업생산 증가율

2. 경제활동인구

충남의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수는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여, 2008년 현재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수는 각각 996천명과 973천명으로 2000년 대비 각각 79천명, 82천명이 증가하였다. 2008년 전국의 경제활동참가율이 61.5%임에 비해 충남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3.7%로 충남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2%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의 실업률은 2000년 이후 2008년까지 3%이하의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여 왔으나 지역경제의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답보상태인 것은 고용 흡수력이 낮은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급속히 재편된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2009년 상반기 충남지역의 실업률은 3.2%로 나타나 전국(3.9%)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9년 6월 실업자수는 3만 6천명으로 전월에 비해 2천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금융위기의 실물경기에 대한 영향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3. 수출입 현황

충남의 수출액은 2008년말 현재 429억 3,621만 달러로, 전국 수출액 4,220억 732만 달러의 1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액은 295억 5,611만 달러로 전국 수입액 4,352억 7,474만 달러의 6.8%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의 수출입액 중 충남지역의 수출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132억 6,741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음에 비해, 충남의 무역수지는 133억 8,009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2006년부터는 전국의 무역수지액보다 충남의 무역수지액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충남 지역 수출입액이 국가 무역수지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8년 수출액은 전년대비 -3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2009년 상반기는 전년동기대비 -4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충남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산업구조 재편과정에서 수출제조기업이 주력기업으로 자리잡으면서 충남지역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대하여 지역경기가 국외여건 변화에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1〉 충남의 경제현황

(단위 : %)

구 분		전 국		충 남			
		2000	2008	2000	(전국대비)	2008	(전국대비)
인구 (명)		47,732,558	49,540,367	1,921,604	4.0%	2,018,537	4.1%
GRDP (십억원)	당해년가격	603,733	983,030	29,277	4.8%	55,148	5.9%
	1인당GRDP(천원)	12,843	20,287	15,579	121.3%	28,482	140.4%
사업체수(개)		3,013,417	3,189,181	119,149	4.0%	127,434	4.0%
수출입 (백만달러)	수 출 액	172,268	422,007	16,991	9.9%	42,936	10.2%
	수 입 액	160,481	435,275	9,978	6.2%	29,556	6.8%
	무역수지	11,786	-13,267	7,013	59.5%	13,380	-100.8%
경제활동인구 (천명)	15세이상인구	36,186	39,598	1,459	4.0%	1,564	3.9%
	경제활동인구	22,134	24,347	917	4.1%	996	4.1%
	취 업 자	21,156	23,577	891	4.2%	973	4.1%

자료 : 통계청, 지역내총생산,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 GRDP 및 사업체수는 2008년 자료가 공표되지 않아 2007년 자료임.

4. 산업구조

2000년 충남의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서비스산업이 40.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 38.2%, 농림어업 13.5%의 구성비를 점유하였으나 2007년 현재 서비스산업의 비중은 40.7%에서 38.8%로 1.9%p 낮아진 반면, 제조업 비중은 38.2%에서 45.8%로 무려 7.6%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에서의 부가가치별 기준 비교우위를 갖는 산업(LQ 1.0이상)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2.2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1.54),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제조업(1.48),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1.23) 등이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제조업 업종별 부가가치 연평균 증감률은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28.2%),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23.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

〈표 2〉 충남 제조업의 비교우위산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5			2006			2007		
	부가가치	전국대비 비중	특화지수	부가가치	전국대비 비중	특화지수	부가가치	전국대비 비중	특화지수
식료품	1,918,291	12.85	1.56	1,931,405	12.92	1.41	2,022,360	12.50	1.34
음료	215,750	5.20	0.63	232,809	5.72	0.62	219,364	4.96	0.53
섬유제품	300,539	3.85	0.47	268,062	3.74	0.41	291,560	4.32	0.46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83,643	1.18	0.14	56,512	0.77	0.08	43,607	0.56	0.06
가죽, 가방 및 신발	12,460	0.76	0.09	15,116	0.93	0.10	19,009	1.18	0.1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45,296	3.00	0.36	45,868	2.97	0.32	46,827	2.68	0.29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529,325	9.95	1.21	531,828	10.11	1.10	504,220	9.16	0.9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3,694	0.94	0.11	36,519	1.44	0.16	26,861	1.02	0.1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1,114,001	10.15	1.23	1,260,794	10.86	1.19	1,492,474	11.22	1.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2,243,028	10.41	1.26	2,608,936	13.09	1.43	2,437,349	10.80	1.1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799,841	14.49	1.76	917,561	15.40	1.68	921,315	13.81	1.48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1,249,859	8.39	1.02	1,217,317	8.00	0.87	1,426,040	8.88	0.95
비금속 광물제품	1,752,749	16.33	1.98	1,989,495	18.50	2.02	2,323,014	20.81	2.23
1차 금속	1,271,185	4.99	0.61	1,338,110	5.29	0.58	1,501,586	5.65	0.6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794,752	4.84	0.59	900,344	5.13	0.56	1,129,261	5.68	0.6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7,028,687	10.53	1.28	8,919,079	12.83	1.40	10,381,585	14.42	1.54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137,161	3.40	0.41	146,290	3.25	0.36	225,307	4.34	0.46
전기장비	905,711	7.06	0.86	937,030	6.82	0.74	979,867	7.18	0.77
기타 기계 및 장비	1,344,173	5.78	0.70	1,661,452	6.52	0.71	1,666,819	5.82	0.62
자동차 및 트레일러	3,296,627	10.00	1.22	4,104,091	11.17	1.22	4,455,746	11.46	1.23
기타 운송장비	27,799	0.25	0.03	44,884	0.31	0.03	38,097	0.20	0.02
가구	200,494	7.37	0.90	280,618	9.32	1.02	217,920	6.93	0.74
기타 제품	32,922	1.94	0.24	28,878	1.74	0.19	26,947	1.53	0.16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 각 년도.

업(21.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19.2%),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17.1%) 순으로 빠르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경제위기의 지역경제에 대한 여파는 인프라, 산업구조, 혁신역량 등 지역간 개발격차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외부충격에 대한 흡수력과 대응력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동차, 반도체 및 IT기기, 화학분야의 수출주력산업이 집적되어 있는 충남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판단된다.

IV.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충남의 산업발전전략

1. 광역경제권 차원의 개방형 기술혁신체제 구축

광역경제권은 글로벌 경쟁의 단위가 국가에서 지역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부상한 지역 발전전략으로 기존의 행정구역단위의 정책을 넘어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해 인접 지역들을 기능적으로 통합하여 인프라 구축, 산업지원, 지역개발 투자의 시너지효과 제고를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이다. 정부의 광역 구상은 인구와 경제규모, 노동시장, 중추도시, 지역적 동질성 등과 함께 정책 추진상의 효율성을 고려해 인접 행정구역을 5+2 광역경제권으로 편성하고, 광역경제권 발전계획과 30대 선도 프로젝트, 그리고 광역 선도산업 프로젝트로 구현 중에 있다. 또한 사업 추진을 위한 법률 개정이 완료되었고, 추진체계 구축과 선도산업 프로젝트 협약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 광역경제권 출범이 가시화되고 있다.

광역경제권 사업은 지역단위 또는 부처별 정책 및 사업들이 산발적으로 무분별하게 추진함으로써 발생하는 중복투자 문제를 조정하고, 행정구역단위를 벗어나 각 지역의 기능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제고하고, 기존 시설의 재조정과 통폐합을 통해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경제권 정책은 기존의 혁신인프라와 지원프로그램을 고려하지 않고, 새로운 조직과 사업들을 추진함으로써 또 다른 중복투자 문제를 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축적된 역량을 약화시킴으로써 지역경제 질서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광역사업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폐쇄적인 기술혁신체제를 벗어나 개방형 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광역경제권 차원에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보다는 기 구축된 혁신인프라와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광범위한

탐색을 전개하여 기존 혁신역량의 연계를 강화하고, 사업주체간 개방형 네트워크의 조기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정책의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사전 기획단계에서부터 연구개발, 사업화, 성과확산에 이르기까지 개방형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예를 들면, 연구개발사업은 연구개발, 기업지원, 인력양성, 기반시설 구축 등을 연계한 통합형체제로 추진하는 동시에 다양한 혁신주체들이 모여 시너지 창출을 목표로 자발적인 산학연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환경조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2. Green 기술과 IT 기술의 융합화를 통한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우리나라는 지난 수년간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세계는 전례가 없는 경제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위기 뒤에는 항상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이 출현하면서 산업의 구조조정 기회를 제공하였다. 1930년대 대공황 뒤에는 군수산업이 1997년 IMF 이후에는 IT산업이 출현하였고, 2001년 IT 버블붕괴 후에는 금융산업이 성장동력으로 등장했다. 2008년 이후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녹색성장이 그러한 위치를 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기반경제사회가 성숙되면서 산업 및 기술간 융복합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세계의 무한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러한 산업의 융합화 추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적극 육성하고 연구개발성과를 IT주도로 BT, NT, ET 기술과 융합시켜 새로운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21세기는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고갈되어 가는 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 창출과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재앙을 막아야하는 절체절명의 시기에 와 있고, 21세기의 새로운 에너지 창출을 선도하는 국가가 세계경제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충남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화산업인 IT 산업을 활용하여 산업의 녹색 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체별로 역할분담에 의한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고, 지자체는 지역특성에 맞는 녹색성장전략을 수립·추진하여야 하고, 기업들이 블루오션을 개척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투자와 기업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3. 지역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리제도 개선

지역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기관과 개별 정책을 집행하는 중앙부처가 상이하고, 재원배

분에 대한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어, 대부분의 지역사업들이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고, 다양한 지역정책들간 연계성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다양한 지역의 정책들이 전체적인 시각에서 추진되지 못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정책들의 성격과 목적을 명확히 하고, 정책간 상호 연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조정조직의 역할을, 지방정부는 지역정책을 통합관리기구인 지역발전협의회의 조정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방발전연구원 및 테크노파크와 같은 산업관련 전문기구에 지역사업들에 대한 종합평가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에 대한 정보 수집과 정확한 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고,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조직에서는 장기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사업들을 심층 분석하고, 기획·운영·평가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신뢰에 바탕을 둔 산학연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전반적인 연구기획 및 평가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4. 지역의 자율성 및 기획능력 제고

우리 경제는 규모가 확대되면서 중앙정부 모든 부문을 통제, 관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진입해 있고, 글로벌 경쟁단위가 국가에서 지역으로 전환되면서 지역정책에 있어서도 개별 지역의 특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추진의 비효율성이 점차 커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재원을 포함한 권한과 책임을 지방으로 점차 이양하여 지자체 스스로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의 자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는 지역적 목적 하에서 광역시도에서 이루어지는 산업육성 및 소득증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책 기획 및 집행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역의 기획·관리능력이 미흡하다는 것이 자율성 제고와 역할 증대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는 지역의 내생적 발전전략을 스스로 수립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테크노파크 및 지방발전연구원 등 지역의 전문기구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식창출기반과 인적자원 확보 분야에 투자를 집중하고, 다른 분야에 대한 과도한 투자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V. 결 론

이번의 금융위기는 전 세계 실물경제의 침체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경제사회적인 큰 충격을 가하면서 한국사회의 메가트렌드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침체를 넘어 기존 사고의 틀과 고정관념의 대변화를 통해 사회전반에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급격한 경제사회적인 변화 속에는 항상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한 국가나 지역은 이러한 경제사회적인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처하면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면서 승자가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패자가 될 것이다.

지역정책도 급변하는 경제사회의 변화에 대처하고 세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글로벌 메가트렌드의 변화에 대처하고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지역의 경제발전단계에 따른 성장추세, 산업구조, 혁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거의 단순한 성장위주의 중앙주도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혁신체제 구축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구역단위를 벗어난 광역경제권 차원의 개방형 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하고, Green기술과 IT기술의 융합화를 통한 녹색산업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간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역사업들의 종합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의 미래와 글로벌 미래 트렌드를 연구하여 지역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전략연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조직의 기능을 강화하며, 지식창출 기반과 인적자원 확보에 투자를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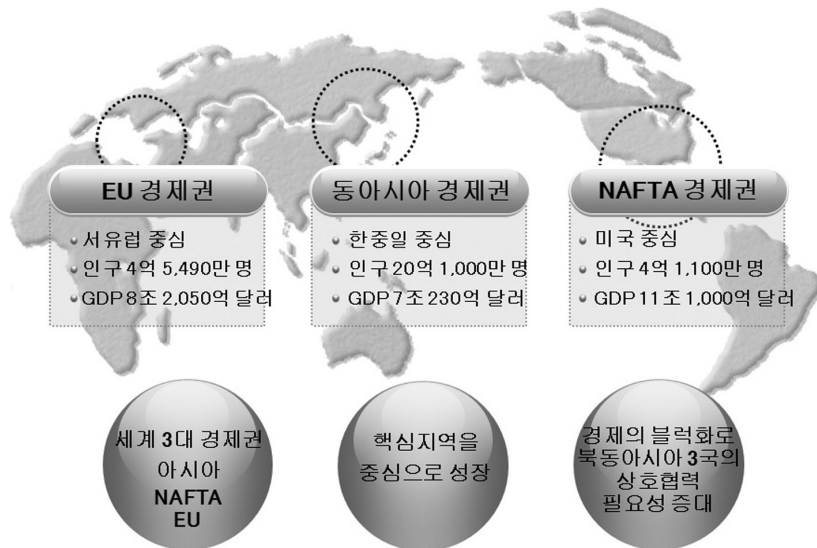
참고문헌

- 김종년 외, 「최근 위기에 빛난 기업의 교훈」, CEO Information 제717호, 삼성경제연구소, 2009.
 박용규, 「지방 주도의 경제활성화 과제」, SERI 경제 포커스, 제246호, 삼성경제연구소, 2009.
 배상근, 「선진경제로의 도약방안 모색」, 한국경제연구원, 2009.
 이지평,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을 헤쳐가려면」, LGERI Report, LG경제연구소, 2009. 8.
 이지훈 외, 「녹색성장시대의 도래」, CEO Information, 제675호, 삼성경제연구소, 2008.
 임혜경·황정애, 「위기 이후 한국 사회 메가트렌드의 변화」, KARI CEO Report,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2009. 11.
 정재영, 「경제위기 이후 소비자 트렌드의 향방」, LG Business Insight, LG경제연구소, 2009. 4.
 정재영, 「혁신의 길은 하나뿐인가」, LG Business Insight, LG경제연구소, 2008. 7.
 최윤기 외, 「한국경제의 발전경로와 지역정책」, 산업연구원, 2007.
 최홍, 「광역경제권 출범과 지역 기업의 대응과제」, SERI 경제 포커스, 제252호, 삼성경제연구소, 2009. 7.
 한국경제연구원, 「이노베이션 한국을 위한 국가 구상」, 2008.
 한국은행, 「충남지역 경제구조의 특징과 발전방향」, 지역경제 조사연구자료, 2008.
 한국은행, 「최근의 지방경제동향」, 2009. 5.
 황인성 외, 「6대 이슈로 본 2009년 하반기 경제」, CEO Information, 삼성경제연구소, 2009. 7.
 황인성, 「집재성장을 추이와 부진의 원인」, SERI 경제포커스, 삼성경제연구소, 2009.

강영주 | 대전발전연구원 연구위원

I. 머리말

경제자유구역 출범의 모태가 된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 구상은 중국의 WTO 가입 이후 동아시아 경제권의 출현으로 시작되었다. 일본과 중국 사이에 위치한 한국의 지정학적 여건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중국경제의 부상이라는 위협요인을 기회요인으로 전환하겠다는 발상을 통해 비즈니스 친화적 환경조성의 수단으로 제시된 것이 경제자유구역 정책이다.



〈그림 1〉 동아시아 경제권의 성장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이 출범한 것은 2002년 12월 30일 경제자유구역법의 제정에 기인한다. 2003년 7월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가 출범하였고, 동월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이 창설되

었다. 이에 따라 초창기 경제자유구역으로 2003년 8월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었고, 동년 10월에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이 잇따라 지정되었다. 2007년에는 황해경제자유구역과 함께 새만금,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이 새롭게 지정되어 현재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2차로 추진된 3개 지역의 경우 아직 개발초기로 성과를 가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나 1차 조성된 3개 지역의 경우, 현재까지의 경제자유구역이 중앙정부차원에서 강력한 정책의지가 부족하고, 추진체계가 확립되지 못하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경제자유구역정책이 당초에 예상했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직접투자유치의 필수조건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는 경제자유구역이 양적인 면에 있어서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개념에 있어서도 단순 항만이나 공항을 통한 물류중심의 기능으로부터 제반 첨단 산업집적지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외국인투자유치에 결정적인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던 경제자유구역법이 2009년 2월 1일 특별법¹⁾으로 개정 공포됨으로써, 각종 규제완화 및 일원행정지원시스템의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역의 기대는 한층 더 커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유치의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중앙정부로부터의 추가예산 확보를 위한 각 지자체간 경제자유구역유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유치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은 예산보다는 규제완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에는 항만이나 공항의 활성화 정도가 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을 결정했다면, 앞으로는 개발업자의 확보에서부터 성패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무리한 유치와 인위적인 개발보다는 향후 잠재력을 가늠하여 경제자유구역을 유치하고 또한 잠재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의 선행이 필요할 것이다. 향후 생산인력의 확보를 가능케 하기 위한 교육 및 의료시설 등과 정주여건 구비의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는 이유이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지식창조형 경제특구 개발 및 대중국 수출입 전진기지 육성이라는 핵심 목표 하에 충남과 경기도 공동 개발하는 총 5,505만㎡의 지역으로, 2007년 지정이 확정되어 이듬해인 2008년부터 개발에 착수하여 2025년까지 충남 당진군 송악지구, 아산시 인주지구, 서산시 지곡지구와 경기 평택시 포승지구, 화성시 향남지구의 5개 지구에 첨단산업 기능과 국제물류

1) '08.9.24 발의된 경자법이 심의의결됨으로써 특별법으로 법제명이 변경되어, 각종 인허가 관련 기존법의 상위법으로 작용함으로써 그동안 지적되어왔던 실질적 규제완화 및 일원적 지원시스템의 구축이 가능하게 되었고, 기반시설에 대한 전액 국고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 외에도 실시계획의 승인권이 전면적으로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었고, 공무원 파견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다.

기능을 중점 개발되고 있다.

당초 물류를 중심으로 하는 타 경제자유구역과는 차별화되게 '환황해권 첨단기술산업(High-Tech Industry)의 국제협력거점 조성'을 통한 생산시설과 R&D기반, 첨단산업클러스터, 지식네트워크가 복합된 '국제수준의 첨단기술산업 클러스터 육성'과 '대중국 수출입 전진기지 및 부가가치물류 육성'을 개발목표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도입기능 또한 첨단산업이 총 개발면적 중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개발계획이 수립되었다. 또한 총 사업비 중 국비의 비중이 현격하게 적은 것도 황해경제자유구역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사회적인프라가 상당부분 건설되어 있었고, 경제자유구역지정 이전부터 외투기업의 투자가 국내에서 최고로 활성화된 지역이었기에 가능한 도전이라 할 수 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시작된지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성과를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당초의 계획을 돌아보고, 전략상 혹은 추진체계상 수정해야할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책·제도상 보완해야할 점을 추려내고, 타 지역의 사례를 검토하여 사업 추진 상에 있어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해야 할 필요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08년부터 시작된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당초계획과의 정합성 및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검증하고,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과, 타 지역 사례를 통한 향후의 발전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국내 경제자유구역 추진현황²⁾

1. 경제자유구역 지정 현황

현재 국내 경제자유구역은 '08년 9월 기준으로 1차 3개구역('03년 :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2차 3개구역('08년 :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등 총 6개 구역이 지정·운영 중이다. 규모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이 209km²로 가장 크며, 대구경북이 가장 작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경기 2곳, 충남 3곳을 대상지로 하여 2025년 개발이 완료되도록 되어 있다

2) 2007년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은 개발초기로 개발사업의 진척도가 낮고 자료수집에 어려움이 있어 2003년 지정 경제자유구역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음.

〈표 1〉 국내 경제자유구역 지정현황

명 칭	위 치	개발완료시기	면적	중점유치업종
인천(03.8지정)	인천	'20년	209km ²	비즈니스, IT·BT, 국제금융, 관광레저
부산진해(03.10지정)	부산, 경남	'20년	104km ²	해운물류, 자동차, 기계, 조선
광양만권(03.10지정)	전남, 경남	'20년	90km ²	해운물류, 소재산업
항해(08.5지정)	경기, 충남	'25년	55km ²	자동차부품, IT·BT, 부가가치물류
대구경북(08.5지정)	대구, 경북	'20년	39km ²	교육, 의료, 패션, IT, 부품, 소재
세만금군산(08.5지정)	전북	'30년	66km ²	자동차, 조선, 부품소재, 환경친화형 산업

출처: 경제자유구역기획단 홈페이지(www.fez.go.kr)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운영 및 투자자 지원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경제자유구역위원회(경제자유구역기획단)가 정책을 수립하고, 지자체(경제자유구역청)는 개발·외자유치 등 사업을 추진한다.



〈그림 2〉 경제자유구역 지정 절차

2. 인천경제자유구역(Incheon Free Economic Zone)

1) 일반현황

2003년부터 개발이 시작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송도, 영종, 청라(서북부 매립지) 등 3개 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면적은 209km², 총사업비 14조 7천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원 계획상 총사업비 중 민자 및 외자유치 비중은 6.7%에 불과한 공공 주도 개발사업으로 출발하였다.

〈표 2〉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개요

구 분	개 요
면 적	총 209km ²
구 성	송도지구 : 53km ²
	영종지구 : 138km ²
	청라지구 : 18km ²
계획인구	49만 7천명
총사업비	14조 7,610억원(기반시설 조성비)
사업기간	2004~2020년(1단계 2008년, 2단계 2020년)



주 : 총사업비는 국고지원(21.4%), 지자체(45.7%), 민자·외자(6.7%), 한국토지공사(26.2%) 등으로 구성

2) 투자유치 현황

인천경제자유구역의 2009년 7월 말 현재 외국인 투자현황은 계약실적만을 살펴볼 때 개발 사업 8개, 입주기업 22개사, 학교/연구소 2개소로 총 32건이 성사되었다. 그 중 은행, KOTRA 등 관계기관에 신고된 FDI 신고액은 612.1백만달러이다. MOU체결단계에 있는 투자는 입주기업 10건을 비롯해 총 19건으로 125.5백만달러를 신고하였다.

〈표 3〉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 현황

구 분	계약+MOU	계 약				M O U			
		계	개발사업	입주기업	학교/연구소	계	개발사업	입주기업	학교/연구소
실적/건	0	32	8	22	2	19	2	10	7
FDI신고액*	0	486.6	206.5	280.1	-	125.5	100	25	0.5
총사업비**	0	53,969.1	52988.6	980.5	-	10,297.2	8,000.0	1,455.0	842.2

* FDI신고액(Foreign Direct Investment) : 은행, KOTRA 등 관계기관에 신고된 외국인 직접투자금액

** 총사업비(Total development amount) : 프로젝트 완공에 소요되는 모든 금액

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www.ifez.go.kr)

최근 계약된 학교 및 연구소는 2008년 뉴욕주립대 Stony Brook의 IT연구원 및 교육프로그램과 2009년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의 생명과학연구원 및 교육프로그램, 유타대/인하대병원의 DDS 및 신의료기술 공동연구소 설립이 있으며, 2010년 완공예정이다. 이 외에도 MOU

체결된 기관으로 퍼듀대/경상대 국제생명자원응용연구원, IBM/가천길 바이오토리서치복플렉스, 미주리대, USC, 조지메이슨대, 텔라웨어대, 캐나다 VIPSS대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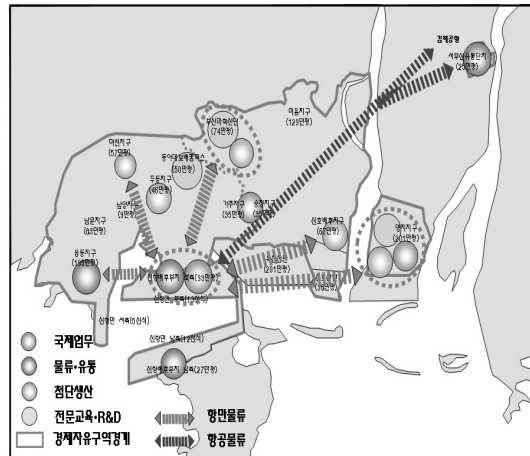
3.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1) 일반현황

인천경제자유구역과 같이 추진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및 경남 진해시 일원에 위치하고 있다. 신항만지역, 명지지역, 지사지역, 두동지역, 웅동지역 등 5개 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04.8km²중 신항만지역이 11.3km²를 차지하는 항만물류 중심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조성되었다. 총사업비 중 기반시설 조성비 7조 7천억은 국고지원 27.9%, 민자·외자 32.1%로 구성되어 있다.

〈표 4〉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개요

구 분	개 요
면 적	총 104.8km ²
구 성	신항만지역 : 11.3km ²
	명지지역 : 13.0.4km ²
	지사지역 : 37.8km ²
	두동지역 : 21.1km ²
	웅동지역 : 21.6km ²
총사업비	7조 6,902억원(기반시설 조성비)
사업기간	2004~2020년(1단계 2006년, 2단계 2010년, 3단계 2020년)



주 : 국고지원(27.9%), 지자체(40%), 민자·외자(32.1%) 등으로 구성

2) 행정조직 및 예산

행정조직은 청장관, 행정개발본부와 투자유치본부의 2본부체제로 되어있고, 행정개발본부에 3부, 투자유치본부에 유치1실, 유치2실, 유치지원실 등 3실이 있다. 행정개발본부는 다시 공보관과 8개과로, 투자유치본부는 10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타 옴부즈만과 투자유치 자문관이

있다.

'09년도 예산은 총 116,068백만원 중 부산광역시 15,000백만원, 경상남도 34,962백만원, 국비 66,106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08년도에 비해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다.

3) 투자유치 현황

'08년말 현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 건수는 45건으로 총 유치금액은 51.2억불을 기록하였다. '08년 한해에는 3건에 3.2억불을 실현하였다. 분야별로는 첨단산업이 19건(13.4억불), 관광레저 2건(6.1억불), 교육 1건(0.4억불), 신항만건설 2건(25.1억불), 항만물류 21건(6.2억불) 등이다. 기 투자 실행된 사업은 30건 43.7억불이다. 국내기업으로는 신호산단 86개 업체와 부산과학산단 165개 업체가 있다.

〈표 5〉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 현황

분 야	투자금액	투자기업
첨단산업 (19건)	13.4억불	지사외투지역(4.1억불) : ENK 등 12개 기업 신호산업단지(6.1억불) : 르노삼성 등 4개 기업 화전지구(2.8억불) : 케이피이, 태광 과학산단(0.4억불) : 태경티엔지
관광레저 (2건)	6.1억불	남산지구(2억불) : SnowBox 웅천지구(4.1억불) : Emerson Pacific/ Morgan Stanley
교육(1건)	0.4억불	부산테크노파크(0.4억불) : FAU
신항만건설 (2건)	25.1억불	북측터미널 건설(20억불) : DPW/PSA 남측터미널 건설(5.1억불) : Bouygues / Terminal Links S.A
항만물류 (21건)	6.2억불	신항 북측배후물류단지 1,2,3단계(1.9억불) COSCO 등 12개사(4.3억불)

출처: 2009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주요업무계획,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www.bjfez.go.kr)

4) '09년 주요사업계획

'09년 주요사업계획으로는 창의적인 조직경쟁력 강화, 협력체제 구축과 BJFEZ 브랜드 제고,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지구별 개발사업 가속화, 투자인프라 구축과 고품격 도시 구현, 전략적이고 차별화된 투자유치 등의 6가지 시책이 있다. 특징적인 사업으로는 부산과 경남의

두 개 지역에 걸쳐있는 특성상 양 자치단체 파견 직원간의 화합은 중요한 사항이며 이를 위해 직원화합행사와 시도 구분배치를 지양하는 합리적인 인사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추가지정으로 본격적인 경쟁체제 돌입에 따라 기능별 조직을 유연하게 운영토록 하고 있다. 다양한 홍보와 함께 민원후견인으로 10개분야 12명을 두고 민원1회 방문 처리를 원칙으로 찾아가는 이동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토지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투기적 거래 행위를 방지하고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를 추진하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강화하고 있다. 부품소재 전용공단의 투자유치를 위해 일본 부품소재산업 투자유치활동과 개별기업방문 상담을 수시 전개하고 있고, 외국 대학 및 병원 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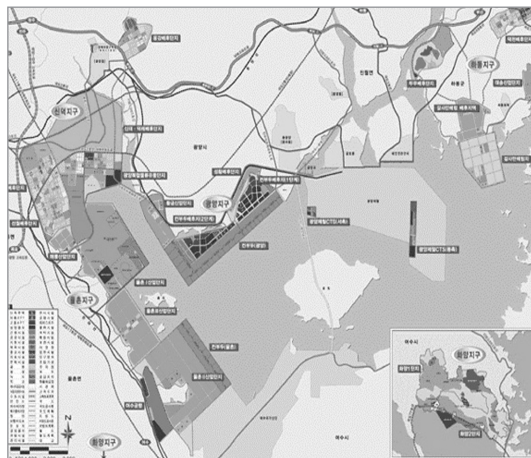
4.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1) 일반현황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은 전남의 여수, 순천, 광양과 경남의 하동에 입지하고 있으며, 총면적 95.56km²에 울촌·광양·신덕·하동·화양 등 5개 지구로 구성되어 있다. 총소요예산은 15조 8천억원으로 국비 29%, 지자체 30%, 민간·외자 41%로 구성되어 있다.

〈표 6〉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개요

구 분	개 요
면 적	총 95.56km ²
구 성	울촌지구 : 28.16km ²
	광양지구 : 15.22km ²
	신덕지구 : 25.08km ²
	하동지구 : 12.27km ²
	화양지구 : 9.99km ²
총사업비	15조 8,234억원(기반시설 조성비)
사업기간	2004~2020년(1단계 2006년, 2단계 2015년, 3단계 2020년)



주 : 국고지원(29%), 지자체(30%), 민자·외자(41%) 등으로 구성

2) 행정조직 및 예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1청장, 2본부, 6부 8과 1관 1사무소에 총인원 15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과 같이 행정개발본부와 투자유치본부의 2개 본부체제로 구성되어 있고 본부별로 3개부로 구성되어 있으나 투자유치본부에 투자정책부와 함께 제조물류부, 첨단산업부가 있는 것이 다르다.

2008년 GFEZ의 총예산은 99,573백만원으로 일반회계 25,567백만원 중의 자치단체부담금이 전남 3,628백만원, 경남 590백만원이고 국고보조금이 21,134백만원(82.7%)이고, 특별회계는 사업수입 55,993백만원과 국고보조금 17,089백만원이 있다. 지자체부담금은 전남/경남이 면적비율 86:14로 분담하고 있다.

3) 투자유치 현황

2009년 7월말 현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 건수는 총 89건으로 이 중 투자실현된 건수가 80건이고 MOU 체결단계의 유치가 9건이다. 금액으로는 총 8,135백만달러로 이중 투자실현이 6,061백만달러, MOU 체결이 2,073백만달러이다. 89건 중 외투기업은 36건으로 3,007백만달러를 기록하고 있고, 국내기업은 53건에 5,127백만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2005년까지는 개발사업자를 중심으로 12개사 3,399백만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2006년 7개사 508백만달러, 2007년 18개사 994백만달러, 2008년 신규 28개사, 증액 1개사 803백만달러로 매년 지속적으로 기업유치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표 7〉 GFEZ 투자유치 현황

구분	계			외투기업			국내기업		
	합계	투자실현	MOU등 체결	소계	투자실현	MOU등 체결	소계	투자실현	MOU등 체결
건수	89	80	9	36	30	6	53	50	3
금액	8,135,060	6,061,860	2,073,200	3,007,500	2,502,500	505,000	5,127,560	3,559,360	1,568,200

출처 : GFEZ 투자유치 실적,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홈페이지(www.gfez.go.kr)

외투기업만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2006년 총 7개사 중 3개사 신고된 외자규모 1억달러에서, 2007년 4개사 신고된 외자규모 6백만달러, 2008년 17건 신고된 외자규모 11백만달러로 개발사업이후 2007년 성과를 내지 못하였으나 2008년 이후 큰 폭으로 외자기업유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8〉 GFEZ의 연도별 투자유치 실적

※계약일 기준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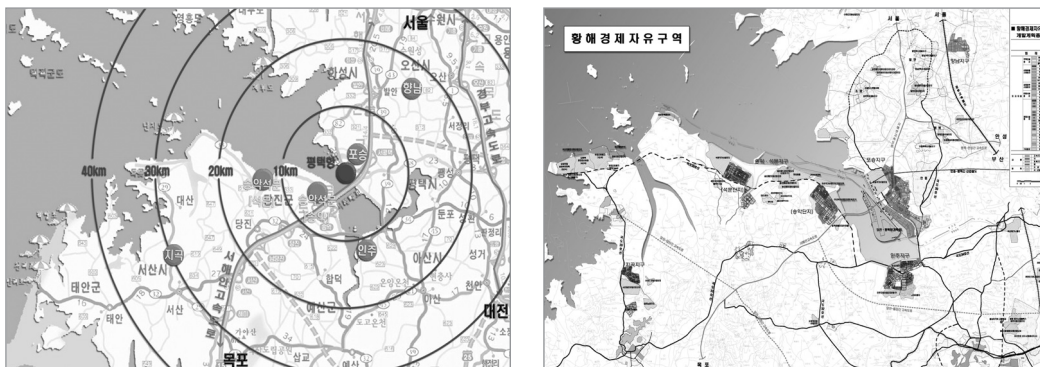
구분	유치건수	투자금액(천\$)		
		총 사업비	외자	FDI 신고금액
계	80개사	6,061,860	632,939	532,765
~05	12개사	3,399,900	468,433	413,433
06	7개사	508,300	101,104	100,847
07	18개사	994,890	7,134	6,859
08	신규 28, 증액 1	803,100	48,268	11,586

Ⅲ.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추진현황과 과제

1. 황해경제자유구역의 기본현황

황해경제자유구역은 평택·당진항 인근의 충남 및 경기 지역 일원으로 충남 당진군, 아산시, 서산시 일원과 경기도 평택시, 화성시 일원에 조성되어 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총 면적 5,505.1만㎡ 중 개발면적이 5,263.1만㎡, 유보지 242만㎡로 구성되어 있고, 지역별로는 포송지구가 2,015㎡로 가장 넓다. 기능별로는 공공시설이 50.5%, 산업유



〈그림 3〉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위치

통이 24.7%, 주택이 12.4%, 관광 7.1%, 상업업무 5.2%로 공공시설과 산업유통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타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산업부문은 광양을 제외하면 부산이 13.8%, 인천 2.6%로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산업비중이 이들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을 알 수 있다. 사업비 구성에 있어서도 총사업비 74,458억원 중 국비 475억원, 지방비 4,770억원, 민·외자 69,204로 대부분이 민자 및 외자로 구성되어 있어 기존의 경제자유구역과는 추진개념과 전략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25년까지로 총 18년으로 현재 1단계 사업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되고 있다.

〈표 9〉 경제자유구역 구역별 면적

지 역	송 악	인 주	지 곡	포 승	항 남	합 계
면적(만㎡)	1,303	1,303	354	2,015	531	5,505 (개발 5,263; 유보지 242)

* 공공시설(50.5%), 산업유통(24.7%), 주택(12.4%), 관광(7.1%), 상업업무(5.2%)

2. 사업추진 현황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2008년 7월 22일 출범한 이래 동년 12월 당진 송악지구에 대하여 당진군·한화·산업은행이 설립한 (주)당진테크노폴리스 개발사업 이행협약을 체결하여 실시 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2009년 5월 14일 한국토지공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10월까지 최종 개발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에 있다. 화성 향남지구와 서산 지곡지구는 사업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개발사업자를 다시 선정할 계획이다.

투자유치분야에 있어서는 2008년 12월 외투기업인 초청 투자설명회를 시작한 이래 상해 투자설명회 등 해외 설명회 3회, 세계적 부동산 및 산업박람회 참가 7회, 첨단산업 앵커기업 상담활동 156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 및 타겟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으로 대만, 중국, 일본, 미국 등의 6개사로부터 총 2억 8,800만불의 LOI(의향서)를 체결하였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 현황

- 대만 · 중국 · 일본 · 미국 등 소재 6개사
- 신재생에너지 E사 5천만불, LED R사 3천만불, 호텔운영 S사 2천5백만불,
물류 · 관광분야 G사 8천만불, 자동차부품 A사 1천5백만불
글로벌 유통분야 K사 8천8백만불 등 6개사 LOI 제출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역주민 순회 설명회 6회, 타경제자유구역 개발현장 주민 시찰 297명, 주민대표 75명 싱가포르, 중국 등 해외 경제특구 시찰 등을 실시하여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상생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IV. 황해경제자유구역의 발전과제

1. 첨단산업기술 중심 경제자유구역에 부합하는 투자유치전략의 수립

경제자유구역 건설 초기단계에서는 도시건설을 위한 국내외 투자기관 및 developer 유치에 초점을 맞춘 추진이 필요하다. 국내 투자기관 및 기업의 참여 또한 필수적인데, 이는 외투기업이 초기투자에 있어 단독투자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 국내 투자자와의 컨소시엄 등을 통해 투자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특히 황해EFZ의 경우 국비투자비중이 낮고 대부분을 민간투자에 의존하는 사업구조이기 때문에 개발업자 등 초기투자자의 확보가 성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지구별로 포승과 송악지구의 경우 개발업자가 양쪽 모두 국내사업체인 하나 개발업체의 선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곡과 인주, 향남 지구는 개발업체의 선정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 국내 개발업체들만이 사업추진에 관심을 보여 개발업체를 통한 외투기업 유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향후 첨단산업기술 중심의 외투기업 유치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며, 지역의 총체적인 투자유치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외투기업 유치에 있

어 가장 큰 홍보수단으로 작용하는 기 진출업체의 구전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근지역의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설명회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 기업에 대한 사후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외투기업의 유치에는 열을 올리면서도 사후 지원을 소홀히 하여, 장기적으로 외투기업 유치가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외투기업 유치는 떠들썩한 홍보보다는 기진출 기업을 통한 구전홍보가 유용할 수 있다.

당초 황해경제자유구역설립시의 전략과 같이 부가가치물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일본기업을 타겟으로 한 기업유치가 중요하며, 이들 기업의 유치를 위해서는 제품생산 혹은 밸류체인상의 전후방을 이루는 국내 기업의 동반 유치가 필요할 것이다.

외국인이 투자처를 결정할 때 생활환경이 경제적 환경에 못지 않게 중요한 투자 결정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해서는 최고 수준의 교육·의료·주거여건 제공이 필수적이다. 생활 환경 개선에 있어 핵심사업인 국제적 의료기관, 교육기관의 유치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들 기관유치를 위한 관련법률의 제·개정이 추진되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최근 기관유치에서 교육 및 의료기관 유치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호조건을 적극 홍보하고 경제자유구역 내외의 교육 및 의료환경 및 시장조성을 통해 기관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2. 각종 정부 및 지자체 계획과의 연계 추진

대중국시장의 확대에 따라 황해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는 충남 및 경기 내륙부를 포함한 중부권 경제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단순히 항만의 정비나 해당 구역의 활성화로 볼 것이 아니라, 지역전체의 핵심사업으로 위치시켜야 할 것이며, 여타 지역계획과의 연계관계를 꼼꼼히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도로망체계를 평택당진항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21세기 평택당진항이 대중국 수출입 주력항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기 중남부, 강원권, 동남권, 충청권의 수출입물류를 평택당진항으로 유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교통체계를 평택당진항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구축하고, 고속도로 개통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지역간선교통망을 조속히 확충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및 제3차 도종합계획 등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충남 도청 이전계획도 경제자유구역과의 역할 상생을 적극 고려해야 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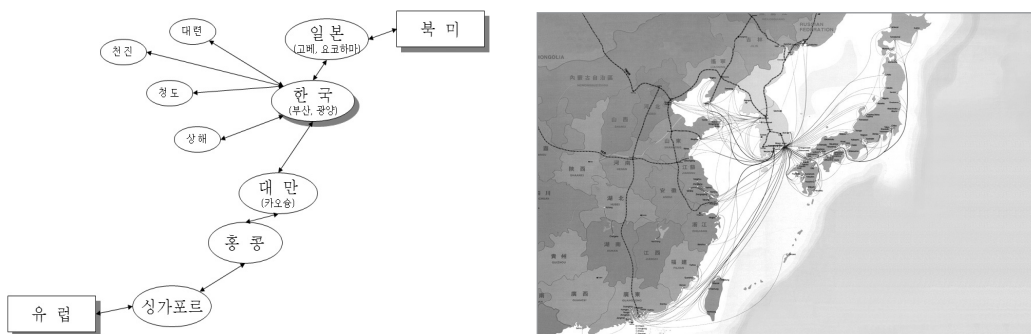
것이다. 향후 경제자유구역이 성장함에 따라 필요한 인력의 조달을 위한 우수 인력시장의 조성, 인근 지역의 생활의 질 향상, 의료 및 교육의 질 향상 등이 경제자유구역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향후 중국으로부터의 관광객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항만계획 및 각 지자체별 관광종합계획과의 연계도 필요할 것이다. 교통망을 중심으로 패키지 관광이 가능하도록 관광지를 테마별로 연결하고, 연계 교통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 정부의 핵심정책 중 하나인 녹색성장과의 연결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될 것이다. 산업의 유치 및 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경제자유구역의 각종 사업이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녹색성장계획의 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Greenport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평택당진항을 녹색항으로 테마화하여 개발하는 것도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투지유치협정서를 체결한 기업들 중 상당수가 녹색성장산업군에 속한 산업들이며 향후 녹색성장정책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대표적인 녹색항, 녹색산업지대가 될 수 있도록 인프라의 조성부터 생태환경의 구축, 녹색문화의 정착, 신규 전략 타겟팅 기업의 선정까지가 매칭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의 교육, 의료 등 서비스업개방 정책에 맞추어 규제완화의 테스트 베드가 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및 교육기관의 유치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고, 구체적인 전략과 지역차원의 인센티브가 제시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 조속한 항만확충 및 동남권 중계물류 거점의 조성



출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이정욱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강의자료 동북아 물류환경의 변화와 대응전략: 항만의 역할 2005.3.11

〈그림 4〉 전통적인 기간항로

우리나라의 항만물류는 국제 물류의 중계기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대부분의 항만시설이 부산 등 남해안을 중심으로 건설되었기 때문에 국내 물류 또한 부산항 등을 이용하는 구조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수도권에 대중국 물류까지도 비싼 물류비를 지불하면서 남해안을 통해 중국으로 이어지는 체계가 고착화되었다. 그러나 국내 산업의 대중국 의존 비중이 점점 커지면서 물류비 절감에 대한 효과성이 점점 커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서해안의 대중국 지근거리의 항만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커지게 되었다. 아래 표와 같이 한국의 총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4년 17.4%에서 2008년 21.7%로 높아졌고, 수입 또한 동기간 13%에서 17.7%로 증가하였다.

〈표 10〉 대중국 교역현황(통관기준)

(단위 : 천불)

년도	한국 총수출(A)	중국으로 수출 (B)	한국 총수입(C)	중국에서 수입(D)	집중도	
					B/A	D/C
2004	253,102,684	44,117,920	224,468,687	29,299,340	17.4	13.0
2005	283,462,131	55,140,160	261,238,264	33,884,410	19.4	13.0
2006	324,028,094	62,670,930	309,382,632	44,431,290	19.3	14.4
2007	369,976,726	74,650,310	356,845,733	56,726,420	20.0	15.9
2008	422,007,300	91,388,900	435,275,000	76,930,300	21.7	17.7

출처: <http://www.customs.go.kr>, 통관정보의 문, 무역통계

황해경제자유구역의 핵심거점을 이루는 평택당진항의 경우 대중국 교역량이 2007년에 비해 2008년도 평택항은 30.6%나 증가하였고, 당진항은 200%이상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경제자유구역 건설이 완료되고, 평택당진항이 당초의 계획대로 77선석으로 확충되게 되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대중국 수출입 증가와 함께 금년 5월 28일 개통한 대전-당진간 고속도로와 함께 현재 건설 중인 상주와 경상북도 영덕, 포항간 고속도로가 연결되면 동해안과 서해안간 4시간대 왕래가 가능해져 동해안 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이 용이해지게 되며 이에 따른 평택당진항의 수출입 기능이 급속하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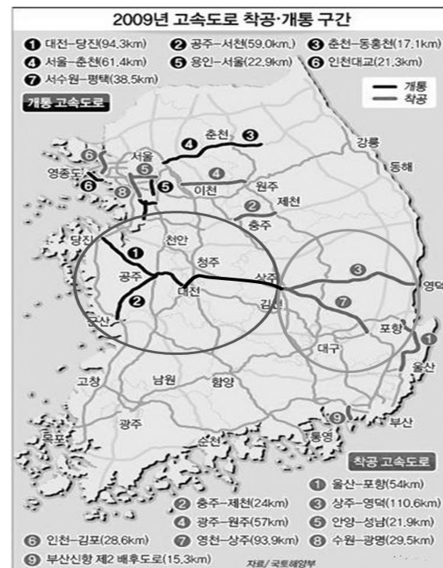
〈표 11〉 대중국 교역량의 확대

년 도	항 구	수 출		수 입	
		금액(천달러)	중량(톤)	금액(천달러)	중량(톤)
2007년	부 산 항	15,627,894	3,610,533	19,109,455	10,807,864
	인 천 항	5,889,300	3,446,167	17,624,575	16,078,140
	광 양 항	3,914,686	3,133,034	1,161,084	4,518,141
	평 택 항	4,978,264	825,158	3,222,899	3,742,071
	당 진 항	13,236	19,442	94,334	1,392,028
2008년	부 산 항	6,638,295	3,650,604	21,555,311	10,371,232
	인 천 항	7,120,125	2,239,723	20,232,092	13,500,068
	광 양 항	4,215,808	3,034,026	2,040,580	4,555,096
	평 택 항	6,503,422	913,609	3,904,715	3,465,693
	당 진 항	39,811	56,009	325,769	1,197,110

출처: 관세청, 수출입동향 12월호, 2008.12

따라서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충남과 경기지역만을 포함하는 지역내 무역정책보다는 영호남, 강원도, 중부내륙권 전체를 포괄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며, 이를 위해 향후 장기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내에 내륙권 대중국 무역을 총괄하는 무역관리기구 설치가 필요할 것이며,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것은 항만시설의 조속한 확충일 것이다.

동시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공주-대전 인근 지역과 상주 지역에 중계 물류 거점을 조성하여 물류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벌크 등 인바운드 화물의 물류, 제품 및 부품 등 아웃바운드 화물의 물류를 겸하는 대규모 중계물류 단지 건설을 통해 평택당진항의 수출 및 수입교역 활용도 증대될 것이며, 중계물류 단지 건설을 통해 효율적인 물류집배송이 가능해질 것이다.



출처: 김원배, 당진-대전, 서천-공주간 고속도로와 연계한 대전·충남 공동발전 방향

〈그림 5〉 대중국 교역량의 확대

4. 추진체계의 정비

효율적인 외투기업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과 관련된 기관간 역할분담체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경제자유구역청에 투자프로젝트별 담당자(PM)를 두고 투자유치활동을 체계적으로 주도할 필요가 있다. Invest KOREA의 전문가가 PM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투자유치담당자에 대해 경쟁력 있는 성과보상이 제시되어야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유능한 전문가를 유치하기 위한 합당한 보상은 외투기업유치의 첨병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청의 설립 취지에 맞도록 업무범위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즉, 현재수행 중인 업무를 재검토하여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등 직접 관련된 업무를 제외한 여타 업무는 기존 담당기관에서 처리하도록하여 자치권의 문제와 업무영역 중첩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을 통한 협력적 관계 모색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기타 경제자유구역활성화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역할은 제도 구비 및 경제자유구역들 간 조정으로 한정하고,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폭적인 자율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외국인투자 관련 기능을 일원화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야 할 것이다.

5. 국내기업 입주제한 완화 및 외자유치를 위한 혁신적인 제도 도입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되어 개발이 진행 중인 특정 산업단지의 경우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도 일정 면적에 대해 외국인기업전용단지나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국가가 토지를 매입해서 임대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산업단지의 외투기업 입주를 조기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 초기단계에서의 활발한 외투기업 유치가 향후 잇따른 외투기업 유치를 자극할 수 있으므로 초창기 외투기업 유치를 위한 제도 도입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외투기업의 경우 대부분의 투자가가 국내기업인과의 합작투자를 선호하고 있고 외국인만 투자하는 단독 산업단지보다는 내·외국인투자가가 함께 하는 산업단지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국내기업 입주제한을 완화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동일하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V. 맺음말

2003년 1차로 조성된 경제자유구역이 당초에 예상했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의 경제자유구역 유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다. 세계경제의 침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의 유일한 활로로 모색되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유치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은 지역의 필수조건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동안 외국인투자유치에 결정적인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던 경제자유구역법의 개정 등으로 각종 규제완화 및 일원행정지원시스템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역의 기대는 한층 더 커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유치의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중앙정부로부터의 추가예산 확보를 위한 각 지자체간 경제자유구역유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1차 조성된 경제자유구역 중에서도 인천의 기업유치 및 외국의료·교육기관 유치가 본격화 되고 있고, 여타지역 또한 2008년부터 눈에 띄게 기업유치가 활성화 되고 있는 것을 사례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다. 우리지역에 2007년 지정되어 2008년부터 개발에 착수한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기대 또한 점점 높아지고 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첨단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기능이 강화되었고, 사업비의 대부분을 민간 투자에 의존한다는 특수성을 갖고 출범하였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의 개발기간 18년중 겨우 1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성과를 논하기는 이른 감이 있으나, 당초의 계획과 상황변화를 통해 초창기 수립된 계획을 다시 한 번 되짚어볼 필요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을 둘러싼 제도적 변화, 국제여건의 변화, 국내여건의 변화 등을 토대로 황해경제자유구역의 향후 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였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을 둘러싼 상황변화로 인해 앞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은 핵심산업유치를 위한 효율적인 투자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정부 녹색성장 추진계획 등과의 정합성을 통하여 사업 추진 효과를 제고해야 하고, 평택당진항을 중심으로 한 항만 인프라와 인근지역 간선 교통망의 재구축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관련기관간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외자기업 및 국내기업 유치 관련 제도상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김원배, 2009.7, 당진-대전, 서천-공주간 고속도로와 연계한 대전·충남 공동발전 방향(대중국-충청권-영남권 연계를 중심으로), 대발연-충발연 연합세미나 자료집.
 대한상공회의소, 2007.3,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대한상의 정책보고서.
 신정철, 2005.3, 동북아 경제중심 전략과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개발방향,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개청 1주년 기념세미나 자료집 자료집.
 이정욱, 2005.3, 동북아 물류환경의 변화와 대응전략,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강의자료.

충청남도의 농촌개발사업 추진실태에 관한 공무원 및 전문가 의식 분석

조 영 재 |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박 지 혜 |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원

I. 서 론

우리나라의 농정방향은 식량생산과 농가소득 증대 등 농업부문 중심에서 최근 농외소득, 농어민복지, 농촌어메니티 등의 농촌개발부문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농촌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농촌개발사업의 추진에 있어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의 농촌개발사업은 그 추진과정에 있어 부처간의 협조와 연계성이 약하고, 이에 따라 중앙과 지방간의 역할분담체계가 불명확하고 시군지자체의 자율성이 미약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또한,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유사정책을 집행하는 부처들이 정책에 따라 농촌지역을 분할하여 관리함으로써 농촌지역 정책의 통합성이 결여되고, 동일 부처내의 사업일지라도 사업간의 연계성이 작을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개발을 위한 중장기적인

비전 제시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홍성걸, 2006; 김정연 외, 2007).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방정부차원에서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강원도와 전라남도를 들 수 있다. 강원도는 「실사구시」, 「자력갱생」, 「자율경쟁」의 목표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추진체계 구축하여, 주민 스스로가 마을발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새농어촌건설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라남도는 농산어촌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전담부서로 「행복마을과」를 신설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 복원을 통한 농산어촌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비전으로 「행복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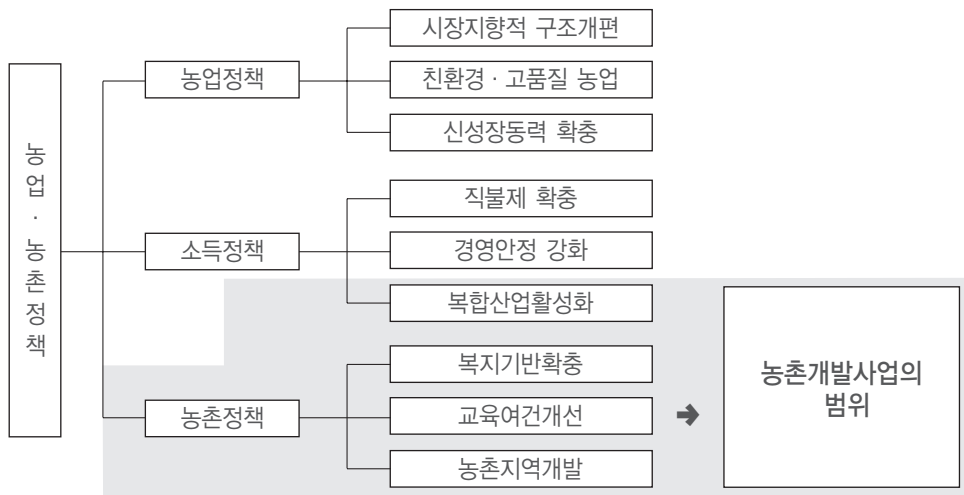
그러나, 충청남도의 경우, 아직까지 농정의 방향이 대부분 농업부문에 편중되어 있고, 농

촌개발을 추진하는 부서가 다양한 부서에 분산되어 있어 종합적인 추진기반이 매우 열악하다. 이에 따라 확대되고 있는 농촌개발부문에 대한 수요를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하는 단위사업 위주로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충청남도 농촌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적인 연구로서, 충청남도의 농촌개발사업 추진실태에 관한 공무원과 전문가들의 의식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Ⅱ. 농촌개발사업의 범위

농업·농촌정책은 크게 농업정책, 소득정책, 농촌정책으로 구분이 가능하며, 본 연구에서는 복합산업을 포함한 농촌정책을 농촌개발정책의 범위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삶의질향상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에 포함된 농촌개발 관련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그림 1〉 농촌개발사업의 범위

Ⅲ. 충청남도 농촌개발사업의 추진실태

1. 농촌개발 관련 조직

충청남도의 농촌개발 관련조직을 살펴보면 다양한 사업들을 여러 부서에서 분담하여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획관리실은 전체적인 정책수립을 포함하여 평생학습, 정보화마을, 지역균형발전 등을 담당하고, 경제통상실은 재래시장, 농공단지 등을, 자치행정국은 도시종합개발, 소도읍개발 등을,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향토문화축제, 농산어촌체험마을, 농어촌체육기반 등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농촌개발과 가장 밀접한 농림수산국은 농정기획, 농지·농업시설, 정주지원 등을, 복지환경국은 농어촌복지 및 의료서비스 등을, 건설교통국은 개발촉진지구개발, 농어촌도로 등을, 농업기술원은 농촌주민교육, 농촌자원소득화 등을 담당하고 있다.

농촌개발 관련 위원회에는 농정심의회,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정책자문교수단 농림수산분과위원회 등이 있다. 농정심의회는 위원장(도지사)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관계행정기관장, 생산자단체, 기타 관련 전문가 등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 심의, 농림사업 예산신청 등 지역 농정발전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법령에 의해 설치되어 있다.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는 역시 법령에 의해 설치되어 있으며, 도 농림수산국장, 정책기획관, 농업기술원장을 포함하여 농림어업인단체, 소비자단체, 기타 전문가 등 15인으로 구성되고, 주로 농어업·농어촌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과 그 실천계획(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을 제시하고 추진상황의 점검·평가를 담당하고 있다.

정책자문교수단은 충청남도 조례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주로 도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조언·권고·건의·심의를 통한 도지사 자문기구로서 농림수산분과위원회는 현재 5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농촌개발 관련 부서의 업무유사성을 살펴보면, 지역개발 차원에서의 업무의 내용이 농촌개발과와 균형발전담당관실, 도의새마을과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농촌체험관광부문만을 고려할 경우에는 농촌개발과와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국과 함께 관광산업과가 업무의 유사성을 갖고 있다. 또한, 주민교육 측면에서는 농업정책과와 농업기술원의 기술보급국, 기술개발국 그리고 교육협력법무담당관실이 유사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촌개발 관련 사업의 종합기획 및 정책수립에 있어 가장 연관성이 높은 조직으로는 농림수산국의 농업정책과와 농촌개발과를 들 수



* 농촌개발 관련실과 및 관련 주요업무만 제시함, () 숫자는 해당 조직의 전체 구성원 수

〈그림 2〉 충남도청의 농촌개발 관련조직 현황

있다. 그러나 농업정책과의 농정기획팀에서 농정총괄을 담당하나, 실제 하는 일은 각 과에서 올리는 예산이나 사업을 주로 취합하는 일에 머물고 있으며 대부분이 농어업 부문에

치중되어 있어 농촌정책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거나 총괄하는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고, 농촌개발과는 기획기능이 없이 단지 국비예산에 기초한 일부 농촌지역개발 관련 행정만을 담

당하고 있다. 즉, 충청남도에서는 현재 농촌개발 관련 업무가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고, 특히 농촌개발의 통합기획기능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는 부재한 실정이다.

충청남도는 농촌개발 관련 조직으로 도청 행정조직 이외에도 다양한 기관, 단체, 조직이

활동하고 있다. 공공기관 및 단체로는 농협 및 축협, 수협,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어촌공사, 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농업테크노파크, 충남개발공사 등이 있으며, 학계 및 연구기관으로는 충남발전연구원, 충남여성정책개발원과 충남대학교, 공주대학교 등의 농과계열대학 등이

〈표 1〉 충청남도 농촌개발 관련 부서별 업무유사성

부서	정책기획관	경제발전기획과	정보화담당관	농촌발전기획과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도의새마을과	문화예술과	관광산업과	체육청소년과	농업정책과	농촌개발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보건위생과	환경관리과	수질관리과	건설정책과	도로교통과	치수방재과	기술보급국	기술개발국
정책기획관																						
교육협력법무담당관																						
정보화담당관																						
균형발전담당관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도의새마을과																						
문화예술과																						
관광산업과																						
체육청소년과																						
농업정책과																						
농촌개발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보건위생과																						
환경관리과																						
수질관리과																						
건설정책과																						
도로교통과																						
치수방재과																						
기술보급국																						
기술개발국																						

* □ 업무유사성 있음, ■ 업무유사성 높음

있다. 그리고 민간농업인단체로는 대표적으로 영농4-H회, 농촌지도사회, 생활개선회 등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한국쌀전업농연합회, 한국화훼협회, 전국한우협회, 대한양돈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전국 새농민회,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 전국농민회 등이 있다.

2. 농촌개발사업 예산

2009년 현재 충청남도의 부문별 세출규모를 보면 농림해양수산부문이 18.8%로 사회복지 부문 다음으로 규모가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다. 2008년 대비 전체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율

은 감소하였지만, 금액은 전년도에 비해 230억 원이 증가하였다.

실과별 농촌개발 관련 사업비율을 보면 농촌개발과가 73.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농업정책과 69.6%, 농업기술원의 기술보급국 34.6%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균형발전담당관실 28.6%, 관광산업과 25.0%, 건설정책과 및 정보화담당관실 20.0% 등으로 나타나 농림수산국 이외의 부서에서도 농촌개발 관련 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농촌개발 관련 사업예산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역시 농촌개발과가 1,302억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토목건설 위주의 수질관리과 1,082억원, 균형발전담당관

〈표 2〉 충청남도의 주요 부문별 재정규모(세출)

(단위 : 억원)

부 문	2008년	2009년	증감률(%)
전체 예산	29,153 (100%)	32,380 (100%)	11.1
공공질서 및 안전	990 (3.4%)	1,228 (3.8%)	24.1
교 육	2,134 (7.3%)	2,174 (6.7%)	1.8
문화 · 관광	1,126 (3.9%)	1,536 (4.7%)	36.5
환경보호	2,253 (7.7%)	3,086 (9.5%)	37.0
사회복지	6,611 (22.7%)	7,203 (22.3%)	9.0
농림해양수산	5,860 (20.1%)	6,090 (18.8%)	3.9
산업 · 중소기업	753 (2.6%)	990 (3.1%)	31.4
국토지역개발	1,977 (6.8%)	2,307 (7.1%)	16.7

자료 : 충청남도 본예산 일반회계 자료, 2009

〈표 3〉 충청남도 부서별 농촌개발 관련 사업비율 및 예산('09)

실 국	실 과	농촌개발 관련 사업 건수	농촌개발 사업비율 (%)*	농촌개발 사업예산 (백만원)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	주요정책개발 및 실무지원 1건	7.7	691
	교육협력법무담당관	농어촌 방과후학교 등 2건	18.2	3,385
	정보화담당관	정보화마을 등 2건	20.0	638
	균형발전담당관	지역균형발전사업 등 2건	28.6	59,039
경제통상실	경제정책과	재래시장시설 현대화 등 3건	15.0	13,260
	기업지원과	농공단지조성사업 등 2건	13.3	8,439
자치행정국	도의새마을과	도서종합개발사업 등 5건	20.0	22,620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농어촌도서관 건립 등 2건	3.9	2,350
	관광산업과	농산어촌 체험마을 육성 등 4건	25.0	23,046
	체육청소년과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등 2건	5.9	1,458
농림수산국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개발사업육성 등 16건	69.6	42,185
	농촌개발과**	농촌마을종합개발지원 등 17건	73.9	130,199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 개발 육성 1건	1.6	123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시설 등 8건	13.3	50,454
	보건위생과	농어촌보건 등 4건	5.7	7,698
	환경관리과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등 2건	6.9	2,340
	수질관리과	농어촌마을하수도 등 5건	15.2	108,159
건설교통국	건설정책과	개발촉진지구개발 등 3건	20.0	12,857
	도로교통과	농어촌도로 확포장 1건	4.3	2,200
	치수방재과	소하천정비사업 등 2건	11.1	9,497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국	농업전문인력양성 등 9건	34.6	4,010
	기술개발국	농가경영컨설팅 등 3건	13.0	444
합 계 (총 96개 사업)				505,092

* 농촌개발사업비율(%) = 해당 부서의 농촌개발사업건수 / 해당 부서의 총 사업건수

** 농업기반조성사업 제외, *** 도농 공통사업 제외

자료 : 충청남도 본예산 일반회계 자료, 2009

실 590억원, 노인장애인과, 505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9년 현재 농촌개발 관련 사업 총예산은 5,051억원으로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액 32,380억원의 15.6%정도를 점유하고 있으며, 농촌지역에 투자되고 있는 복지부문의 예산까지 고려한다면 전체예산의 20%이상을 점유할 만큼 충청남도 내에서 중요한 사업부문임에 틀림없다.

3. 농촌개발사업 추진현황

최근까지 충청남도는 농어업이나 농어촌에 관한 중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갖춘 종합계획이 부재한 실정으로, 농림수산 관련 예산의 70~80% 이상이 국비와 연계하여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 자동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물론, 농산어촌지역의 복지, 교육, 지역개발, 복합산업 등에 관한 종합계획의 성격으로서 '제1차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5개년계획(이하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기본계획)'이 2005년에 수립되었지만, 관련 공무원 대부분이 계획의 수립 여부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실효성이 없는 형식적인 계획에 그치고 말았다.

그러던 중, 2008년 후반기부터 공무원 스스로 T/F를 구성하여 충청남도의 농어업·농어

촌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으며, 2009년 7월 현재, 계획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그동안 공무원 자체 T/F 활동을 통하여 자체워크숍 2회, 충남발전연구원 등 도내 외부전문가 합동워크숍 5회, 관련 전문가 초청 토론회 3회, 행정부지사 주재 워크숍 2회 등의 추진경위를 거쳐 지난 2009년 7월 27일 지사보고회를 마친 상태이다.

수립중에 있는 충남 농어업·농어촌 발전 종합계획은 2009년부터 2020년까지의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으로서 '세계시장과 경쟁하는 강한 농수산업, 살고 싶고 찾고 싶은 풍요로운 농어촌'을 비전으로 농수산업, 농식품, 농어민, 농정체제에 대한 목표를 제시하고, 10대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본 계획에서는 기존의 농어업 기반부문에 편중되어 있던 충청남도의 농정방향을 중앙정부정책과 연계하고 사회적 변화와 수요를 반영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으며, 특히 농어업의 인력문제나 녹색성장, 추진체계 개편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물론, 농촌개발부문에 있어서 농림수산물 업무에 한정된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나라 최초로 공무원이 스스로 수립한 농업농촌 종합계획이고 계획수립과정에서 관련 전문가, 기관, 이해관계자가 다양하게 참

여하는 협력적 계획을 수립하였다는 측면에서 본 계획이 갖는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009년 충청남도의 농림사업의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총 108개의 국비보조사업을 위임받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자체사업을 포함한 충청남도 전체 농림사업 184개 사업 중 58.7%를 차지한다. 특히, 토목건설 등의 공공

사업이 주를 이루는 농촌개발과의 사업은 23개 사업중 자체사업이 단 3건에 불과하여 건수를 기준으로 할 때 80% 이상이 국비보조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업정책과는 총 23개 사업중 자체사업 9건으로 60.9%가 국비보조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국비보조사업

〈표 4〉 농업정책과 및 농촌개발과의 자체사업 현황

구 분	자 체 사 업	
농업정책과 (9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정책개발사업육성 - 농어촌육성정보지 보급지원 - 농업지원센터 육성 - 농산물유통시설현대화 지원 - 농산물 파워브랜드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테크노파크 육성 - 농업인단체 육성 - 농산물가공시설현대화 지원 - 농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강화
농촌개발과 (3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관리 및 농촌지역개발 등 정책사업 육성 - 소규모농업기반시설지원 - 농어촌빈집정비사업지원 	

자료 : 충청남도 본예산 일반회계 농림수산물국 자료, 2009

〈표 5〉 충청남도 농림사업 중 국비보조사업과 자체사업 현황(건수 기준)

구 분	합계 (건수)	국비보조사업		도 자체사업	
		건수	비율(%)	건수	비율(%)
농림수산물국	184	108	58.7	76	41.3
농업정책과	23	14	60.9	9	39.1
농산과	53	23	43.4	30	56.6
농촌개발과	23	20	87.0	3	13.0
축산과	29	9	31.0	20	69.0
산림녹지과	36	28	77.8	8	22.2
수산과	20	14	70.0	6	30.0

자료 : 충청남도 본예산 일반회계 농림수산물국 자료, 2009

〈표 6〉 충청남도 농림사업 중 국비보조사업과 자체사업 현황(금액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금액)	국비보조사업		도 자체사업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농림수산물	555,691	504,437	90.8	51,254	9.2
농업정책과	47,119	43,754	92.9	3,365	7.1
농산과	194,779	177,646	91.2	17,133	8.8
농촌개발과	157,707	146,535	92.9	11,172	7.1
축산과	37,699	27,329	72.5	10,370	27.5
산림녹지과	87,286	81,208	93.0	6,078	7.0
수산물	31,101	27,965	89.9	3,136	10.1

자료 : 충청남도 본예산 일반회계 농림수산물 자료, 2009

이 총 농림사업 예산의 90.8%나 되며, 자체사업의 비중은 9.2%에 불과(국비보조사업 금액에는 지방비 부담금도 포함)하여 농림사업 대부분이 국비보조사업을 위임받아 실시하는 형태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농촌개발과의 국비보조사업 비중은 92.9%로 산림녹지과 다음으로 국비의존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충청남도의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농림사업 대부분이 국비보조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며, 이로서 지방의 자율권은 그만큼 더 제약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충청남도는 2004년부터 주요사업의 추진실태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성과관리(BSC)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통합 운영하고 있다. 충청남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 전 부서를 대상으로 성과지

표 및 실행과제 목표달성도 등을 평가하는데, 부서 평가결과 상위 9개 부서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성과제고를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IV. 공무원 및 전문가 의식 분석

1. 조사 개요

충청남도의 농촌개발사업 추진실태에 관한 공무원 및 전문가 의식 분석을 위하여 6월 22일부터 7월 6일까지 15일 동안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기획 및 정책수립, 사업집행 및 관리, 조직 및 거버넌스 등에 관련된

〈표 7〉 공무원 및 전문가 설문조사의 응답자 구성

구 분	구 성 (명)	비고
합 계	총 응답자 68명 (대상자 140명, 응답률 48.6%)	
성 별	① 남 59명(86.8%), ② 여 9명(13.2%)	
연 령	① 30대 14명(20.6%), ② 40대 22명(32.4%) ③ 50대 26명(38.2%), ④ 60대 1명(1.5%), ⑤ 무응답 5명(7.4%)	
직 업	① 공무원 50명(73.5%), ② 대학교수 12명(17.6%) ③ 관련 전문가 6명(8.8%)	
공무원 소속	① 정책기획관실 7명(14%), ② 균형발전담당관실 4명(8%) ③ 경제정책과 1명(2%), ④ 도의새마을과 1명(2%) ⑤ 농업정책과 15명(30%), ⑥ 농촌개발과 16명(32%) ⑦ 건설정책과 3명(6%) ⑧ 농업기술원 3명(6%)	공무원 50명의 소속 및 비율

사항을 조사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총 140부를 배포하여 68부가 회수되었으며 48.6%의 회답율을 보였다.

응답자의 구성은 남성이 86.8%, 여성이 13.2%를 차지하고, 연령은 40~50대가 전체의 약 70%를 점유하고, 다음으로는 30대가 20.6%, 이 외의 연령이 9.4%를 점유하고 있다. 응답자의 직업은 공무원 73.5%, 대학교수 및 관련 전문가가 26.5%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조사 응답자의 구성을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2. 기획 및 정책수립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에 있어 '충청남도 농촌개발의 미래지향적인 정책 수립 여부'에 대한 의견으로 공무원은 62%정도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최근 수립중인 종합계획에 대한 공

〈표 8〉 충남 농촌개발의 미래지향적인 정책 수립 여부에 대한 의견

(단위 : %)

구 분	종합	공무원			전문가
		계	농림수산관련실과*	그 외 실과	
그렇다	51.5	62.0	67.6	50.0	22.2
보통이다	33.8	32.0	29.4	37.5	38.9
아니다	14.7	6.0	2.9	12.5	38.9

* 농업정책과, 농촌개발과, 농업기술원

무원들의 신뢰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기존의 충청남도 농촌개발정책을 기준으로 응답한 전문가집단은 상대적으로 '아니다'라는 응답이 많았다.

또한, '미래지향적인 농촌개발 정책이 수립

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경우 그 이유'에 대한 의견으로 '농촌개발의 통합적인 기획 및 정책수립 전담조직 부재(37.1%)와 '중앙정부지원에 의존하는 농촌개발로 정책 및 계획수립의 필요성 부족(32.3%)'을 가장 많이 들고 있다.

〈표 9〉 미래지향적 농촌개발정책이 수립되지 못하는 경우 그 이유에 대한 의견

(단위 : %)

구 분	종합	공무원			전문가
		계	농림수산관련실과	그 외 실과	
체계 및 제도의 미약	19.4	15.4	10.5	20.0	26.1
통합기획 및 정책수립 전담조직의 부재	37.1	41.0	47.4	35.0	30.4
중앙정부지원에 의존하여 정책수립 필요성 부족	32.3	33.3	31.6	35.0	30.4
담당공무원 역량부족	6.5	2.6	0.0	5.0	13.0
기 타	4.8	7.7	10.5	5.0	0.0

충청남도의 농촌개발 관련 사업의 종합기획 및 정책수립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90%이상이 '그렇다'고 응답하여, 그 시급성이 큰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기획 및 정책수립 기능 강화를 위한 대

안으로서는 '민·관 협동의 거버넌스 구축(43.3%)과 '농촌정책 전담부서의 운영(38.8%)'을 들고 있어 조직과 운영체계의 개편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0〉 농촌개발 관련 사업의 종합기획 및 정책수립 기능강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

(단위 : %)

구 분	종합	공무원			전문가
		계	농림수산관련실과	그 외 실과	
그렇다	92.6	90.0	91.2	87.5	100.0
보통이다	7.4	10.0	8.8	12.5	0.0
아니다	0.0	0.0	0.0	0.0	0.0

〈표 11〉 농촌개발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정책수립 기능강화를 위한 대안

(단위 : %)

구 분	종합	공무원			전문가
		계	농림수산물관련실과	그 외 실과	
농촌정책 전담부서 운영	38.8	42.9	51.5	25.0	27.8
계약직공무원(전문가) 중심의 별도 전담기구 또는 사업단 운영	7.5	4.1	6.1	0.0	16.7
민간중심의 별도 사업단 운영	10.4	14.3	12.1	18.8	0.0
민·관 협동의 거버넌스 구축	43.3	38.8	30.3	56.3	55.6

3. 사업집행 및 관리

충청남도에서 '중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농촌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으로 공무원들은 과반수 가까운 수가 '그렇다'라고 응

답하였으나, 전문가집단은 '아니다'라는 응답이 많아 공무원과 전문가집단의 의견 차이를 보였다. 공무원 중에서도 특히 농림수산물 관련 실과에서 농촌개발사업이 체계적·통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표 12〉 중장기적인 비전·전략을 바탕으로 체계적·통합적 농촌개발 추진에 대한 의견

(단위 : %)

구 분	종합	공무원			전문가
		계	농림수산물관련실과	그 외 실과	
그렇다	38.2	48.0	55.9	31.3	11.1
보통이다	42.6	42.0	35.3	56.3	44.4
아니다	19.1	10.0	8.8	12.5	44.4

그러나 농림수산물국 내에서의 농촌개발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는 모르나, 실제로는 농촌개발사업은 농림수산물국 이외의 부서에서도 추진되고 있고 이들 각각의 부서사

업들이 서로 통합되지 못한 채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농촌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못하다고 보는 경우 그 이유'에 대한

공무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중앙 정부지원에 의존하는 농촌개발로 지자체의 자율성 부족'과 '단위사업 위주의 추진으로 종합

적인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들고 있으며, 특히 전문가집단은 '담당공무원 또는 추진주체의 역량부족'도 하나의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표 13〉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농촌개발이 추진되지 못하는 이유

(단위 : %)

구 분	종합	공무원			전문가
		계	농림수산물관련실과	그 외 실과	
중장기적 비전과 전략 미흡	21.2	25.0	16.7	31.3	0.0
중앙정부지원에 의존하는 농촌개발로 자율성 부족	36.4	39.3	54.2	28.1	11.1
단위사업 위주의 추진으로 종합적 사업추진이 어려움	36.4	28.6	29.2	28.1	44.4
담당공무원 또는 추진주체의 역량부족	6.1	7.1	0.0	12.5	44.4

최근 농촌개발사업의 추진에 있어 사업의 유사·중복, 통일성·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지자체 차원에서 이러한 문

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으로는 '농촌정책기능의 통합 및 기획기능 강화(28.9%)'와 '체계적인 농촌개발계획 수립

〈표 14〉 농촌개발 관련 사업의 유사·중복성 문제해결 대안

(단위 : %)

구 분	종합	공무원			전문가
		계	농림수산물관련실과	그 외 실과	
체계적인 농촌개발계획 수립 및 추진	28.4	28.1	27.5	29.2	29.4
농촌정책기능의 통합 및 기획기능 강화	28.9	27.3	27.5	27.1	33.3
전담조직 설치를 통한 농촌 개발사업의 종합추진	22.1	23.7	27.5	16.7	17.6
관련 조직 및 기관과의 파트너십 강화	20.5	20.9	17.6	27.1	19.6

및 추진(28.4%)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이 외에도 '전담조직 설치를 통한 농촌 개발사업의 종합추진(22.1%)과 '관련 조직 및 기관과의 파트너십 강화(20.5%)에 대한 의견도 비슷한 수준의 응답률을 보였다.

최근, 정부에서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지침('09.5)'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지역개발계정의 경우 재원용도를 포괄적으로 지정하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기획·설계하도록 하는 '포괄보조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또한, 종전 지역계정의 200여개 세부사업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포괄보조사업 목적

에 부합하는 경우 지자체 자율적으로 발굴·예산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자체 자율성 증가에 상응한 책임성 제고를 위해 사후적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가 강화될 예정이다.

공무원과 전문가들의 과반수 이상이 이러한 포괄보조금 제도가 농촌개발 추진상의 문제점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55.9%)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지자체장의 정치적 목적의 선심성 예산집행(42.9%)'이나 '지역 숙원사업이나 특정부문의 사업에 편중되어 예산이 집행(37.5%)'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보였다.

〈표 15〉 포괄보조금 제도가 농촌개발 추진상의 문제점 해결가능 여부에 대한 의견

(단위 : %)

구 분	종합	공무원			전문가
		계	농림수산관련실과	그 외 실과	
그렇다	55.9	48.0	55.9	31.3	77.8
보통이다	29.4	34.0	29.4	43.8	16.7
아니다	14.7	18.0	14.7	25.0	5.6

〈표 16〉 포괄보조금 제도가 갖는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의견

(단위 : %)

구 분	종합	공무원			전문가
		계	농림수산관련실과	그 외 실과	
지자체의 역량부족으로 인한 준비 미흡	19.6	7.9	8.3	7.1	44.4
지자체장의 정치적 목적의 선심성 예산집행 우려	42.9	50.0	45.8	57.1	27.8
지역숙원사업이나 특정부문의 사업 편중 우려	37.5	42.1	45.8	35.7	27.8

4. 조직 및 거버넌스

농촌개발 관련조직의 업무분장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보통이라 응답하였고,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21.9%를 보였다.

〈표 17〉 농촌개발 관련조직의 업무분장 적절성

(단위 : %)

구 분	종합	공무원			전문가*
		계	농림수산물관련실과	그 외 실과	
적절하다	12.5	12.5	16.0	0.0	-
보통이다	65.6	65.6	60.0	85.7	-
적절하지 않다	21.9	21.9	24.0	14.3	-

* 해당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조사

또한, 농촌개발 관련조직 상호간의 협조체계에 있어서는 역시 보통이라는 응답이 78.1%를 점유하고 있고, 협조적이라는 응답이 15.6%를 점유하였다. 그러나 협조적이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구성을 보면 농림수산물실과 소속 공무원이 전부를 차지하고 있으

며, 그 외 실과에서는 오히려 비협조적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이는 농림수산물국 내에서의 협조체계는 양호할 지라도, 타 실국으로 넘어가면 유사한 업무를 소관하고 있더라도 협조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을 잘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18〉 농촌개발 관련조직 상호간의 협조체계

(단위 : %)

구 분	종합	공무원			전문가*
		계	농림수산물관련실과	그 외 실과	
협조적이다	15.6	15.6	20.0	0.0	-
보통이다	78.1	78.1	76.0	85.7	-
비협조적이다	6.3	6.3	4.0	14.3	-

* 해당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조사

농촌개발 관련조직의 업무(사업)량에 다른 인력배치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으로는 과반수

이상이 보통이라고 응답하였고, 부적절하다는 응답도 34.4%를 점유하였다.

〈표 19〉 농촌개발 관련조직의 업무량에 따른 인력배치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

(단위 : %)

구 분	종합	공무원			전문가*
		계	농림수산관련실과	그 외 실과	
적절하다	9.4	9.4	12.0	0.0	-
보통이다	56.3	56.3	52.0	71.4	-
부적절하다	34.4	34.4	36.0	28.6	-

* 해당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조사

농촌개발 추진에 있어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으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97.1%를 점유하여 대부분이 거버넌스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버넌스

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이 40.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 외에도 '전문성 확보(30.0%)', '정책 집행의 실효성 확보(24.6%)'도 거버넌스가 필요한 이유로 제시하였다.

〈표 20〉 농촌개발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거버넌스 필요성에 대한 의견

(단위 : %)

구 분		종합	공무원			전문가
			계	농림수산관련실과	그 외 실과	
필요성	필요하다	97.1	96.0	94.1	100.0	100.0
	보통이다	2.9	4.0	5.9	0.0	0.0
	필요하지 않다	0.0	0.0	0.0	0.0	0.0
필요한 이유	전문성 확보	30.0	34.0	39.4	23.5	15.8
	인력의 확보	4.3	6.0	9.1	0.0	0.0
	다양한 의견수렴	40.6	36.0	36.4	35.3	52.6
	정책실효성 확보	24.6	24.0	15.2	41.2	26.3
	기 타	1.4	0.0	0.0	0.0	5.3

농촌개발 추진에 있어 타 기관 및 단체(농협, 농어촌공사, 생산자단체, 충남농업테크노파크, 충남발전연구원 등)와의 거버넌스 현황으로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58.8%, 거버넌스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22.1%로 나타났다. 그러나 집단별로 결과

를 살펴보면 보통이라는 응답 다음으로 공무원의 경우 거버넌스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다수가 응답하였으며, 전문가집단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여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1〉 농촌개발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거버넌스 현황

(단위 : %)

구 분	종합	공무원			전문가
		계	농림수산물관련실과	그 외 실과	
거버넌스가 잘 이루어짐	19.1	24.0	23.5	25.0	5.6
보통이다	58.8	70.0	70.6	68.8	27.8
잘 이루지지 않음	22.1	6.0	5.9	6.3	66.7

거버넌스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고 보는 경우, 그 이유로서는 '형식적인 거버넌스 운영(50.0%)'을 가장 많은 응답자가 들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한정된 참여조직 및 기관(26.2%)', '다양한 의견수렴 부족(1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충청남도에서는 농촌개발 추진에 있어 특정분야의 자문이나 특정부문의 연구를 위해 외부 전문가나 관련 단체 및 조직에 협력을 구하는 경우가 다수 있지만, 통합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한 사례는 거의 없고, 있더라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 22〉 거버넌스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단위 : %)

구 분	종합	공무원			전문가
		계	농림수산물관련실과	그 외 실과	
형식적인 거버넌스 운영	50.0	40.7	38.9	44.4	66.7
한정된 참여조직 및 기관	26.2	33.3	33.3	33.2	13.3
실행력 뒷받침 부족	9.5	14.8	11.1	22.2	0.0
다양한 의견수렴 부족	11.9	11.1	16.7	0.0	13.3
기 타	2.4	0.0	0.0	0.0	6.7

한편, 충청남도 농촌개발 추진에 있어 가장 협력이 필요한 기관 또는 단체는 어디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가 대부분 '대학 및 연구기관(24.9%)', '시민(농어민)단체(23.4%)', '농어촌공사(20.3%)', '농협(19.3%)'에 공통적으로 응답하여 거의 비슷한 의견을 보였다.

충청남도의 농촌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개편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으로는 '농림수산물국내에 농촌개발 전담조직 설치(38.3%)'와 '농촌개발 관련조직 및 기관과의 거버넌스 구축(38.3%)'이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러나 집단별 의견을 살펴보

〈표 23〉 충청남도 농촌개발 추진시 협력이 가장 필요한 기관 또는 단체

(단위 : %)

구 분	종합	공무원			전문가
		계	농림수산업관련실과	그 외 실과	
농어촌공사	20.3	20.4	23.4	14.6	20.0
농협	19.3	19.0	21.3	14.6	20.0
대학 및 연구기관	24.9	23.9	22.3	27.1	27.3
민간기업	12.2	14.1	13.8	14.6	7.3
시민(농어민)단체	23.4	22.5	19.1	29.2	25.5

면 '농림수산물국내에 농촌개발 전담조직 설치'는 개발 관련조직 및 기관과의 거버넌스 구축이 농림수산물 관련 실과 공무원의 의견에서만 높게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응답하였다. 나타났으며, 그 외 실과나 전문가집단은 '농촌

〈표 24〉 충청남도 농촌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

(단위 : %)

단위(%)	종합	공무원			전문가
		계	농림수산업관련실과	그 외 실과	
기존 농촌개발 관련 행정조직의 기능 조정	16.7	20.8	25.0	12.5	0.0
농림수산물국내에 농촌개발 전담조직 설치	38.3	41.7	53.1	18.8	25.0
농림수산물국외에 농촌개발 전담조직 설치	5.0	4.2	0.0	12.5	8.3
농촌개발 관련조직 및 기관과의 거버넌스 구축	38.3	33.3	21.9	56.3	58.3

이 중 '기존 농촌개발 관련 행정조직의 기능 조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농촌개발업무가 여러 부서(특히, 자치 행정국, 농림수산물국, 건설교통국)로 분리되어 추진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따른 기능조정이

필요하고, 농촌지역에 있어서 농림부문 뿐만 아니라 교육·문화·복지·의료 등 다양한 부문과 연관이 있어 종합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능조정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농림수산물국 내에 농촌개발 전담조직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농림수산물국의 업무과중과 지속적인 인원감축으로 전담조직 등의 인원보강이 필요하고, 농업·농촌을 담당하는 농림수산물국에서 정책개발과 조정역할을 수행하여야만 업무추진의 명료성과 책임행정이 가능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다.

'농림수산물국 외에 농촌개발 전담조직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농산어촌, 도시, 기반시설, 문화·관광, 사회복지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범역에서의 종합기획을 담당할 수 있는 농림수산물국외의 별도의 농촌개발 전담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농촌개발 관련조직 및 기관과의 거버넌스 구축'이 가장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조직구성은 현재로도 충분하나 협조체계 부족으로 비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행정조직의 내부적인 협조체계와 함께 외부 관련기관과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며, 농촌개발 관련조직은 특정부서에 집중될 수 없는 현실적인 이유와 행정역량의 한계성에 따른 전문성확보 등의 차원에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 농촌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기타 문제점이나 의견으로 공무원그룹은 정책이나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

다는 의견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중장기발전 계획과 이의 실행을 위한 지속적인 예산확보, 민·관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제도정비 및 인센티브 마련, 개발사업 후 지속적인 유지관리 체계 확립, 특색 있고 독자적인 농촌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자체예산의 확대편성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전문가그룹은 민간전문가를 영입한 농촌개발 전담조직 구성, 지역마다 지역전문가 그룹의 육성, 농촌개발을 위한 민·관 전문기관의 연대적 책임성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안목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등을 제시하였고, 특히 충남도 출자연구기관인 충남발전연구원에 대해서는 연구원내에 농촌개발센터를 설치하여 연구, 공무원·농민 등의 교육, 거버넌스체계 확립 등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V. 결론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충청남도 농촌개발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공무원·전문가 의식을 조사·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① 정책의 시의성, ② 정책의 차별성, ③ 정책수립의 체계성, ④ 사업추진의 체계성, ⑤ 사업의 통합·연계성, ⑥ 사업관리의 지속성, ⑦ 조직 및 기능의 적절성, ⑧ 조직역량 및 전문성, ⑨ 거버넌스 측면으로 나누어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정책의 시의성

최근까지 충청남도는 농어업이나 농어촌에 관한 중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갖춘 종합계획이 부재한 실정이고, 종합계획의 성격으로서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기본계획'이 2005년에 수립되었지만 실효성이 없는 형식적인 계획에 그치고 말아, 최근까지 이렇다 할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던 중, 2008년 후반기부터 공무원 스스로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현재 마무리 단계가 진행 중이다. 본 계획만을 가지고 정책의 시의성을 논할 경우, 기존의 농어업 기반부문에 편중되어 있던 충청남도의 농정방향을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하고 사회적 변화와 수요를 반영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 최초로 공무원이 스스로 수립한 농업농촌 종합계획이고 계획수립과정에서 관련 전문가·기관, 이해관계자가 다양하게 참여하는 협력적 계획을 수립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계획은 농촌개발부문에 있어서 농림수산물 업무에 한정된 계획을 수립하였다는 측면에서 한계성을 갖고 있으며, 보다 시의성을 갖는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농촌개발에 관한 통합기획 및 정책수립을 담당하는 전담 조직을 설치하거나 혹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을 통한 종합적이고 실효성이 있

는 정책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② 정책의 차별성

2005년에 수립된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기본계획'이 농촌개발계획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 계획자체가 너무 형식적이고 추상적이라는 것을 들 수 있다. 즉, 충청남도의 특성을 반영한 실현가능한 계획이 수립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시도되고 있는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발전 종합계획'에서는 충청남도의 현안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정책의 차별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충청남도의 경우 농촌개발을 포함한 농림수산물 관련 예산의 80~90% 이상이 국비와 연계하여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 자동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체계를 가지고 있어, 차별화되고 종합적인 정책 수립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이 약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앞으로 포괄보조금제도가 도입될 경우, 지자체의 자율성이 향상되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정책수립과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어 이에 대비한 지자체의 정책수립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또한 충청남도의 자체예산의 확대편성을 통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③ 정책수립의 체계성

현재 충청남도에서는 농촌개발의 통합기획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과 종합적인 농촌개발정책을 수립하는 체계가 부재한 실정이다. 농업정책과의 농정기획팀에서 농정총괄을 담당하나, 실제 하는 일은 각과에서 올리는 예산이나 사업을 주로 취합하는 일에 머물고 있으며 대부분이 농어업 부문에 치중되어 있어 농촌정책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거나 총괄하는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고, 농촌개발과는 기획기능이 없이 단지 국비예산에 기초한 일부 농촌지역개발 관련 행정만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기타 농촌개발 관련 업무가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다.

농촌개발 관련 사업의 종합기획 및 정책수립 기능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대다수 공감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향후 농촌정책의 전담부서를 운영하는 방안이나 체계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민·관 협동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④ 사업추진의 체계성

충청남도는 최근까지 농촌개발 관련부문의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못하였고, 이로써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중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바탕으로 하는 체계적인 사업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지방정부의 농촌개발은 대부분 중앙정부지원에 의존하는 사업추진으로 자율성이 부족하고, 대부분 단위사업 위

주의 추진으로 종합적인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점도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농촌개발사업의 추진체계에 있어서도 대부분이 국비와 연계하여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 능동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체계를 가지고 있어, 독자적인 추진체계를 보유하고 있지 못한 실정으로, 향후,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사업추진과 효율적인 추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⑤ 사업의 통합성·연계성

충청남도의 농촌개발사업은 다양한 부서에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농림수산물 내에서의 농촌개발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는 모르나, 실제적으로 농촌개발사업은 농림수산물 이외의 부서에서도 추진되고 있고, 이들 각각의 부서사업들이 서로 통합되지 못한 채 별개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농촌개발 관련 사업의 유사·중복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획 및 정책수립 단계에서부터 관련부서의 영역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농촌정책기능의 통합 및 기획기능 강화, 전담조직 설치를 통한 농촌개발사업의 종합추진, 관련 조직 및 기관의 파트너십 강화 등의 대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⑥ 사업관리의 지속성

현재 충청남도에서는 농촌개발사업을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없는 실정이다. 물론, 2004년부터 주요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성과관리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는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성과제고를 위한 동기부여 수준에 그칠 뿐,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환류를 통한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추구하지는 못하고 있다.

향후 포괄보조금 제도가 도입되면 지자체 자율성 증가에 상응한 책임성 제고 차원에서 사후적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가 강화될 것인데,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충청남도 내부적으로 사전에 엄격한 사업관리를 위한 관리체계 및 공무원의 역량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⑦ 조직 및 기능의 적절성

충청남도의 농촌개발은 농림수산업의 농업정책과와 농촌개발과를 포함하여, 균형발전담당관실, 도의새마을과, 관광산업과 등 다양한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 부서별 사업비율은 농촌개발과,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원 등의 순으로 높고, 사업예산은 농촌개발과, 수질관리과, 균형발전담당관실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업무의 기능분담의 측면에서 보면, 농업이나 농산업, 보건·복지, 문화·예술부문은 업무의 고유성을 가지고 적절한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농촌관광이나 농촌교육, 농촌지역개발 측면에서는 몇몇 부서가 중복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이렇게 업무분야의 중복성·유사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간의 협조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업무분장이나 업무량에 따른 인력배치 현황에 관하여 대부분의 공무원들 또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충청남도의 조직개편시 감원의 타깃이 되는 부서는 농업관련부서로서, 즉 1차산업의 비중이 감소됨에 따라 인원감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나, 향후 농업·농촌의 새로운 변화, 특히 농촌개발분야의 영역확대에 따른 새로운 조직개편이나 인원 재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⑧ 조직역량 및 전문성

충청남도의 농촌개발 관련 부서는 대부분 기술직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업무를 수행하기위한 어느 정도의 전문성은 확보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농촌을 둘러싸고 있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최근에는 주민교육을 통한 농촌주민의 의식수준과 역량이 크게 향상되고 있어, 이에 대응한 담당공무원의 역량강화와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자문체계의 구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⑨ 거버넌스

충청남도의 농촌개발 관련 조직으로는 도청행정조직 이외에 농·수·축협, 농수산물유통

공사 등의 공공기관과 대학 및 연구소, 영농 4-H회, 농촌지도사회 등의 다양한 민간농민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충청남도에서는 농촌개발 추진에 있어 특정분야의 자문이나 특정부문의 연구를 위해 외부 전문가나 관련 단체 및 조직에 협력을 구하는 경우는 다

수 있지만, 통합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한 사례의 거의 없고, 있더라도 대부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농촌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담당주체의 전문성확보, 정책의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충청남도 농촌

〈표 25〉 충청남도 농촌개발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종합고찰

구 분	현황 및 문제점	향후 추진방향
정책의 시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계획 부재 또는 형식적 - 최근 농어업·농어촌 발전 종합계획 수립중 - 농림수산물 업무에 한정된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 기획 및 정책수립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정책의 차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계획 수립을 통하여 차별성 기대 -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사업추진으로 정책 수립에 대한 당위성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수립 역량 강화 - 자체예산 확대편성으로 독자적인 사업 추진
정책수립의 체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적 계획수립체계 부족 - 총괄·기획기능을 담당하는 부서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괄기획기능 강화 - 민·관 거버넌스 구축
사업추진의 체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적 비전·전략이 없이 사업추진 - 단위사업 위주의 추진으로 종합추진 난해 - 중앙정부 의존으로 자율성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사업 추진 - 독자적인 추진체계구축
사업의 통합성·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수산물 내에서는 통합추진 - 그 외의 사업간 연계성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적 계획수립 - 전담조직 설치를 통한 사업의 종합추진
사업관리의 지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 - 사업관리 및 사업효과 극대화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관리체계 도입 - 관련 공무원 역량강화
조직 및 기능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관광, 농촌교육, 농촌지역개발 부문의 업무 중복 - 부서간 협조체계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서간 기능조정 - 조직개편 또는 인원 재 배치
조직역량 및 전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느 정도의 전문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역량강화 - 전문가 지원체계 구축
거버넌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적인 거버넌스 구축 부재 - 형식적인 거버넌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남도 내·외부적인 통합 거버넌스 구축

개발 관련 조직의 내·외부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충청남도 농촌개발사업의 추진실태와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식을 살펴보았으며, 본 연구를 기초로 향후 충청남도 농촌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관한 연구를 후속연구로 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강중원, 2006, "강원도 지역가꾸기사업의 현황과 과제", 강원농수산포럼
 김경량, 김지용, 2005, "지역농정의 현상과 과제", 농업경제연구 제46권 제1호
 김정연 외, 2007, "농촌개발정책 추진체계의 변화동향과 정비방안", 충남발전연구원
 박경, 구자인, 2006, "중앙·시·군단위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추진체계 정비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광서 외, 2007, "행복마을 마스터플랜", 전라남도
 박진도, 박경, 유정규, 2003, "상향식 농촌발전 전략에 관한 연구", 농정연구센터
 송미령, 박주영, 2004,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체계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동필 외, 2006, "농어촌 지역개발·복지분야 지원체계 효율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성우, 2006, "농촌지역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농정연구 18호, 농정연구센터
 정기환, 2002, "우리나라 농촌개발정책의 방향", 계간농정연구, 여름호, 농정연구센터
 차미숙, 박준화, 2008,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실태와 개선과제", 국토논단
 홍성걸 외, 2006, "농촌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방행정모델에 관한 연구", 농림부

지방재정 분권을 위한 과제

성 태 규 | 충남발전연구원 지역정책연구부장

I. 연구의 배경

1990년대 이후 우리는 새로운 정치·경제·사회환경을 맞이하고 있다.

첫째, 현재 급속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인터넷의 보급은 정치·행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터넷의 보급으로 많은 사람들은 공간을 초월하여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아파트와 직장에서도 사이버를 통하여 공간을 초월한 대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자신과 관계된 일에 직접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세계화는 우리에게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국경의 영향력이 미약해지고 세계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되는 세계화는 여러 분야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의 세계화는 그 영향이 매우 크다. 국경이 허물어지

는 세계화 시대에서의 경쟁력은 지방의 경쟁력의 총합으로부터 유도되어진다. 지방의 다양성이 경시될 경우, 신자유주의 시대에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없다. 지금까지 국가는 다양한 요소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중앙집권적인 통제시스템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시스템으로 인하여 권한, 자원, 인재, 정보가 중앙에 집중되었고, 전국적인 통일성만을 중시하여 지방의 다양성은 경시되었다. 이로 인하여 공공부문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국가경쟁력의 제고에 장애가 되고 있다. 또한 지역간 불균형이 되어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새로운 시대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모든 영역의 자원과 기능이 서울에 집중되어 전국 대부분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지역 경제가 피폐해지고 있다.

셋째, 민주화 이후 참여적인 시민사회가 성장하였고 시민사회의 성장으로 주민참여 거버넌스라는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런 시대적 변화는 중앙집권적 국가운영으로부터 분권형 운영체제로의 전환을 요구한다.

이와 같은 시대적 변화 속에서 우리는 과거 집권적인 통제시스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지방분권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제는 획일적인 국가통합의 단계를 뛰어 넘어 새로운 변화와 보다 높은 질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그동안 '결정권 없는 지방자치, 세원 없는 지방자치, 인재 없는 지방자치'로 특징지워졌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새로운 체제를 요구하게 되었다. 그래서 국가의 구성부분에 불과한 지방이 잠재적 활력과 자율성을 적극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분권적 체제가 요구되고 있다.

지방재정은 지방분권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영역이다. 많은 권한이전에 관한 논의가 있었지만, 권한이전에도 불구하고 재정분야에서의 분권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재정분권은 지역이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스스로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재원을 확충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정분권과 관련해서는 크게 지방재정의 확충, 효율적인 재정운용,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건전재정을 관리하는 과제가 있다. 본 고에서는

재정분권과 관련하여 이러한 세 가지 영역에서의 분권과제를 정리하고자 한다.

Ⅱ. 지방재정확충

현실의 지방재정은 지방행정의 수행에 가장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재정수요를 제대로 충족할 수 없는 여건에 직면하여 지역주민이 선호하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거나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매우 빈약한 상태이다. 그런데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주민의 복지수요 증대 및 행정서비스의 내용 제고에 따른 재정수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기반시설의 확충에 따른 재정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지방행정에 대한 참정기회가 많아지고 민주성이 제고됨에 따라 보건, 복지, 환경 등의 재정수요 및 방재, 공공안전 관련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노령화 시대의 도래, 지역특성을 살린 지역경제진흥 및 지역균형발전이 요구됨에 따라 노령화 시대에 대비한 생활환경개선 및 시설 확충, 낙후지역 개발 등 지역개발관련 재정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열악한 현재의 지방재정에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이 확충되어야 한다.

1) 국세의 지방이양 및 지방세원의 확충

현재 지방세 체계는 재산과세 위주로 되어 있어 경제발전에 따른 소득, 소비의 증가가 지방세수 증대로 연결되지 않고 있으므로, 현재 재산과세 중심의 지방세 구조를 세수탄력성이 높은 소득과세로 보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세 중 소득과 관련된 세목은 주민세 소득할과 농업소득세 등이 있는데 농업소득세는 그 세수비중이 극히 낮아 실질적인 지방소득세는 주민세 소득할 뿐이라고 할 수 있다. MB정부에 들어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려는 시도는 매우 바람직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지방소득과세의 확충을 위해서는 현재 10%인 표준세율을 인상하고 탄력세율의 범위 확대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주장과, 지역개발로 인한 이득과 지역적 특성이 강한 부동산임대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등을 통한 지방소득세의 도입, 그리고 지방소득세와 국세의 공동세 방식을 통한 지방소득세 도입방안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방안들을 과세 자주권, 조세행정의 간소화, 세원확충 효과 등의 기준에서 판단하여 지방소득세의 도입방안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2) 법정외세의 도입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법률주의 원칙 하에서는 법정외세 등 조례를 통한 자치단체의 지역 실정에 맞는 새로운 세목의 설치가 허용되지 않고 있어 과세자주권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자치단체가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재정자립성 및 재정자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세원을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법정외세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 일본 지방세법에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법정세목 이외에 "도부현 및 시정촌은 법정세목 외에 특별히 세목을 만들어 보통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정 외로 세목을 신설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정외세제도를 도입해 지역특성에 따른 신세원 개발이 허용될 경우, 각 자치단체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것을 선택하여 신세원을 개발하도록 한다. 이 경우 일본의 오락시설세, 입탕세, 문화관광시설세, 요트보트세, 스위스와 프랑스의 체제세, 이탈리아의 특별요양세, 스페인의 관광인지세, 불가리아와 폴란드의 관광계획세, 콜롬비아의 관광세 등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이창균 2003, 30).

3) 지역개발세 과세대상 확대

지역개발세는 과세대상과 세율만 지방세법

에 규정하고 구체적인 과세권의 행사는 각 자치단체의 자주적인 결정에 위임하여 조례를 통해 징수여부 및 탄력세율을 결정하도록 하는 이른바 선택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대상이 매우 한정적이고 일정지역에 제한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을 위해 조세법률주의의 한계를 유지하면서도 과세자주권의 활용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세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을 다양하게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각 자치단체에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세원을 선택하여 자주세원의 확충과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다. 현재 충남에서는 관광세 등을 추가적인 과세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다.(이창균 2003, 30-31)

4)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제도 도입

분권적 재정운영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투자재원 확충에 있어 자율적인 민관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조세제도를 통한 재원확충의 한계를 보완하고 민간의 행정참여를 유인하는 측면에서 민간의 자금을 적극적으로 유인함으로써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는 투자재원 확충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PFI제도는 공공시설 등 사회자본의 설계, 건설, 유지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민간의 자금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민간주도에 의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사업기법이다. 이 제도는 영국 대차정권의 작은 정부론을 이어받은 메이저 수상이 VFM(국민의 세금에 기초한 일정의 지불에 대해 가장 가치가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는 논리)의 사고에 기초하여 1992년 본격적으로 도입한 제도다. 영국에서는 현재 도로, 교량, 병원, 지역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PFI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각 자치단체는 PFI법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지역개발 투자사업 추진 시 민간자금 및 노하우를 활용하여 투자재원을 확보함과 아울러 지역개발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이창균 2003, 31)

5) 자치단체간 협력체제 구축 강화

지역개발 및 재정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인접 자치단체와 자율적·협업적 네트워크를 결성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자치단체간 협력네트워크 구축은 외자유치, 정보DB 구축, 공동기술 개발 등의 실질적 협력분야에서 산업단지 조성, 지방 SOC 구축 등의 기반조성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

게 이루어질 수 있다. 자치단체간 조합, 광역 행정협의회, 사무위탁(협약), 자치단체간 계약, 광역계획수립 등과 같이 자율적인 네트워크 구축은 분권적 재정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이창균 2003, 31-32)

6) 지방세외수입의 개선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자체재원의 주요한 수입원이며,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여하에 따라 재정확충이 가능한 잠재 수입원이다. 특히, 경영행정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개별적 혜택과 그에 따른 비용부담이라는 사용자부담원칙의 확대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주민의 저항을 줄이면서 세입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경변화에 유연성 있게 대응하는 세입전략에 해당한다.

채납징수관리의 강화가 요구된다. 채납액징수율이 매우 낮은 수준에서 보다 강도 높은 채납액 정리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요구된다. 대부분 채납액 징수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세외수입 채납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점, 그리고 세외수입의 부과징수부서가 다양하고 통합적인 채납자관리가 미흡한데 기인하므로, 다양한 유인조치와 강력한 행정제재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상습적인 채납자에 대한 다양하고 집중적인 채납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조정교부금 지급시 세외수입 채납액징수실적을 유인수단으로 반영하는 등 재정적 인센티브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이상용 2004b, 77)

지방자치단체의 여유자금운용은 업무처리의 구분 여부를 고려하면서 여유자금 관리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통합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재무투자원칙으로서 예금이자수익의 증대와 함께 자금관리의 안정성, 수익성, 유동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합자금관리시스템의 도입이 요구된다.

7) 지방분권화에 따른 법정교부율 인상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격차 해소와 재정수요 보전이라는 측면에서 지방분권화에 따른 재정수요의 반영에 보다 초점을 두어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재정조정제도 가운데 중앙정부는 법정교부율의 인상계획을 발표하였지만, 분권화에 따른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의 점증적 인상을 건의한다.

지방교부세의 적정규모에 대한 논란은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과 세출기능 배분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정부계층간 사무배분의 실태파악이 곤란하므로 지방교부

세의 적정규모에 대한 정책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비록 정부계층간 사무배분의 실태분석이 충분하게 이루어진다 해도 이는 단순히 건수와 같은 양적 구조에 불과할 뿐 사무의 성격과 비중 등 질적 비교는 용이한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지방교부세의 적정규모는 바로 국가재정에서 지방재정의 적정위치, 즉 재정분권화의 적정 수준과 직결된 문제라는 맥락에서 법정교부율의 인상문제는 현재의 지방재정 현실에 기초하여 추계된 재정수요와 지방분권의 추진 수준에서 소요될 재정수요를 감안하여 지방교부세의 법정률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지방교부세제도는 지역의 보편적인 행·재정수요에의 대응과 지역간의 재정불균형 시정, 지역균형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자체투자사업비의 일정 수준 확보, 국가시책사업에 대한 재원보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방향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세원재배분(국세의 지방이양 등)을 전제로 지방교부세의 확충 방향은 일정 수준 경상경비의 초과액, 일정 수준의 자체투자사업비 미확보액, 국고지원사업의 지방비과잉부담 해소액,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수반되는 경비 등을 고려한 기준재정수요의 부족액을 보전하여야 함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8) 사용료, 수수료 확충의 필요성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서비스의 대부분은 순수공공재라기 보다는 준공공재나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공급비용을 전적으로 조세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적정수준의 요금을 부과하여 조달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

첫째, 사용료가 시장가격과 유사한 신호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면 공공재도 사적재와 마찬가지로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다. 소비자의 선호도가 낮은 분야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선호도가 높은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전체적인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둘째, 사용료가 지니는 가격의 신호기능은 소비자 선호도의 공개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공공조직의 효율적 재구성을 촉진할 수 있다. 관료적,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소비자효용이 낮은 서비스가 생산될 가능성은 줄어드는 반면 수요가 큰 서비스의 공급이 확대된다. 그 결과 소비자만족과 생산효율성이 높은 서비스를 공급하는 정부조직은 확대되고, 그렇지 못한 조직은 규모가 축소될 것이다.

또한 민간분야가 더 효율적으로 생산, 공급할 수 있는 분야를 정부가 독점 공급하는 일이 없어짐에 따라 정부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반면 민간 분야의 역할이 커지게 된다.

셋째, 현재 무료로 공급되거나 원가보다 낮은 수준의 요금이 책정되어 있는 서비스를 점검토하여 유료화 및 효율현실화를 추진하면 조세저항을 야기하지 않으면서 부족재원을 보충할 수 있다.(김종순 2003)

위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에서 사용료,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다. 그것은 대부분의 사용료와 수수료가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공급원가에도 현저히 미달하는 수준의 요금을 부과하게 되면 사용료, 수수료의 부과가 의도하던 경제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첫째, 요금수준이 공급원가보다 낮은 경우 적자보전을 위해 일반재원으로 충당해야 하고, 그 결과 해당 서비스에 대한 과잉수요가 발생하고 자원의 낭비 및 비효율적 배분이 불가피해진다.

둘째, 공공서비스의 사용량이 적은 주민들이 사용량이 많은 주민들을 보조하는 결과가 발생하여 재정부담의 불형평이 나타난다.

셋째, 세외수입증가율을 둔화시켜 재정압박의 원인이 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종 법률 및 조례에 규정된 사용료, 수수료의 효율을 전면 재조정하여 무료로

공급되는 서비스를 유료화하고 효율도 대폭 현실화하여야 한다. 정확한 원가분석 결과를 토대로 연차별 효율현실화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서비스에 따른 모든 비용을 사용료, 수수료에 포함하되 현재와 같이 많은 비용을 간접비로 처리하여 공급비용을 저평가해서는 안된다.

9) 지방세의 과표현실화

세원배분의 재조정 없이는 지방의 자주재원을 지방세수로 확충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세의 경우 재산과세가 총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정도이고, 소득과세가 15%, 소비과세가 약 15%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세를 통한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는 재산과세에 대한 실효세율을 높이고, 신장성이 좋은 소득 또는 소비과세의 일정분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세의 과표현실화를 통한 재정확충방안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지방세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는 획일적인 조세체계를 지니고 있지만 지방세 17개 세목 중 11개 세목은 탄력세율 제도가 도입되어 있어 과표와 세율에 대한 조정의 여지가 있다. 지방세의 과표와 세율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편익과 조세부담이 제대로 연계되도

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재정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Ⅲ. 효율적 재정운용

지방정부가 제한된 재정규모 내에서 지역주민들의 기대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성과중심적인 지방재정 운용 및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민들의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지출구조를 형성하고, 창의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지방정부 활동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야말로 현재의 지방재정규모 하에서 주민들의 기대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는 첩경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면서 그동안 소규모본산투자, 업적과시형 대형사업 추진, 투자재원의 불합리한 배분 등 여러 분야에서 비능률과 낭비가 초래되어 재정규모의 확대나 지출활동에 상응하는 성과가 미흡하는 등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야기되는 경우가 있었다.(이상용 2002a ; 189-190) 지방재정운영의 건정성을 확보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방만한 재정운영 및 비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예방하고, 예산관리 능력을 제고하는 등 재정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최근에는

지방재정 운용의 경영화 전략이 강조되고 있다. 지방정부 재정운영의 경영화는 종래의 타율성, 독점성, 권력성, 경직성, 획일성의 기조로부터 과감히 탈피하여, 자율성, 경쟁성, 탈권력성, 효율성, 탄력성 등의 새로운 가치기준을 추구하는 것이다. 또한 지방재정 운용과정에서 가격기구(무료서비스의 유료화, 수익자부담원칙의 강화)의 적용 확대, 경쟁원리의 활용(예: 민간위탁, 민영화 등), 인센티브제도의 도입, 민간경영기법 도입(예: 자금관리기법, 마켓팅기법 등) 등을 추구하는 것이 지방재정 경영화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

1)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의 도입

현행 지방예산제도 하에서는 예산집행과정에서 각 부서의 예산절약을 유도할만한 유인을 부여하기 어렵다. 예산절약을 통해 불용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차차년도 예산편성시 예산삭감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의 입장에서 보면 예산지출을 절약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각 부서에서는 연말에 불요불급한 예산집행 등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되는 문제가 초래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가 절약한 예산의 일정부분을 부서 자체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연말의 예산낭비

동기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방식의 탐색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행정쇄신 및 실질적인 예산지출의 삭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각 부서에서 인건비, 관서운영비 등 경상비를 절약하여 집행할 경우, 이 재원을 처우개선 재원으로 활용하거나 익년도 예산편성시 부서에서 원하는 사업예산으로 추가 반영하여 편성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곽재기 2000, 31-32)

2) 목표지향적인 예산 운영과 중기재정계획제도의 내실화

지방정부 운영의 중, 장기적 비전을 담은 재정계획의 수립은 지방정부 활동의 방향과 이를 뒷받침하는 지역주민의 부담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정부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게 됨은 물론이고 합리적인 자원배분의 기틀을 마련한다.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은 국가정책목표를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하나의 유용한 통로로서 분권적 국가운영 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과 낭비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지방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제도의 정립과 운영은 지방자치의 성과를 높이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획능력과 과학적인 사업분석능력의 제고, 지역통계기반의 구축 등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과학적으로 수립되지 않는 중기재정계획에 작위적으로 예산편성을 연계하는 것은 또 다른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획능력 및 사업분석능력의 제고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제조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제조건이 충족된 다음에는 중기재정계획을 예산편성, 투자우선순위결정, 자금운용, 지방채 발행, 투융자사업 심사 등 여타 재정관리제도와 연계 운영함으로써 지방재정운영의 근간으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중기재정계획을 적극 활용토록 하고, 재정진단평가시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및 운영결과를 그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매년도 예산이 지방재정계획에 의거하여 편성되도록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중장기적 예산운영이 강조되는 자본

예산제도의 도입도 지방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재정계획의 기간을 단체장의 4년 임기와 일치시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의 여건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연동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스웨덴의 경우 고복지국가를 지향하되 재정적자를 인정하지 않기 위하여 단년도 적자문제를 중장기적으로 극복하고 중기재정지출한도를 설정하여 중기적으로 지출을 통제하는 재정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중기재정계획의 예산반영률이 매우 저조하고 계획과 예산간의 격차가 심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므로 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해당지역의 각종 지역계획을 일제 재정비하는 수정보완 조치를 통하여 지역계획과 중기재정계획의 상호환류체제의 확립이 필요하다. 또한 재정계획-투융자심사-예산편성간의 업무연계를 위한 협의조정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제도운영의 개별화에 의한 이중작업 방지, 관련 업무간의 철저한 연계를 강화하도록 한다.(이상용 2002a: 191)

3) 자율적 재정투융자심사제도의 강화

중앙정부는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방재정 투자, 융자 심사의 내실화를 위한 심사기법 연구개발, 관련규정 제정, 매뉴얼 개발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재정투융자심사제도의 개선방향이 지방자

치단체에 대한 통제·관리측면보다는 자율적 투자심사체제의 강화에 중점을 두는 방향에 있는 만큼, 지방차원에서 자체심사제도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하다.

4) 기준재정수요산정의 개선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지방예산편성의 어려움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측정항목의 개편, 보정기능의 강화, 계량모형의 개선, 배분결정권의 분권화 등이 중장기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5) 기금 및 특별회계제도의 개선

기금과 특별회계의 설치근거와 요건을 재정비하여 대상사업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유사한 특별회계와 기금이 모두 설치된 경우,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 단일화한다. 즉 기금과 기능적으로 유사한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특별회계와 통합하고, 설치목적과 사업의 성격상 지속적이며, 지방비의 부담이 큰 경우에는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그리고 이미 자금형성이 이루어져 독자적 자금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금으로 통합한다. 즉 일정금액 이하의 특별회계 및 영세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유사기금에 통합하도록 한다. 한편 각종 기금과 특별회계를 정비한 후에

발생하는 잔여 기금에 대해 「기금관리특별회계」(가칭)를 설치하여 모두 흡수·통합 관리하고,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 단체별로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IV. 건전재정 운용

IMF경제위기의 파급 효과가 지방정부로 밀려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재정위기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위축되고, 이에 따라 민간경제활동도 급격히 위축되었다. 그에 따라 세수기반의 잠식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감소규모가 확대되어 향후 건전재정이 재정운용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될 전망이다.

또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선심성·낭비성 예산의 증대, 업적 과시형 대형건설사업의 추진, 무분별한 경영수익사업 추진, 지방의회와의 관계 등을 고려한 소규모 분산투자, 지방채 발행의 활성화 등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으로 인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구분하고, 해당지방정부의 가용재원(fiscal capacity)의 범위 내에서 행정의 적정 수비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정부는 중

앙정부와는 달리 재원조달을 위한 정책수단의 선택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여건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에 입각한 프로그램의 재조정이나 탄력적인 조직인력의 유지, 그리고 군살빼기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지방정부 기능을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지방정부 활동을 평가하면서, 불요불급한 업무는 폐지 또는 축소하는 대신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대해 역량을 결집시키려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지방화,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는 사회요구 및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대응방식도 새롭게 설계되어야 한다. 종전과 같이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이 각기 독자적인 영역을 갖고 그 역할을 담당한다는 '부문간 경계'의 논리를 극복해야 한다. 최근 여러 나라에서 정부 부문의 효율성 제고 또는 경제력 강화, 그리고 공공 부문의 재원조달능력의 한계 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공, 사협력방식', '공동생산방식', '제3섹터방식' 등이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앞으로 지방정부는 독점적인 서비스 제공 역할을 지양하고 공공부문, 민간부문, 비공식 사회부문을 통합하는 촉매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중에서도 특히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 민간부문과의 공동생산 및 NGO의 활용, 민자유치와 프로젝트 금융기법의 활용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곽채기 2000, 25-26)

1) 행정서비스의 민간위탁

행정서비스의 민간위탁은 경쟁입찰에 의한 외부 계약방식(contracting out)을 통해 정부기능의 시장성과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한 민영화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사무 또는 정부사업의 민간(외부)위탁의 긍정적 성과로는 사무처리 또는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절감(경제성), 신속한 업무처리와 업무량 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효율적인 업무처리),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개선,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의 활용, 정부기구와 인력 및 예산의 감축과 간소화 등이 제시되고 있다.

2) 공동생산(co-production)

공동생산(co-production)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적 분업관계를 형성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를 민간부문과 공동으로 생산하게 되면 민간부문의 인력과 재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방정부의 인력과 재정규모 팽창을 억제할 수 있으며, 민간부문의 전문성과 다양한 생산기법을 활용함으로써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공동생산은 주민참여의 원리를 바탕으로 지방행정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공동생산에 활용될 수 있는 민간자원으로서 는 자원봉사자, 전문인력, 민간재원, 민간사회 단체와 조직, 시설과 장비,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 등을 예시할 수 있다. 저성장시대의 도래와 지방재정위기의 등장에 따라 다양한 민간 자원들을 지방행정 서비스분야별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공동생산이 1970년대 들어서 선진국의 주요 도시들이 재정위기에 봉착하게 되면서, 그 돌파구를 찾는 과정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3) NGO와의 파트너십 형성

지방정부 공동생산의 파트너로서 최근 비정부기구(NGO)가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비정부기구는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제3안의 대안으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지방행정의 업무가 더욱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지방정부가 이를 모두 관장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정부기구인 시민단체와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방식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비정부기구는 특히 환경행정분야와 사회복지분야에서 상당한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공동생산의 파트너로서 비정부기구들이 활발한 역할을 분담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비정

부기구의 시정참여를 허용하고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전문적인 역량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시민단체와 각종 업무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에게 위임하여 추진하는 노력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역공동기금을 조성하여 정책집행과정에서 비정부기구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4) 효율적인 지방채 관리

자치시대 개막 이후 증대하고 있는 각종 지역개발 수요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방채 발행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라도 장기적 사업계획의 자원조달 수단으로써 장기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수궁할 수 있으나 단기채 발행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 국한하여 발행해야 한다. 앞으로 즉흥적이고 무계획적인 지방채발행을 자제하고 상환자원조달 범위 내에서 투자효율성이 높은 사업을 우선 추진하여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채 발행을 다음과 같이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곽재기 2000, 27-28)

첫째, 지방채 발행은 우선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여 투자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장래의 재정운동을 경직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재정여건을 종합 분석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운영해야 한다.

둘째, 투자효율성을 감안한 대상사업 선정이 중요하다.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고 투·융자심사를 거친 사업에 한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문화·체육시설 등 불요불급한 시설 및 택지개발, 유원지조성등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생은 지양되어야 한다.

셋째, 기채선, 발행조건의 타당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차입선의 결정에 있어서는 이율과 상환조건이 유리한 재원을 조달하여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재정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넷째, 적기에 자금을 차입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즉 투자사업의 진도, 자금수요 등을 감안해서 적기에 자금을 차입함으로써 차입후 장기보관으로 이자만 부담하거나, 경상경비에 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조세수입의 추가적 확보에 기초하지 않은 재정지출의 확대는 재정위기의 뿌리를 잉태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지방세수입을 포함한 세입 수준에 대한 면밀한 추계와 전문적 예측에 주력하면서, 재정운영상 예기치 않은 어려움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사전에 갖추기 위해서 재정의 경직적 구조를 완화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5) 재정진단제도의 조기 실용화

재정운영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유인기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재정진단과 경보체제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각종 지역통계 및 재무정보에 기초하여 정확한 재정진단 및 평가를 실질적으로 실시하고 현재의 재정상태는 물론 장기적인 파급효과를 지방의회와 유권자들에게 정확히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거나 파산가능성이 있는 민선자치단체장에게는 무리한 대중적 재정운영이 정치적 자살행위에 해당되며 건전한 재정운영만이 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도 부합한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정부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감축관리와 같이 고통스러운 정책을 선택할 유인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진단시스템을 구축하여 매년 재정운영에 대한 자가진단을 실시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실정에 맞는 자체적인 재정운영평가지표 및 재정진단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익년도 예산편성에 환류함과 아울러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곽재기 2000, 28-29)

6) 합의형 예산배분제도의 도입

방만한 재정운영을 방지하고 재정 건전화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회적 합의(social consensus)에 의한 예산배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시민사회화를 반영한 뉴가버넌스 개념에 따른 예산편성 방식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한 큰 요인 가운데 하나는 자치단체장 또는 담당 공무원에 의한 독선적 예산배분에서 비롯된 경우가 있다. 즉, 충분한 사전준비가 없이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다 엄청난 예산 낭비를 초래한 사례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업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주민참여 과정을 예산편성 과정에 공식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예산편성과 심의단계에서 예산 청문회를 개최하는데 집행기관 내에서의 청문회보다 의회에서의 청문회가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더 활발하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국식 청문회를 바로 도입하기 보다는 예산관련 정책토론회를 예산편성 단계에서 실시하는 것이 검토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관심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투자심사위원 과반수 또는 일정수의 지역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합의형 예산배분의 보완장치로서 정기적으로 재정수요를 조사하고, 홈페이지에 상

시적으로 주민의견 반영 코너를 마련하는 것도 유익한 방식이다. 지역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주민과 시민단체는 누구보다 지역의 현안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적 장치는 매우 의미가 있다. 경기도에서 1997년 이후 매년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를 하고 있는 것도 재정수요 조사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지방분권시대 지방재정의 건정성에 대한 통제는 지방의회와 지역주민(시민단체)에 맡기는 방향이어야 한다. 주민참여의 방향은 지방자치의 본질과 시민사회화라는 시대적 흐름과 맥락을 같이 한다. 재정측면에서의 자치란 재원확보와 재정운영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판단에 의해서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자치는 자치단체와 주민의 관계에서 재정립된다. 그동안 주민은 공공서비스의 수혜대상으로만 인식되었으나 이제는 공공서비스의 공급에도 참여하는 주인으로서의 능동적 역할이 요구된다. 이것은 행정개념의 변천과도 관련이 있다. 최근에 많이 논의되고 있는 뉴 가버넌스(new governance) 개념이 그것이다. 뉴 가버넌스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정부기관과 비정부기구들이 상호 신뢰의 기반 위에 협조하는 서비스 연계망을 형성해 공공서비스 공급에 서로 참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정정길 2000, 536) 이는 주민참여 행정의 한 모습이다.

특히 재정투융자심사는 합의형 예산배분과

연계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그동안 방만한 재정운영의 원천은 자치단체장의 무리한 사업 추진에서 비롯된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한 통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투자심사위원의 발의로 공청회에 회부할 수 있게 공식화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7) 지방재정정보공개 제도의 도입

중앙정부는 지방재정의 평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단체장과 주민이 제정서비스에 대해 약속하는 방식의 지방재정 공시제도 도입하여 지방재정결과의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정보공개가 지방재정부문에 파급되게 된 배경에는 정보화사회가 진전되었고, 특히 지방자치실시로 인하여 대량의 정보가 지방자치단체에 집적되었으며, 지역주민의 재정정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을 신설하여 지방재정정보 공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데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런데 동 법에서 제시하는 정보공개는 주민의 공개청구를 전제로 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재정운영상황을 소극적으로 공개하는 정보공표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거하여 재정운영상황의 주민공개를 위한 획일화된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시행규칙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실질적인 재정정보의 공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보공개는 지방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지방재정 운영의 통제장치가 필요하며, 주민에게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하여 주민참여와 주민에 의한 평가를 이룰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 잘 실행되지 않는 조례(지방재정법 제 118조의 3 및 지방재정운영상황 주민공개조례)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재정운영상황 공개의 활성화를 위한 공개의 제도화 방향은 다음과 같다.(이상용 2002)

첫째, 공개의 제도화는 주민의 알 권리의 충족을 위해서만 아니라 행정책임성 제고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개대상정보와 비공개대상정보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방법으로는 주민회의 및 공청회 또는 주민모니터제도, 주민예산편성자문위원회의 설치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는 주민요구가 행정에 일방적으로 수렴되는 것을 막고 주민의 요구가 주민 측에서 수렴되어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는 보완장치로서 기능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공개의 제도화는 행정기관의 자발적인 정보공표 외에도 주민청구공개의 활성화가 필요하므로 정보공개체제를 확립한다.

셋째, 공개의 제도화는 공개일변도가 아니라 공개와 비밀의 필요성이 적절히 조화되도록

하는 동시에 주민의 권리보호와 행정기관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심의기능을 가진 제3의 독립기관을 설치 운용한다.

넷째, 공개의 제도화는 그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필요한 법적 장치의 강구가 요청된다.

다섯째, 공개 제도화의 기반조성 정도가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나타날 것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8)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평가환류기능의 강화

지방재정관리제도는 공공지출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는데 1차적인 의의를 두고 동시에 지방자치단체가 방만하거나 비능률적인 재정지출을 스스로 억제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이행하고자 노력하도록 하는 등 유인을 제공하여 재정관리의 책임성을 제고시키는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운용 및 재정관리 상태를 합리적으로 점검·평가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 건전한 재정 운영에 노력한 우수단체에 대해 재정지원, 지방채발행, 예산편성 등에 있어 차등지원하거나 재정자율성을 부여하는 등 재정운영 결과에 대해 유인을 제공하고, 반면에 재정운영이 부실하거나 예산의 낭비를 초래한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재정적 불이익을 주거나 제재조치를 취하는 유인체제의 구축이 요구된다.

V. 맺는 말

재정분권은 권한이양과 함께 지방분권을 위한 핵심사항이다. 재정분권을 위해서는 먼저 지방재정의 규모를 확충해야 한다. MB정부에 들어서 중앙정부도 국세재원의 지방세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은 지방세 수입의 확대 뿐만 아니라, 세외 수입 증가, 그리고 민간재원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재정분권을 위해서는 효율적 재원운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복식부기가 도입되는 등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지만, 효율성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도 요구된다. 셋째, 낭비를 방지하고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한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과제를 안고 있다. 지방자치가 실현되면서 지방살림살이의 책임도 지방자치체로 이전되었다. 지방자치단체도 각종 감사제도를 통해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지 않지만, 재정규모가 확대되면 될수록 투명성을 확대할 수 있는 장치와 관행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곽재기(2000),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 방안, 『지방행정』, 지방행정 연구원
 김중순(2003),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방안, 『지방행정』,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이상용(2002), 지방재정정보 공개의 활성화 방안, 한국정책학회 기획세미나
 이창균(2003), 지역개발재정운영 실태와 분권형 재정운영시스템 구축 방안, 『국토』, 국토연구원
 성태규(2003), 분권화시대 광역지방의회의 발전방안 연구, 충남발전연구원
 정정길(2000), 『행정학의 새로운 이해』, (서울:대명출판사)

평생학습시대의 도래와 충남의 평생학습 발전방안

이 영 구 | 충남발전연구원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연구원
김 만 희 |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정책본부 연구위원

1. 서론

궁즉변(窮卽變), 변즉통(變卽通), 통즉구(通卽久)라는 말이 있다. 쉽게 말해 궁극에 이르면 변화하게 되고, 변화하면 통하게 되며, 통해야 생명이 지속된다는 뜻으로 유교사상의 3대 경전중의 하나인 주역의 본질을 꿰뚫는 말이라 한다. 오래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여야 하며, 변화하기 위해 배움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선인들의 진리인 것이다. 이 말은 지식기반사회, 글로벌사회, 정보화사회로 불리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교훈을 주는 말이 아닌가 싶다. 끊임없이 부딪히고 있는 변화의 소용돌이와 수많은 정보들의 섬 없는 이동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현 시

대에는 그 어느 때 보다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개인차원의 아낌없는 학습의 노력과 조직과 사회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랭그랑(Paul Lengrand, 1965)이 주창한 평생교육은 미국의 경영학자 드러커(Peter Ferdinand Drucker, 1968)가 처음 사용한 지식근로자(knowledge worker)¹⁾가 수행해야 할 가장 적합한 수단이 아닌가 생각된다. 즉 복잡하고 빠른 변화를 요구하는 현시대의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정보수집 능력과 평생학습을 통한 자기계발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평생학습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교육과학기술부가 선정하는 평생학습도시에도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관

1) 자신의 일을 끊임없이 개선, 개발, 혁신해 부가가치를 올리는 지식을 소유한 사람으로 1968년 미국의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Peter Ferdinand Drucker)가 저술한 「단절의 시대」의 내용 중 지식사회를 다루면서 처음 사용한 말이다. 그 내용에 따르면 지식근로자의 특성은 풍부한 지적재산, 투철한 기업가 정신, 평생학습 정신, 강한 창의성, 비관료적인 유성성을 갖고 있으며 평생직장인보다 평생직업인이라는 신념을 갖는다고 하였다.

심을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민간 및 공공기관을 불문하고 각종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차원에서의 평생학습네트워크 사업, 평생학습계좌제 사업 등을 시행, 지원하고, 공공도서관, 주민자치센터, 시민회관 등의 기존 시설들을 평생학습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주민의 평생학습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지금까지 국가 및 지역단위에서 추진된 평생학습관련 현황과 사례들을 충남의 관점에서 비교해보고, 향후 충남지역에서 필요한 평생학습 관련 사업운영, 발전방안에 대한 전략적 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평생학습과 평생학습 사회

평생교육(平生敎育) 또는 평생학습(平生學習)이란 '개인의 출생에서부터 죽을 때까지(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생애에 걸친 교육(수직적 차원)과 학교 및 사회 전체 교육(수평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형식적, 비형식적인 모든 교육활동을 말한다. 즉 인간의 삶 전체가 하나의 학습활동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다. 이러한 평생학습은 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에서 발전되어 왔는데 학습에 있어서 스스로 계획하고 학습자원을 탐구하며 평가하는데 개인이 주도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뜻한다.

자기주도학습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성인들의 자발적인 학습활동과 노력에 대한 Houle과 Tough의 연구들(Houle, 1961; Tough, 1967; 1971; 1979)로 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비록 자기주도학습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교사의 도움 없이 학교 밖에서 성인 스스로 자신이 학습을 활발히 계획하여 수행하는 현상에 주목하였으며, 특히 교사없이 학습자 혼자 학습활동을 수행할 때 성인 학습자가 거치게 되는 과정적 절차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으며, 이 절차를 '자기교수(self-teaching)'의 12단계로 제시하면서 학습과정에 대한 계획과 방향에 있어서 학습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초창기의 이러한 자기주도학습은 그 의미가 지속적으로 확장되면서 평생교육으로 발전하였다. 한승희(2005)는 교육이라는 의미 속에는 평생동안 교육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존재하지만 '평생'이란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평생교육을 쓰는 것이며 이는 학교 외의 교육도 포함하여 교육영역을 확장시키고 교육민주화를 촉구하는 것이라 하였다. 평생교육이란 말 그대로 평생에 걸쳐서 행하여지는 교육을 의미하는 것이다. 연령과 사회의 한계를 벗어난 일생에 걸친 교육을 의미한다. 이것은 '평생학습의 실현'이라는 의미에서 기존에 있었던 '학교 중심의 교육'이라는 교육의 관념적 한계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생각의 일환으로 파악될

수 있다. 즉, 기존의 학교교육의 대상은 아동, 청소년이었다면 평생교육영역에서는 성인 학습자가 포함된다는 뜻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평생학습사회란 평생학습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평생학습을 위한 여러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개인은 개인개발을 위한 노력을 하며 기업은 학습조직을 통해 근로자가 지식근로자가 되도록 지원하며, 국가 또한 정책적으로 국민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현대사회는 지식정보화 사회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성인이 학습을 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힘들다. 즉, 학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 되어버린 것이다(전하영, 2007).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은 개인의 영달뿐만 아니라 이를 발판으로 한 지역과 사회의 경쟁력 제고 및 나아가 국가의 발전과도 직결되는 현 시대의 교육트렌드가 된 것이며, 개인과 조직, 사회가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해주고 있다.

1) 우리나라의 평생학습활동 현황²⁾

2008년도에 발표한 '2008 평생학습실태조사

'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평생학습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 수 있다. 이 조사는 25~64세에 이르는 성인을 대상으로 형식교육(학교교육)과 비형식교육(직장연수, 학원, 평생교육기관 등의 강좌)을 포괄하여 평생학습 참여실태를 알아본 것으로서 그 내용은 아래의 내용과 같다.

2008년도 우리나라 성인의 평생학습참여율은 26.4%, 형식교육 4.1%, 비형식교육 23.9%로 2007년 조사결과와 비교해서, 평생학습 참여율은 3.4%, 형식교육 참여율은 1.6%p, 비형식교육 참여율은 2.5%p 하락하였다.³⁾

평생학습 참여율이 하락한 이유는 고소득자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상승한 반면, 실업인구·비경제활동인구·중간 소득이하 집단의 참여율이 감소함에 따라 전체 참여율이 하락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며, 2008년 평생학습 참여율은 OECD 국가들의 2005년도 평균치인 26%와 비슷한 수준이나, 직업관련 비형식교육의 경우 OECD 국가 평균 참여율인 18%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11.7%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07년 대비, 2008년 평생학습 참여율이 하락하였으나 직업관련 비형식교육의 참여율이 상승한 것은 국민들이 취업이나 직무능력의 향상을 위해 관련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2)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08년 평생학습 실태조사 결과발표" 내용을 재수정

3) 2007년 평생학습 참여율 : 29.8%(형식교육 참여율 5.7%, 비형식교육 참여율 26.4%)

4) 2007년도 직업관련-비형식교육의 참여율은 9.2%, 참여시간은 104.4시간임. OECD 국가 평균 직업관련 비형식교육 참여율은 18%, 평균 참여시간은 388.6시간으로 우리나라가 현저히 낮은 편임

〈표 1〉 2008년 평생학습 참여율

(단위 : %)

구 분	전체참여율 (형식,비형식)	학습범주별 참여율			
		형식교육		비형식교육	
		전체	(초기교육단계 학생 제외)	전체	(직업관련)
전 체	26.4 (▽3.4)	4.1 (▽1.6)	2.4 (▲0.1)	23.9 (▽2.5)	11.7 (▲2.5)
성 별					
남자	24.4 (▽4.5)	4.8 (▽2.4)	2.2 (▲0.2)	21.4 (▽3.2)	14.0 (▲1.0)
여자	28.4 (▽2.3)	3.4 (▽0.8)	2.6 (▲0.1)	26.3 (▽1.9)	9.4 (▲4.1)
연 령					
25-34세	32.7 (▽3.6)	9.7 (▽5.6)	3.7 (-)	26.4 (▽0.3)	14.8 (▲4.1)
35-44세	27.5 (▽1.7)	2.8 (▲0.9)	2.8 (▲1.1)	26.0 (▽2.4)	12.4 (▲2.6)
45-54세	21.3 (▽5.2)	1.5 (▽1.0)	1.5 (▽0.8)	20.5 (▽4.9)	9.4 (▲1.8)
55-64세	20.8 (▽3.1)	0.2 (▽0.5)	0.2 (▽0.5)	20.6 (▽2.9)	8.1 (▲0.6)
학 력					
중졸이하	14.9 (▽1.9)	0.4 (▲0.2)	0.4 (▲0.2)	14.5 (▽2.1)	6.3 (▲0.1)
고졸	22.1 (▽2.4)	4.7 (▽1.4)	1.8 (▲0.1)	19.3 (▽1.3)	9.0 (▲3.3)
대졸이상	34.3 (▽5.1)	4.8 (▽2.3)	3.5 (▽0.1)	31.5 (▽4.1)	16.0 (▲2.3)
경제활동상태					
취업	24.7 (▽1.8)	3.1 (▲0.5)	2.2 (-)	23.1 (▽2.1)	13.9 (▲2.0)
실업	27.3 (▽8.9)	6.0 (▽10.8)	2.1 (▽1.9)	25.2 (▽0.4)	16.1 (▲3.0)
비경제활동	30.4 (▽5.2)	6.4 (▽3.8)	2.7 (▲0.5)	25.7 (▽3.4)	5.6 (▲3.0)
지 역					
서울 및 광역시	24.0 (▽5.4)	4.1 (▽3.4)	2.5 (▲0.1)	21.5 (▽3.8)	8.7 (▲0.7)
중소도시	29.0 (▽0.3)	4.5 (▲0.6)	2.4 (▲0.1)	26.2 (▽0.7)	14.3 (▲5.4)
농어촌	27.9 (▽3.8)	3.2 (▽1.0)	1.8 (▽0.1)	25.8 (▽2.5)	14.9 (▲1.9)

※ 2008년 Base: 전체(n=26,927,421), 형식교육 참여자(n=1,104,914), 비형식교육 참여자(n=6,430,172)

※ ()은 2007년 대비 증감을 나타냄(▲증가, ▽감소)

관심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2008년도 우리나라 성인의 평생학습참여율은 26.4%로 2007년도 대비 3.4% 하락하였고, 형식교육은 4.1%, 비형식교육은 23.9%로 2007년 대비 각각 1.6%p, 2.5%p 하락한 것을 알

수 있다.

2008년도 직업관련-비형식교육 참여율은 11.7%, 평균참여시간은 103.4시간으로 2007년 조사결과에 비해 참여율은 2.5%p 증가하고 참여시간은 1시간 감소하였다.⁴⁾

〈표 2〉 비형식교육 참여율

(단위 : %)

구 분		비형식 참여율	취업/직업 능력	교양문화 관련	시민교육	취미/여가/ 스포츠	성인기초	기타
전체		23.9 (▽2.5)	11.7 (▲2.5)	3.6 (▽1.4)	1.2 (▲0.5)	11.2 (▽1.7)	(▽0.2)	(-)
남자	취업	21.7 (▽3.1)	14.3 (▲1.3)	2.9 (▽0.2)	0.6 (-)	7.1 (▽2.0)	(-)	(▽0.1)
	실업	18.6 (▽3.7)	9.5 (▽6.7)	2.9 (▽3.3)	1.0 (▲1.0)	5.8 (▲1.3)	(-)	(▽0.7)
	비경제인구	18.6 (▽5.8)	9.9 (▲2.2)	2.7 (-)	(-)	7.0 (▽5.1)	(-)	(-)
	150만원 미만	15.4 (▽6.1)	11.2 (▲0.5)	0.8 (▽2.4)	1.0 (▲0.5)	2.6 (▽1.9)	(-)	(▽1.2)
	150~300만원	21.8 (▲1.4)	13.6 (▲3.0)	2.9 (▲0.5)	0.3 (▽0.3)	7.6 (▽0.2)	(-)	(-)
	300~500만원	21.3 (▽6.2)	14.1 (▽1.0)	2.8 (▽1.4)	0.6 (▲0.1)	7.0 (▽2.8)	(-)	(▽0.2)
	500만원 이상	26.1 (▽4.9)	16.7 (▲2.1)	5.0 (▲1.1)	1.4 (▲1.0)	9.6 (▽4.1)	(-)	(-)
	여자 취업	26.0 (-)	12.9 (▲3.3)	3.8 (▽2.3)	1.1 (▲0.2)	12.0 (▽1.0)	(-)	(▽0.3)
여자	실업	35.6 (▲1.5)	26.5 (▲21.8)	1.4 (▲1.4)	3.3 (▲3.3)	8.3 (▽19.5)	(-)	(-)
	비경제인구	26.1 (▽3.5)	5.3 (▲3.2)	5.1 (▽2.6)	2.3 (▲1.3)	18.9 (▽0.3)	(▽0.6)	(▽0.9)
	150만원 미만	15.9 (▽5.9)	5.5 (▽1.2)	1.4 (▽1.4)	(▽0.5)	8.8 (▽0.5)	0.5 (▽1.7)	(▽0.5)
	150~300만원	24.0 (▲1.9)	7.5 (▲4.3)	3.2 (▽2.6)	1.3 (▲0.3)	15.2 (▲1.5)	(-)	(▽0.4)
	300~500만원	26.7 (▽8.0)	8.4 (▲2.4)	4.9 (▽3.7)	2.7 (▲1.8)	15.6 (▽5.9)	(0.1)	(▽0.8)
	500만원 이상	38.7 (▲1.5)	19.3 (▲11.0)	8.0 (▽0.4)	1.5 (▽0.2)	21.4 (▽1.8)	(-)	(▽0.7)

비형식 교육에 참여한 성인 중 가장 많이 참여한 프로그램은 '스포츠 프로그램'으로 24.3%를 차지하고 있으며, 형식교육의 연평균 교육비는 453.8만원, 비형식교육의 연평균 교육비는 33.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학습 참여의 장애요인으로서는 '시간이 없어서(가족부양 책임 때문)'가 81.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근무시간과 겹쳐서'(40.1%), '교육·훈련비용이 너무 비싸서'(33.8%)의 순이었다. 또한 우리나라 성인이 가장 빈번하게 참

여하는 무형식 학습은 '컴퓨터나 인터넷을 활용한 정보나 사실 학습(49.0%)'으로 나타났다.

비형식교육에서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평생학습 참여율을 분석해보면,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인구의 경우 남자는 전체 비형식 참여율이 3.7%p(직업관련 6.7%) 감소한 반면에 여자 역시 취미·여가·스포츠 참여율이 19.5%p 감소하였고, 비경제활동 인구의 경우는 남자는 취미·여가·스포츠 5.1%p 줄고, 여자는 교양문화관련에서 참여율이 2.6%p 감소하였다.

〈표 3〉 직업관련 비형식교육 참여율

(단위 : %, 시간)

		직업관련 비형식교육 참여율(%)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전체
한국	전체	6.3	9.0	16.0	11.7
	남	10.7	11.3	16.5	14.0
	여	3.6	7.2	15.3	9.4
OECD 평균	전체	7.4	17.2	31.5	18.0
	남	8.0	17.9	31.1	18.6
	여	6.3	16.6	32.1	17.4

※출처: OECD평균- 「OECD 교육지표 2008」표C5.1a, 한국- 2008 평생학습실태조사

※Base: 전체(n=26,927,421), 참여시간 Base: 직무관련 비형식교육 참여자(n=3,146,065)

2008년도 직업관련-비형식교육 참여율은 11.7%로 2007년 참여율 9.2%와 비교하면 2.5%p 증가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평균 참여율 18%와 비교할 때 낮은 편이다.

〈표 4〉 비형식교육 참여프로그램

(단위 : %)

	스포츠강좌	컴퓨터	외국어	경제·경영	직업교육
전체	24.3	14.1	10.1	10.1	7.5
남자	21.5	15.5	11.8	17.9	11.4
여자	26.5	13.0	8.8	4.0	4.4

※Base: 비형식교육 개별 참여 프로그램 (n=8,854,493)

비형식교육에 참여한 성인 중 가장 많이 참여한 프로그램은 '스포츠 강좌'(24.3%)이고, 그 뒤를 이어 컴퓨터(14.1%), 외국어(10.1%)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 비형식교육 참여시간

(단위 : 시간)

	비형식교육								
	전 체						직업관련(OECD)		
				직업관련(2008평생학습실태조사)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전체	110.4 (▽32.9)	124.6 (▲2.1)	118.2 (▽14.0)	82.6	134.4	103.4	404.7	384.0	388.6
중졸이하	28.3 (▽22.2)	95.2 (▲20.8)	66.6 (▽ 0.3)	9.8	55.0	26.2	242.9	240.8	209.7
고졸	89.1 (▽88.9)	120.8 (▲3.2)	108.9 (▽32.5)	71.8	131.4	98.6	393.4	370.1	370.5
대졸이상	130.8 (▽ 5.1)	132.4 (▽4.4)	131.6 (▽ 4.8)	97.5	146.0	116.0	684.1	685.9	669.0

※2008 Base: 전체(n=26,927,421), 직업관련 비형식교육 참여자(n=3,146,065)

※출처: OECD평균-「OECD 교육지표 2008」표C5.1a, 한국- 2008 평생학습실태조사

※()은 2007년 대비 증감을 나타냄(▲증가, ▽감소)

2008년 직업관련-비형식교육 평균참여시간 비교하면 이는 상당히 낮은 참여 시간이다.
은 103.4시간으로 OECD 평균치(388.6시간)와

〈표 6〉 평생학습 참여자의 연평균 1인당 교육비

(단위 : 만원)

		형식교육	비형식교육	전체(형식·비형식)
전체		453.8 (▽68.7)	33.7 (▽14.2)	101.0 (▽41.8)
성	남자	495.8 (▽51.9)	26.2 (▽26.4)	121.1 (▽60.1)
	여자	393.5 (▽86.0)	39.9 (▽4.0)	83.7 (▽22.8)
연령	25-34세	518.8 (▽60.0)	42.5 (▽34.2)	189.2 (▽110.2)
	35-44세	363.4 (▲9.5)	29.9 (▽7.6)	65.8 (6.5)
	45-54세	219.0 (▽132.2)	36.5 (▽0.6)	51.0 (▽17.4)
	55-64세	67.2 (▽71.3)	17.9 (▽12.9)	18.4 (▽16.1)
학력	중졸이하	25.2 (▽74.8)	8.3 (▽1.6)	8.7 (▽2.0)
	고졸	433.1 (▽121.3)	28.0 (▽1.6)	116.1 (▽46.2)
	대졸이상	485.7 (▽11.3)	41.0 (▽23.6)	105.0 (▽43.0)
지역	서울 및 광역시	422.4 (▽161.4)	32.0 (▽14.9)	100.5 (▽89.3)
	중소도시	539.2 (▲130.6)	38.5 (▽25.4)	119.0 (▲6.2)
	농어촌	296.1 (▽126.0)	26.9 (▲5.6)	58.6 (▽16.7)

※ 1인당 평생학습 투자비용은 '형식교육 지출액' 및 '비형식교육 지출액'을 합한 금액임.
 ※ 지원액을 제외한 본인 부담액임.
 ※ Base: 형식교육 참여자(n=1,104,914)
 ※ 비형식교육 Base: 비형식교육 참여자(n=6,430,172)
 ※ 전체 Base: 형식·비형식 참여자(n=7,108,965)
 ※ ()은 2007년 대비 증감을 나타냄(증가, 감소)

2008년도 1인당 연간 평생학습 교육비는 101만원으로 2007년(142.8만원)과 대비하여 41.8만원이 감소하였다. 연평균 형식교육의 교육비는 453.8만원, 비형식교육의 교육비는 33.7만원으로 2007년 조사결과(각각 522.5만원, 47.9만원)와 비교했을 때, 형식교육 68.7

만원, 비형식교육 14.2만원이 각각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07년과 대비하여 형식교육의 1인당 연간 교육비는 여자(86만원)가 남자(51.9만원)보다 크게 감소하였고 비형식교육의 1인당 연간 교육비는 남자(26.4만원)가 여자(4만원)보다 크게 감소하였다.

〈표 7〉 형식교육 참여시간

(단위 : 시간)

	형식교육					
	전 체			(초기교육단계 참여 학생 제외)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전체	556.5 (▲6.7)	546.0 (▽73.1)	552.2 (▽23.2)	314.5 (▽49.3)	383.9 (▽135.6)	352.2 (▽97.7)
중졸이하		310.1 (▽265.9)	310.1 (▽265.9)		310.1 (▽265.9)	310.1
고졸	775.2 (▲145.1)	712.3 (▽106.7)	749.1 (▲68.3)	573.2 (▲225.5)	406.2 (▽123.4)	464.9
대졸이상	357.9 (▽96.1)	395.4 (▽119.4)	372.5 (▽109.2)	226.7 (▽147.2)	374.4 (▽140.1)	296.3

※ Base: 전체(n=26,927,421)
 ※ 형식교육 Base: 전체(n=1,109,914)/초기교육단계 참여 학생 제외(n=634,709)
 ※ ()은 2007년 대비 증감을 나타냄(▲증가, ▽감소)

2008년 형식교육 참여시간은 552.2시간으로 2007년(575.4시간) 대비 23.2시간 감소하였는데 남자는 6.7시간 소폭 증가한 반면, 여자는 73.1시간이나 크게 감소하였다.

한편, 여성(28.4%)이 남성(24.4%)보다 4.0% 높게, 저연령층(32.7%)이 고연령층(20.8%)보

다 11.9% 높게, 대졸이상 고학력 집단(34.3%)이 중졸이하 저학력 집단(14.9%)보다 19.4% 높게, 비경제활동인구(30.4%)가 취업자(24.7%)보다 5.7% 높게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참여 장애 요인

(단위 : %, 중복)

	교육훈련 비용이 너무 비싸서	근무시간과 겹쳐서	시간이 없어서	가까운 거리에 교육훈련 기관이 없어서	학창시절과 같이 학습에 임할 자신이 없어서	건강 또는 나이 때문에
전 체	33.8	40.1	81.6	20.7	5.8	3.7
성별						
남자	28.4	62.6	64.2	14.4	3.8	2.1
여자	37.6	24.5	93.7	25.0	7.2	4.9
연령						
25~34세	41.8	49.6	84.3	15.6	4.8	1.1
35~44세	36.3	43.2	86.8	14.8	6.3	1.8
45~54세	26.4	30.6	73.2	31.5	7.6	4.9
55~64세	14.7	18.1	74.5	33.5	4.4	16.0
최종 학력						
중졸이하	17.6	23.7	58.6	38.3	2.9	13.6
고졸	40.4	39.9	85.9	16.6	6.9	2.9
대졸이상	32.0	44.0	83.4	20.0	5.6	2.2
월 가구 소득						
150만원 미만	42.0	29.3	47.9	40.0	1.7	7.1
150~300만원 미만	39.4	41.7	87.4	17.7	5.6	2.5
300~500만원 미만	28.9	37.5	81.7	16.3	7.2	3.2
500만원 이상	28.4	37.9	100.2	25.1	6.3	5.3
무응답	34.8	88.7	64.7	17.2	4.5	3.2
지역						
서울 및 광역시	40.7	45.8	84.5	12.7	7.5	3.3
중소도시	29.4	32.9	82.6	16.6	5.0	4.8
농어촌	23.9	40.4	70.6	54.5	3.0	2.5

※Base: 참여 희망 교육이나 학습이 있는 응답자 (n=9,410,530)

평생학습 참여의 장애요인으로서는 '시간이 없어서(가족부양 책임 때문)'가 81.6%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는 '근무시간과 겹쳐서'(40.1%), '교육·훈련비용이 너무 비싸서'(33.8%) 순이었다. 여자의 경우는 '시간이 없어서'가 93.7%로 남자 64.2%보다 높아 시간의 제약을 더 많

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자의 경우는 '근무시간과 겹쳐서'가 62.6%로 여자(24.5%)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건강 또는 나이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이유가 많았고 지역별로는 서울 및 광역시와 중소도시 지역이 농어촌에 비해 '비용이 비싸서', '시

간이 없어서'를 장애요인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다.

전체적으로 평생학습 참여효과는 전반적으로 형식교육의 성과가 비형식교육의 성과보다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개인적 관점에서는 비형식교육의 성과가 높은 반면, 직업적·사회적 관점에서는 형식교육의 성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비형식교육의 경우 스포츠 강좌 등에 대한 높은 참여율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적인 관심에 의해 참여하기 때 문임을 알 수 있다.

직업관련-비형식교육의 참여율과 참여시간이 아직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현저히 저조한 수준이나, 작년보다 평생학습 참여율이 낮아진 상황에서 소폭이나마 증가한 것을 볼 때 향후에는 점차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되는 바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 정부 및 정부차원의 효율적·체계적인 지원방안을 재고해보고,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국민들의 참여 촉진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겠다.

2) 평생학습도시 지정현황

평생학습도시란 개인의 자아실현과 사회적 통합의 증진, 경제적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궁극적인 개인 삶의 질과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공동체 건설을 도모하는 총체적 도시 재구조화

(Restructuring)운동이자 지역사회의 모든 교육자원을 기관간 연계, 지역사회간 연계, 국가간의 연계를 이룸으로써 네트워킹 학습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지역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지역사회교육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평생교육정보망, 2009).

평생학습도시는 개별학습과 조직학습이 원활하게 일어나서 개인적 차원에서는 인적자본, 사회적 차원에서는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어 한편으로는 경제적 생산성 제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결속력을 제고시켜 궁극적으로 학습경제가 요구하는 지적자본이 충분한 지역사회를 형성한다(이희수, 2003).

이렇게 볼 때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운동은 지식기반사회의 지역혁신 전략으로 평생학습에 대한 참여확대 지원과 평생학습을 이용한 사회적 재생과 경제적 재생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평생학습도시는 궁극적으로 학습공동체로서 지역사회의 모든 교육자원을 기관간 연계, 지역사회간 연계, 국가간 연계로 확대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송두범, 2006).

세계적으로 학습도시화 사업은 1979년 4월, 이웃나라인 일본에서 가케가와시가 최초로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한 가운데 학습도시의 선구적 모범사례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4년 창원시에서 평생교육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서부터 평생학습도시 사업이 진행되기 시작하였으며, 1999년에는 광명시가 한국

최초로 평생학습도시 선언을 하여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정부는 평생교육의 세계 흐름에 부응하여 2000년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하였으며, 2001년부터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교육인적자원부의 평생학습도시 조성정책을 통해 지역의 경제적 발전·사회적 통합·도시경영 합리화·학습공동체 형성 등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다.

학습도시는 경제적 발전을 통해 지식기반경제를 선도하고 개인의 평생고용 가능성을 제

고하며, 사회적 통합을 추구하여 더불어 잘 살며, 정보·지식의 격차를 해소하며,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여 민주적인 사회를 건설한다. 또한 현재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이원화되어 있는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평생교육행정지원체제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학습을 중심으로 종합행정·지방행정·복지행정을 구현하며, 기존의 학습자원들을 연계·활용하여 시민들의 자아실현을 극대화한다(평생교육정보망, 2009).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은 지역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2001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현

〈표 9〉 우리나라의 평생학습도시 선정 지자체 현황

연도	선 정 도 시
2001	광명시, 진안군, 유성구
2002	제주시, 부천시, 해운대구
2003	순천시, 서귀포시, 연수구, 거창군, 안동시
2004	관악구, 이천시, 청주시, 금산군, 전주시, 목포시, 칠곡군, 창원시
2005	서울 양천구, 서울 성북구, 부평구, 수원시, 구리시, 단양군, 제천시, 부여군, 광주 남구, 익산시, 대구 동구, 대구 달서구, 경남 김해, 경남 남해
2006	서울 영등포구, 부산 연제구, 인천 남구, 광주 동구, 광주 광산구, 울주군, 안산시, 용인시, 시흥시, 평택시, 삼척시, 화천군, 진천군, 아산시, 태안군, 서산시,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여주시, 광양시, 곡성군, 양산시, 하동군
2007	서울 강동구, 강서구, 마포구, 부산 사상구, 대전 대덕구, 울산 중구, 경기 과천시, 안양시, 강원 강릉시, 횡성군, 충남 서천군, 천안시, 전북 군산시, 전남 강진군, 영암군, 경북 구미시, 경산시, 경남 진주시, 통영시
2008	지정지역 없음
계	76개 도시

교육과학기술부)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으며, 2009년 현재 전국의 평생학습도시는 총 76개가 지정되어 있다(2008년에는 지정이 없었음). 최근 학습을 지역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 지자체들이 증가함으로써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기 위해 치열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안 된 지자체들도 평생교육 관련 조직을 신설하여 평생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지정된 평생학습도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지정도시간의 활성화 정도에는 편차가 심하여 학습도시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하지 못하는 도시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3) 충청남도의 평생학습활동 현황

충청남도는 지난 2008년 10월 30일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조례」를 전국 최초로 공포하여, 주민의 평생교육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효과적인 평생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완료하였다. 또한 평생교육을 통한 개인의 자아실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진흥시책 추진을 위해 「충청남도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하였다. 충청남도 평생교육협의회는 의장에 도지사, 부의장에 부교육감이 선정되었으며, 평생교육기관 운영자, 대학교수 등 전문가, 도의원, 관계공무원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되었다. 협의회 주요임무

는 연도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수립과 평생교육지원 업무 기관간 협력과 조정, 평생교육 진흥시책 제도개선 등으로 도민들의 평생학습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특히 배움의 기회를 놓친 사람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교육의 공공성을 보장하며 이들로 하여금 새로운 도전과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충청남도는 '전 시·군의 학습도시화'를 정책적 기조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광역자치단체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남은 현재 16개 시·군 중, 7개 지역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 현황은 금산군(04년), 부여군(05년), 서산시(06년), 태안군(06년), 아산시(06년), 천안시(07년), 서천군(07년)과 같으며, 이외의 시·군에서도 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충청남도의 전 시·군이 학습도시로 지정받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광역차원에서는 네트워크를 통한 전 시·군의 학습도시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양병찬(2007)이 주장한 학습도시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과제 중 하나도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간의 네트워크 활성화이다. 즉 대부분의 평생교육 담당 실무자들은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연계·협력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 및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협력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개개인의 실무자들이 필

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연계·협력을 가능하게 할 지원기구 혹은 조력자가 부재하기 때문으로 이러한 역할을 시청의 평생교육담당과 평생교육센터에서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정기적인 실무자 회의, 통합 연수, 평생교육 영역별 실무자 네트워크 구성 등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학습도시 활성화를 위해 지원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사업을 토대로 북부권 네트워크사업(2007), 충청남도 평생학습도시 통합네트워크사업(2009)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광의의 의미에서 광역적 학습도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습도시화를 주창하면서도 지역적 특성과 사회문화적인 요소를 감안하여 프로그램의 운영과 계획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지정된 학습도시를

〈표 10〉주제에 따른 전국대비 충남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현황

구 분	주 제 구 분						
	계	학력보완	성인기초/문자해독	직업능력 향상	인문교양	문화예술	시민참여
총 계	61,806(100%)	7,455(100%)	1,638(100%)	12,270(100%)	19,151(100%)	18,238(100%)	3,054(100%)
서울특별시	13,017(21.1%)	3,033(40.7%)	210(12.8%)	3,223(26.3%)	3,109(16.2%)	3,162(17.3%)	280(9.2%)
부산광역시	3,600(5.8%)	148(2.0%)	82(5.0%)	415(3.4%)	1,293(6.8%)	1,041(5.7%)	621(20.3%)
대구광역시	2,769(4.5%)	643(8.6%)	90(5.5%)	337(2.7%)	937(4.9%)	696(3.8%)	66(2.2%)
인천광역시	2,062(3.3%)	216(2.9%)	71(4.3%)	286(2.3%)	777(4.1%)	661(3.6%)	51(1.7%)
광주광역시	1,432(2.3%)	97(1.3%)	29(1.8%)	420(3.4%)	341(1.8%)	478(2.6%)	67(2.2%)
대전광역시	1,007(1.6%)	200(2.7%)	12(0.7%)	296(2.4%)	258(1.3%)	228(1.3%)	13(0.4%)
울산광역시	1,297(2.1%)	222(3.0%)	14(0.9%)	523(4.3%)	246(1.3%)	167(0.9%)	125(4.1%)
경기도	14,702(23.8%)	1,268(17.0%)	466(28.4%)	2,249(18.3%)	5,459(28.5%)	4,663(25.6%)	597(19.5%)
강원도	1,122(1.8%)	47(0.6%)	41(2.5%)	177(1.4%)	302(1.6%)	409(2.2%)	146(4.8%)
충청북도	1,734(2.8%)	39(0.5%)	75(4.6%)	426(3.5%)	626(3.3%)	514(2.8%)	54(1.8%)
충청남도	3,414(5.5%)	345(4.6%)	99(6.0%)	845(6.9%)	1,025(5.4%)	877(4.8%)	223(7.3%)
전라북도	4,528(7.3%)	237(3.2%)	109(6.7%)	975(7.9%)	1,322(6.9%)	1,622(8.9%)	263(8.6%)
전라남도	3,525(5.7%)	299(4.0%)	114(7.0%)	831(6.8%)	971(5.1%)	1,100(6.0%)	210(6.9%)
경상북도	2,106(3.4%)	269(3.6%)	41(2.5%)	365(3.0%)	792(4.1%)	559(3.1%)	80(2.6%)
경상남도	4,184(6.8%)	264(3.5%)	137(8.4%)	687(5.6%)	1,270(6.6%)	1,642(9.0%)	184(6.0%)
제주도	1,307(2.1%)	128(1.7%)	48(2.9%)	215(1.8%)	423(2.2%)	419(2.3%)	74(2.4%)

대상으로 주제별, 대상별, 기간별, 인원별 프로그램 수행현황을 조사한 국가평생교육통계를 살펴보면서 지역적 특성과 향후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프로그램 주제에 따른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실행을 보면 충청남도는 전체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문교양 프로그램이 1,025건으

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비교했을 때 시민참여 부분이 7.3%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서울, 부산, 경기 등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지역을 제외하고 전북과 함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학력보완이나 문화예술 부분의 비중은 낮게 나타났다.

〈표 11〉수요대상에 따른 전국대비 충남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현황

구 분	수요대상별					
	계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	통합
총 계	61,806(100%)	10,784(100%)	8,851(100%)	29,874(100%)	4,152(100%)	8,145(100%)
서울특별시	13,017(21.1%)	1,265(11.7%)	2,551(28.8%)	6,304(21.1%)	829(20.0%)	2,068(25.4%)
부산광역시	3,600(5.8%)	1,021(9.5%)	399(4.5%)	1,470(4.9%)	155(3.7%)	555(6.8%)
대구광역시	2,769(4.5%)	998(9.3%)	251(2.8%)	1,186(4.0%)	178(4.3%)	156(1.9%)
인천광역시	2,062(3.3%)	510(4.7%)	202(2.3%)	834(2.8%)	216(5.2%)	300(3.7%)
광주광역시	1,432(2.3%)	164(1.5%)	125(1.4%)	833(2.8%)	93(2.2%)	217(2.7%)
대전광역시	1,007(1.6%)	77(0.7%)	68(0.8%)	729(2.4%)	52(1.3%)	81(1.0%)
울산광역시	1,297(2.1%)	136(1.3%)	107(1.2%)	926(3.1%)	14(0.3%)	114(1.4%)
경기도	14,702(23.8%)	3,495(32.4%)	2,143(24.2%)	6,850(22.9%)	938(22.6%)	1,276(15.7%)
강원도	1,122(1.8%)	76(0.7%)	253(2.9%)	456(1.5%)	56(1.3%)	281(3.4%)
충청북도	1,734(2.8%)	189(1.8%)	238(2.7%)	1,014(3.4%)	188(4.5%)	105(1.3%)
충청남도	3,414(5.5%)	460(4.3%)	328(3.7%)	1,685(5.6%)	268(6.5%)	673(8.3%)
전라북도	4,528(7.3%)	501(4.6%)	603(6.8%)	2,394(8.0%)	449(10.8%)	581(7.1%)
전라남도	3,525(5.7%)	435(4.0%)	458(5.2%)	1,614(5.4%)	347(8.4%)	671(8.2%)
경상북도	2,106(3.4%)	427(4.0%)	154(1.7%)	1,164(3.9%)	164(3.9%)	197(2.4%)
경상남도	4,184(6.8%)	855(7.9%)	641(7.2%)	1,889(6.3%)	180(4.3%)	619(7.6%)
제주도	1,307(2.1%)	175(1.6%)	330(3.7%)	526(1.8%)	25(0.6%)	251(3.1%)

수요대상에 따른 프로그램 현황을 살펴보면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하는 프로그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대비 5.6%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어린이(460건, 4.3%)와 청소년(328건, 3.7%) 관련 프로그램은 낮게 나타났다. 반면 급격한

노령화현상을 반영하듯이 노인관련 프로그램은 268건, 전국대비 6.5%를 차지해 타 프로그램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전 연령층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프로그램 역시 673건으로 전국대비 8.3%로 지역내에서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교육기간에 따른 전국대비 충남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현황

구 분	교육기간				
	계	1개월 미만 ²⁾	1개월~3개월 미만	3개월~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총 계	61,806(100%)	5,609(100%)	13,427(100%)	30,029(100%)	12,741(100%)
서울특별시	13,017(21.1%)	1,016(18.1%)	3,006(22.4%)	5,558(18.5%)	3,437(27.0%)
부산광역시	3,600(5.8%)	230(4.1%)	943(7.0%)	2,121(7.1%)	306(2.4%)
대구광역시	2,769(4.5%)	64(1.1%)	516(3.8%)	1,973(6.6%)	216(1.7%)
인천광역시	2,062(3.3%)	66(1.2%)	353(2.6%)	1,189(4.0%)	454(3.6%)
광주광역시	1,432(2.3%)	184(3.3%)	373(2.8%)	558(1.9%)	317(2.5%)
대전광역시	1,007(1.6%)	87(1.6%)	193(1.4%)	541(1.8%)	186(1.5%)
울산광역시	1,297(2.1%)	327(5.8%)	436(3.2%)	408(1.4%)	126(1.0%)
경기도	14,702(23.8%)	1,315(23.4%)	2,773(20.7%)	7,656(25.5%)	2,958(23.2%)
강원도	1,122(1.8%)	77(1.4%)	382(2.8%)	412(1.4%)	251(2.0%)
충청북도	1,734(2.8%)	141(2.5%)	327(2.4%)	799(2.7%)	467(3.7%)
충청남도	3,414(5.5%)	527(9.4%)	601(4.5%)	1,498(5.0%)	788(6.2%)
전라북도	4,528(7.3%)	513(9.1%)	954(7.1%)	1,981(6.6%)	1,080(8.5%)
전라남도	3,525(5.7%)	300(5.3%)	780(5.8%)	1,641(5.5%)	804(6.3%)
경상북도	2,106(3.4%)	211(3.8%)	464(3.5%)	1,186(3.9%)	245(1.9%)
경상남도	4,184(6.8%)	310(5.5%)	952(7.1%)	2,078(6.9%)	844(6.6%)
제주도	1,307(2.1%)	241(4.3%)	374(2.8%)	430(1.4%)	262(2.1%)

주: 1) 1개월이상 프로그램만 해당 됨.

2) 1개월이상 프로그램 조사대상 중 교육기간이 1개월미만이지만 교육시수가 8시간 이상인 프로그램

교육기간에 따른 프로그램 현황을 살펴보면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의 프로그램이 1,498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국 대비 5.0%로 평균에 못미치는 수치이며, 1개월 미만의 프로그램이 527건으로 9.4%를 차

지해 전국대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개월 이상의 장기 프로그램 역시 788건으로 전체 6.2%를 차지해 평균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13〉주제에 따른 전국대비 충남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현황

구 분	수강인원별				
	계	50명 미만	50명~100명미만	100명~150명미만	150명이상
총 계	61,806(100%)	45,103(100%)	8,939(100%)	2,518(100%)	5,246(100%)
서울특별시	13,017(21.1%)	9,723(21.6%)	1,774(19.8%)	525(20.8%)	995(19.0%)
부산광역시	3,600(5.8%)	2,415(5.4%)	637(7.1%)	147(5.8%)	401(7.6%)
대구광역시	2,769(4.5%)	1,658(3.7%)	849(9.5%)	106(4.2%)	156(3.0%)
인천광역시	2,062(3.3%)	1,484(3.3%)	290(3.2%)	106(4.2%)	182(3.5%)
광주광역시	1,432(2.3%)	1,100(2.4%)	195(2.2%)	46(1.8%)	91(1.7%)
대전광역시	1,007(1.6%)	755(1.7%)	134(1.5%)	52(2.1%)	66(1.3%)
울산광역시	1,297(2.1%)	879(1.9%)	328(3.7%)	16(0.6%)	74(1.4%)
경기도	14,702(23.8%)	10,250(22.7%)	2,248(25.1%)	758(30.1%)	1,446(27.6%)
강원도	1,122(1.8%)	754(1.7%)	226(2.5%)	74(2.9%)	68(1.3%)
충청북도	1,734(2.8%)	1,209(2.7%)	184(2.1%)	47(1.9%)	294(5.6%)
충청남도	3,414(5.5%)	2,850(6.3%)	291(3.3%)	98(3.9%)	175(3.3%)
전라북도	4,528(7.3%)	3,552(7.9%)	466(5.2%)	151(6.0%)	359(6.8%)
전라남도	3,525(5.7%)	2,623(5.8%)	367(4.1%)	111(4.4%)	424(8.1%)
경상북도	2,106(3.4%)	1,560(3.5%)	345(3.9%)	82(3.3%)	119(2.3%)
경상남도	4,184(6.8%)	3,322(7.4%)	476(5.3%)	141(5.6%)	245(4.7%)
제주도	1,307(2.1%)	969(2.1%)	129(1.4%)	58(2.3%)	151(2.9%)

수강인원에 따른 프로그램 현황을 살펴보면 50명 미만의 적은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2,850건으로 전국대비 6.3%를 차지

해 가장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자체적인 프로그램 횟수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0~100명 미만, 100명~150명 미만,

150명 이상의 프로그램은 각각 291건, 98건 175건으로 전부 3%대를 유지해 지역적 프로그램 수나, 전국비교 비중으로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지역 도시들의 평생학습환경 즉, 시설 부재의 이유가 가장 클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적으로 그동안 학습도시로 선정된 지역에서 수행한 프로그램들의 성향을 살펴보면 수강생이 많은 서울, 경기, 부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행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충남의 평생학습도시가 학습자들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부분이다. 다만 충남의 경우 산업화에 따른 인구의 고령화가 심하고 직업 및 취업관련 프로그램의 요구가 높다는 것을 감안하여 직업능력 향상 및 취업관련 프로그램의 비중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면서 이에 따른 고령화 프로그램과 1개월 미만의 단기 프로그램보다 중·장기적인 꾸준한 교육을 통해 학습자의 단순 호기심이 아닌 직업 및 교육, 생활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5. 결 론

과학기술의 발달과 지식·정보의 폭발적인

증대로 말미암아 직업구조 변화 및 사회적 이동이 촉진되고 있다. 따라서 직업 및 사회생활에의 적응을 위한 꾸준한 재교육 및 재학습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즉 시대와 사회 환경의 변화는 전통적인 학교교육에 대해 많은 변화와 역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것이라도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에서 복지사회 실현이나 사회정의의 실현에 있어 평생교육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향후 충남의 평생학습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충남의 평생학습추진 비전-목표-추진전략-정책과제-시행과제의 체계를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지역의 특성과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요구조사 및 관련 연구를 병행하고 이를 토대로 하는 평생학습사업을 발굴, 추진해야 한다.

첫째, 평생학습정책사업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현재 충남은 '전 시·군의 학습도시화'를 정책적 기조로 제안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양한 평생학습정책과제 중에서도 기초지자체의 학습인프라 구축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 즉 지역별 평생학습추진조직체제 정비 및 역량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광범위하고 긴밀한 평생학습인적네트워크 체계를 탄탄히 다져야 한다. 우선 충남평생학습추진협의회 구성을 단초로 지역평생학

습체제의 내생적 발전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 추진의 시너지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충남의 도정계획 및 정책추진 방향에 부합하는 평생사업 및 프로그램을 발굴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한 정책적 타격을 우선 선정할 필요가 있다. 실직자, 청년실업자, 저소득층, 장애인, 여성, 노인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 중 평생학습을 통해 지역사회원으로 환원하고자 하는 대상을 설정하고 이들을 위한 평생교육사업을 집중해야 한다. 모든 시민을 아우르는, 모든 대상을 아우르는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향후 충남이 나아가고자 하는 도정정책을 반영하는 프로그램 지원 대상을 집중 발굴, 육성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평생학습계좌제 시행과 관련하여 우수인력의 보강과 관련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보도한 5대 국정지표, 21대 전략을 보면 평생학습의 생활화부분에 평생동안 능력개발이 가능한 평생학습 인프라확충을 위한 평생학습 계좌제 등의 시행을 명시하고 있다. 때문에 이러한 국정지표를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학습환경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평생학습계좌제는 시민의 학습욕구를 극대화시키고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관련 인력의 교육 및 보강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08), "2008년 평생학습 실태조사 결과발표" 보도자료.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2001), 「평생교육백서」.
 송두범(2006), 「지역인적자원개발과 평생학습도시의 연계추진 방안」, 평생학습도시와 인적자원개발.
 양병찬(2007), "충청남도 평생학습도시 구상", 충청남도 평생학습도시 추진을 위한 관계공무원 인적자원개발 워크숍 자료집, 충남발전연구원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이희수(2003), "OECD평생학습도시 정책동향과 과제", 한일평생학습국제세미나, 지역혁신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동향과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pp.44-46.
 충청남도(2007), 충청남도 평생학습도시 추진 관련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08), 국가평생교육통계연보 2008.
 OECD(2000), Towns, Cities, and Regions in the Learning Age, Paris: OECD.
 _____(2001), Cities and Regions in the New Learning Economy, Paris: OECD.
 평생교육정보망(www.ill.or.kr)



세계화와 월드시티의 도시계획*

(Globalization and Urban Planning in World Cities)

Professor Peter Hall (The Bartlett School of Planning, UCL)
대담 · 정리 : 양도식 (영국도시건축연구소 UrbanPlasma(주) 소장)

* 본 인터뷰는 저자의 '세계화와 월드시티 연구'의 일환으로 Professor Peter Hall와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였다.

Q1 현재 세계화는 여러 분야에 영향을 주고 있고 있습니다. 특히 어바니즘 측면에서 볼 때 세계화가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화가 어바니즘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경제적·지리학적인 면에서 볼 때, 변화는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제적인 분업의 변화는 유럽과 북미 서구사회의 기존 경제활동인 제조업에 급속한 침체를 야기시켰습니다. 더 이상 중국과 인도와 같은 새로운 신흥산업국의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제조업과는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은 상당한 시간동안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는 1970년대 초기부터 서구사회의 제조산업의 침체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세계화도 새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세기 전에는 세계화나 제조업의 이동은 지금보다 그렇게 현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서구국가가 전통적인 제조업 기반의 경제 활동에 있어서는 침체를 겪었지만, 생산자·소비자를 위한 서비스산업과 같은 새로운 경제영역을 개척하고 수용하는 능력을 보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서구국가의 새로운 경제구조의 변화로의 전환에 대한 성패 여부는 바로 전통적인 제조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서비스 중심의 새로운 경제구조로 전이된 비율의 지표가 성공의 중요한 측정기준이 됩니다. 런던과 영국의 여러 도시들은 이런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율배반적인 양상을 보게 됩니다. 성공적인 변화를 이룬 많은 도시들은 제조산업이나 항구관련 산업의 침체로 인한 많은 양의 버려진 산업유휴지를 남겼습니다. 이 산업유휴지는 새로운 경제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세계화가 남긴 가장 극적인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지 영향만이 아니라,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세계경제구조의 급속한 변화는 우리가 여러 곳에서 보고 있는 도시의 근본적인 추진력이 되고 있습니다.

Q2 피터 테일러 교수의 월드시티 위계에 의하면 런던은 뉴욕, 도쿄와 함께 항상 알파 월드시티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피터 테일러 교수의 월드시티 분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뉴욕, 런던, 도쿄 이 세 개의 도시들은, 여기에 가끔씩 파리를 포함해서 월드시티 분류는 피터 테일러 외에도 다른 월드시티 관련 연구를 하는 학자들에 의해 자주 소개됩니다. 러프 버러(Loughborough) 대학에 있는 GaWC(Globalization and World Cities) 단체의 피터 테일러 교수가 월드시티 관련 내용을 가장 잘 정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런던과 뉴욕을 가장 높은 월드시티 레벨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의 연구는 아주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서비스 경제의 통제와 명령의 관점에서 세계화를 조직적인 분석의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은행, 보험 회사들과 같은 다국적 기업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위해 사용한 공식은 복잡해 보입니다. 이 분석은 본질적으로 기업과 기관 정보의 위계적 흐름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안되었습니다. 피터 테일러의 분석은 본질적으로 세계의 많은 다른 도시들보다 런던과 뉴욕은 세계의 많은 지역을 통제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월드시티의 위계를 측정하는데 있어 완벽한 수단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피터 테일러의 방법은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터 테일러의 월드시티 위계에 의하면 런던과 뉴욕은 최고 위계의 월드시티이며 다음 위계의 월드시티에는 그리 많은 도시들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20여 개의 도시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도시들은 서유럽, 북아메리카의 서부와 동부 해안도시 그리고 시드니를 포함한 극동아시아나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제조업 보다는 높은 비율의 서비스 기반의 새로운 경제가 위치한 지역들입니다. 이 말은 즉, 서비스 산업은 세계의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Q3 교수님은 약 40년 전에 월드시티에 대한 책을 저술하고 논의를 하였습니다. 저술 당시의 런던과 현재의 월드시티 런던은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40년 전, 월드시티에 관한 저의 생각은 그렇게 잘 전개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월드시티에 대한 이론이 미숙하고 제대로 성숙하게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현재와는 달리 피터 테일러가 말하는 월드시티성(world cityness)을 측정하는 양적수단(quantitative measures)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당시 우리는 아주 직관적인 판단력을 바탕으로 월

드시티를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래전에 말했듯이 새로운 경제의 통제와 명령하는 도시의 등장에 대한 그 직관력이 제대로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지금 제가 현재와 과거의 런던을 비교한다면, 비록 정확한 평가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과거 런던의 위상을 현재에도 유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그 위상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현재에는 피터 테일러가 말하는 월드시티 위계를 측정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과거 40년 전, 그리고 20년 전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저의 느낌은 런던은 뉴욕과 함께 월드시티의 위상이 계속 높아졌습니다. 반면에, 파리와 도쿄는 다소 그 위상을 잃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세계화가 은행과 같은 기관이 어느 때 보다 더 국제화 될수 있도록 만든 금융자유화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HSBC(Hong Kong Shanghai Bank of China) 은행은 상하이에서 설립되었지만 1949년 중앙 본사를 홍콩으로 이전한 후 주요 국제은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홍콩보다 런던에 더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미국 은행과 같은 많은 해외은행들이 런던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런던이 뉴욕보다 헤지펀드와 같은 금융은 뉴욕보다 더 활성화되었다는 증거들도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영국의 마가렛 대처가 1986년 실행한 금융자유화(Big Bang) 20주년을 축하하는 많은 관련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금융자유화는 영국의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모든 비평가들이 이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유화는 시티 오브 런던(City of London) 지역을 더욱 더 경쟁력 있는 장소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해외자본이 유입되었고 외국은행들이 지사를 런던에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전 방식과 조직적이지 못한 영국의 금융구조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후 런던은 지난 20년 동안 더욱더 국제적인 금융서비스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Q4 러시아 경제학자인 니콜라이 콘드라티예프(Nicolai Kondratieff)는 자본주의 경제의 사이클을 언급하였습니다. 이 혁신 사이클은 도시의 성장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저의 개인적 관심사는 이러한 경제적 성장과 침체 그리고 혁신 사이클의 도시와의 연관성입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슘페터(Shumpeter)는 'Great Business Cycle'이란 책을 쓴 후 1942년 그를 유명하게 만든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저서를 완성하였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유명한 공론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자본주의는 창조적인 파괴에 기초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많이 인용되는 구입니다. 저는 이 말에 아주 심오한 뭔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는 다이나믹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새로운 형태의 경제 조직을 만드는 반면에 다른 조직을 파괴시킵니다. 창조적인 파괴과정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엄청난 지리학적인 영향을 줍니다. 슘페터가 이미 보여주었듯이 창조적인 파괴과정은 특정한 나라가 경제적인 주도권을 잡도록 합니다.

영국은 첫 번째와 두 번째 Kondratieff Wave* 동안 경제적인 리더를 해왔습니다. 세 번째 Kondratieff Wave 동안은 독일과 미국은 영국과 경쟁을 했습니다. 네 번째 Kondratieff Wave에서는 미국이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이들 도시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독일과 혹은 디트로이트는 Kondratieff Wave를 일으킨 도시와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샌프란시스코의 실리콘 벨리는 제4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각각의 변화의 물결의 단계는 도시를 침체하게 하였습니다. 저는 제5의 물결도 도시의 침체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5의 물결은 언제 시작될지 모릅니다.

맨쉬의 혁신주기에 의하면 1881년에 혁신이 있었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ondratieff의 새로운 혁신 물결이 1897년에 이어집니다. 그리고 4번째 Kondratieff의 혁신 물결을 야기시킨 1935년 혁신물결이 일어납니다.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기관에서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Kondratieff의 제4의 물결은 1952년 혹은 1954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기는 혁신이 최 정점에 달한 후 17년에서 19년 사이의 기간과 비슷합니다.

맨쉬는 그의 책에서 다음 혁신의 물결은 1984년에 최정점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 19세기 초와 20세기 초반의 경제현상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러시아의 경제학자인 니콜라이 콘드라티예프(Nicolai Kondratieff, 1892-1938)가 주장한 경제사이클. 이를 바탕으로 그는 경제가 성장과 침체(expansion and contraction)가 평균 50년을 주기로 (1772-1850, 1850-1896, 1896-1940) 반복된다고 주장함. 이 배경에는 영국과 독일 경제의 임금, 원료, 생산과 소비, 수출과 수입 등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였다.

이 말은 Kondratieff의 제 4의 물결이 지금 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1984년 이라고 말 할 수는 없습니다. 약 5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혹자는 근본적인 웹 사이트의 등장과 함께 1989년에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 경우 다음 Kondratieff Wave은 시간이 다소 더 걸릴 것이라 예상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전에 글을 적은 적이 있습니다. 2007년과 2011년 사이에 저는 세계경제가 웹사이트의 등장과 혁신을 통해 성장했다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혁신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가정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사실이 아주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 학자들은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류의 학자들은 경제의 성장과 쇠퇴에 대한 다른 설명의 메커니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이 세계경제에 등장하고 뭔가 특별한 것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중국은 1970년대에는 세계경제로부터 격리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구소련의 붕괴 이후 중국은 세계경제의 중심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이후 세계화를 가속화시켰습니다. 이는 유럽의 공산주의의 붕괴와 중국공산당의 혁신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국공산당의 혁신은 세계경제의 확장에 아주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의 경제적 성장을 이루게 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주 독특한 부분이며 이는 마치 19세기의 세계로 확장되는 경제현상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Q5 세계화는 경제와 도시의 성장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는 국가간의 경제적 불균형 도시 내의 극빈곤층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슈페터가 말하는 '창조적인 파괴'의 과정은 역설적인 면도 있습니다. 어느 경제학자는 1960년대에 국가나 도시의 급속한 경제 성장은 '소득격차'와 연관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년간 중국에서 벌어진 일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소득의 격차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광역지역과 도시간의 차이입니다. 상하이와 중국 서부지역의 소득격차는 1970년대 보다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둘째는 상하이나 런던과 같은 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격차입니다. 고도의 경제성장은 상류층의 소득을 향상시켰고 이에 대해서는 많은 통계적 증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소득 계층은 더 많은 소득을 내고 다른 계층과의 격차를 더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런던의 경우, 주택시장에 영향을 주는 고소득층이 있습니다. 많은 고소득 상류층에 비해 소규모의 가난한 저소득층이 있습니다. 이 가난한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새로운 이민자들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 이민자는 이미 뿌리 깊게 정착한 새로운 경제환경에 적응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런던만이 아니라 유럽의 모든 도시에서 볼 수 있으며 런던의 경우에는 더욱더 명확히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Q6 월드시티 런던도 세계화의 문제에 있어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런던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시도를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런던 시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현안은 사회복지혜택에 영구적으로 의존하는 계층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회복지혜택은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중요한 정책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빌 클린턴이 미국에서 이 정책을 시도하였고 다소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을 영국수상인 토니블레어가 수상이 된 후 시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영국과 미국은 영구적으로 사회복지혜택을 통해 가난한 저소득층 문제 해결을 시도하였습니다. 그 방법으로 이 저소득층이 최소한의 임금을 받더라도 일할 수 있도록 중용하거나 일을 가질 경우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펴왔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아주 복잡한 일련의 정책들입니다.

Q7 지속가능한 월드시티 런던을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현안인 빈부격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미 말했듯이 성공적인 성장을 이루는 도시에 부자는 더욱 더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특히 주택시장의 불안정은 많은 사람들을 위한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부자들은 원하면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많은 부동산을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 런던에 아파트를 가지면서 농촌지역에도 주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두 개의 주거지를 가지고 사는 생활패턴은 부자들에게 있어 일반적입니다. 부부 중 한명은 도시 외곽에 살면서 거기서 일자리를 구하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동안, 다른 한명은 시내에서 일하며 주말에 가족들과 재회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주택 하나를 간신히 소유하는 저소득층에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저소득층은 조건이 좋지 않은 열악한 주택을 살거나 아니면 그들의 일자리로부터 떨어진 아주 먼 곳에 살아야 합니다. 이는 일자리로의 이동시간과 비용과 관련하여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Q8 월드시티 런던의 삶의 질과 관련해서 주택은 아주 중요하게 런던플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런던플랜에 나타난 주택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십시오.

삶의 질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택부족을 막기 위해 주택의 밀도를 높인다면 이것은 삶의 질과 관련하여 또 다른 어려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공공의 공간을 잃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도시가 가족중심적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고밀도 주택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기 위해서 높은 수준의 사회적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밀도 주택은 부정적인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 중 일부는 성공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저는 런던시장 켄 리빙스턴이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런던시장은 새로운 주택을 오픈스페이스에 조성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런던플랜을 통해서 고밀도의 건물을 기존의 주거지역에 조성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들의 변화주는 빠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쉽게 실행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건물을 철거하지 않는 이상 아주 천천히 변합니다. 어떤 건물은 아주 오래되어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 철거는 더욱 더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고밀도 주택이 이용가능한 토지가 있는 이전의 산업지역이나 항구 혹은 독 지역에 조성하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Q9 하지만, 현재 런던의 부족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의 확장과 외곽타운 건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무분별한 도시의 팽창(sprawl)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잉글랜드의 남부 지역은 분산되었지만 집중된 지역입니다. 넓은 규모에서는 분산되어 있지만 지역(local)적 규모에서는 많은 도시와 타운을 중심으로 집중된 형태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국이 아주 잘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처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더 넓은 규모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교통과 연결된 인구 10만에서 40만 사이의 중소규모의 도시를 런던 외곽에 만들 수 있습니다.

Q10 런던플랜은 런던을 런던답게 만드는 것은 다양성임을 강조하며 다양한 커뮤니티 조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민정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민자의 유입을 괜찮다고 말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런던의 경험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이민자의 부류에 따라 그 성공의 비율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영국 학교의 시스템 내에서 어린이들의 활동발달 상황을 보면 중국 학생들이 가장 높은



비율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장 성공적인 이민자 그룹은 인도 이민자 들입니다. 그러나 방글라데시 이민자 부류는 인도와 같은 대륙에 있지만 성공적이지 못합니다. 이민자들의 성공은 아마도 그 지역의 문화 여건에 많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아주 복잡한 주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성공적인 월드시티를 포함해서 성공적인 도시는 이민자들에게 매력적입니다. 젊고 활동적이며, 지적인 이민자들이 성공적인 도시에 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렇지 못한 경우 이민을 생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민을 통해 경제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인간자본이 유입됩니다. 이것은 뉴욕과 같은 도시처럼 런던의 가장 큰 자산이 되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민자를 수용하여 정착하는 초기 과정에 문제점은 있습니다. 문제의 대부분은 이민자들이 새로운 문화를 얼마나 체득하는가의 정도와 비례합니다. 백 년 전 뉴욕은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높은 비율의 이민자를 수용했습니다. 최근에는 런던이 그 경우입니다. 런던의 이민율은 백 년 전 뉴욕의 비율에 준한다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뉴욕의 경우에는 대

부분의 이민자들이 주로 유럽에서 이주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동일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런던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런던의 이민자의 경우에는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민자들에게 다소 어려움을 줄 것입니다.

현재 런던에 있는 무슬림 인구에 대해서 논의 하고 싶습니다. 이 무슬림 인구들이 새로운 문화에의 적응과 관련하여 심각성의 정도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젊은이들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런던과 유럽의 대부분의 무슬림 인구들은 친족들과 함께 협조하며 잘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핵심은 무슬림 이민 2세대들이 학교의 교육시스템을 통해 연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1세대 이민자들이 모두가 새로운 문화에 적응 할 수 없지만 새로운 문화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교육시스템을 통해 제2세대들은 그 사회의 주요 흐름에 쉽게 흡수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런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Q11 사무엘 헌팅턴의 그의 저서인 '문명의 충돌'을 통해 다소 다양한 문화와 인종적 배경을 가진 커뮤니티간의 부정적인 내용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팅턴의 저서는 많은 사람들의 비평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문명간의 충돌과 문명간의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헌팅턴의 주장을 받아 들일 것이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로간의 다른 문화를 용인하는 과정에서 부정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Q12 한 나라의 이민정책은 그 사회의 개방정도와 많은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리처드 플로리다(Richard Florida)는 창조계급관련 내용을 언급하면서 '보헤미안 지표'(Bohemian Indicator)를 통해 단편적이지만 그 사회의 개방정도를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리처드 플로리다의 책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의 책은 피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알다시피 그가 사용한 통계적 수치는 빈약합니다. 하지만 창조적인 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점에서는 아직 성공적인 책입니다. 저의 생각에는 창조적인 도시를 만드는 과정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보다 더 복잡합니다. 또한 그가 제시한 통계적 연관성은 다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창조적인 도시를 만드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오랜 시간 동안 창조적인 도시가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역동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13 감사합니다.

Q1 Globalization is having influence on various sectors. Looking from urbanism perspective, globalization is showing great influence. Please tell us about the influence globalization is having on urbanism.

I think the transformation works, through what I would call economic geography, in particular the changing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ur, because it leads to rapid decline of existing economic activities, especially manufacturing in western cities, by which I mean European and North American cities. They no longer prove to be competitive against the newly industrialized cities in countries like China and India. This process has been going on for quite a considerable time now, and it has led to major losses of manufacturing industry in the West, beginning in the 1970s. Globalization itself is not new, although it's probably more intensive now than it was a hundred years ago. However, what's interesting is that despite the losses in certain kinds of old economic activities, many western cities have shown the ability to adapt to new economic areas, such as producer-consumer services. I'd go as far as to say that success, or lack of

success of the cities in the West and perhaps increasingly in other countries, can be measured by almost an index of the rate of transition from old economy to the new economy, whatever that new economy is. In cities that are making that transition successfully, like London and other British cities, you see a paradox. Large areas of abandoned land left behind from the manufacturing industry or perhaps from port activities, in or around the central business district, can be used for the new economy. That for me is the most dramatic example of the impact of globalization. It's not the only impact, but I think this rapid transition of the economy from the old to the new is a fundamental driver and the way we see cities, wherever we see them.

Q2 According to Professor Peter Taylor's 'Hierarchy of World Cities', London is always at Alpha World City status, alongside New York and Tokyo. What's your view on Professor Taylor's classification?

These three cities, and occasionally Paris, although Paris is doubtful, do appear rather regularly, not only in Peter Hill's categorization but in many others. The most definitive for me is Peter Taylor of the GaWC (Globalization and World Cities) group in University of Loughborough. He actually puts London and New York at the top of the hierarchy. His work is interesting, as it's based on a very systematic attempt to measure globalization in terms of command and control in these new economies, especially in multi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banks and insurance companies. The formula used is a complex one, but it's essentially designed to try to provide a proxy for the flows of information within such organizations, hierarchically. And it essentially says London and New York has a much deeper control span over a larger part of the world, than any other cities. Lacking any better means of measuring hierarchy, I think this method is probably the single best measure. One can look at those cities, and look at the next range of cities, and we will find out that there is a limited number of

these top cities, perhaps around 20, and also that they're very localized into three areas of the world, that is, Western Europe, East and West Coasts of North America and East Asia, and also perhaps Sydney. This essentially is where the new economy is very localized, to a much higher degree than the manufacturing economy, which says that the new economy involves concentration, that it coheres to a very confined regions of the world.

Q3 Around 40 years ago, you wrote a book on and discussed about World Cities. What differences do you see on present world city London and London at the time of writing the book?

40 years ago, my ideas about this were much less well-developed. They were much cruder and rougher. And we didn't have much quantitative measures, of what Peter Taylor called the 'world cityness' then, as we do now. We did have very crude intuitions, but we didn't tell of any ways of establishing these intuitions. The intuitions we brought were correct, as even then I told of command and control of these new economies. If I compare London then and now, it just kept its position in the hierarchy, and it just kept advancing, although we don't have very accurate measures for that. We do have the Peter Taylor method, and we can take it back 40 years or 20 years, but the general impression is that London has increased its lead at the top, together perhaps with New York, whereas cities like Paris and Tokyo has lost it to some degrees. Among the reasons for this are globalization and also the deregulation of financial services, which have allowed top financial services such as banks to become much more international than they were. For example, HSBC(Hong Kong Shanghai Bank of China) started in Shanghai, but moved its central HQ to Hong Kong in 1949, and became a major international bank. It probably is more established in London than in Hong Kong. Suddenly many overseas banks, including American banks, have started

to operate in London. There is some evidence that London is gaining on New York in certain important aspects, such as hedge funds. There has been a series of articles in the last two weeks celebrating the 20th anniversary of the Big Bang, the event in 1986, in which Margaret Thatcher deregulated financial services. It was enormously influential. Every informed commentator confirms that fact. It transformed the City of London, making it a much more competitive place. It caused foreign capital to pour in, foreign banks to establish themselves in London, and basically push out the old-fashioned, rather poorly organised British financial services. As of this London has become a much more 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 city in the last 20 years.

Q4 The Russian economist Nicolai Kondratieff mentioned a cycle of capitalist economy. This renovative cycle has also greatly influenced growth of cities. I would personally like to know the relation between the economic growth and stagnation and this renovative cycle. Could you explain about the relationship?

Schumpeter, after he wrote the 'Great Business Cycles' book, wrote a book in 1942 which made him much more famous called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And it's in this book that he made a famous praise that capitalism was based on creative destruction, which has been quoted very often. I think by that he meant something very profound, that capitalism is a dynamic process, and in creating new industries, new forms of economic organizations, it destroys others. And that has a very tremendous geographical impact, as we were talking of earlier. It often leads, and Schumpeter has already shown, to one country taking an economic lead. The UK has been the economic leader in the first two Kondratieff, but Germany was already beginning to compete. By the third Kondratieff, Germany and the US competed very much with Britain, and by the fourth Kondratieff, America was in a complete lead. And obviously this has a great impact on the cities in these countries. So you could say a

city like Berlin or Detroit was a creation of the third Kondratieff wave, and San Francisco with Silicon Valley a creation of the fourth wave. But each wave let many cities decline, as they represented the old activities. And I would imagine that the same would apply for the fifth Kondratieff. And the timetable suggests that the fifth Kondratieff could be starting any minute now.

The Mensch timetable suggests there was an innovation going on in 1881, which was followed by new Kondratieff beginning in 1897, and there was another innovation in 1935, which led to a fourth Kondratieff wave, which various authorities date differently. But many would suggest 1954, perhaps 1952. That is a similar period of 17 to 19 years after the innovation peak. Now, Mensch forecasts in his book that the next innovation wave would peak at 1984, which would mean the next Kondratieff would begin about now. It's not definitely 1984, as there is a margin of error of 5 years to both sides. Some people would say that the most fundamental breakthrough came in 1989, with the World Wide Web. In which case the next Kondratieff may take a little more time. I myself, writing about it earlier, varied between 2007 and 2011, but I think there already is some evidence that there is a growth in the world economy, especially associated with the innovations from the World Wide Web. So something is beginning to happen. It is however greatly complicated by the fact that people are not agreeing to this hypothesis. It has been attacked by many academics. And other academics have given different explanations for the economic booms and depressions. What we do know at the present time is that something very special has been happening, which is the entry of China into the world economy. It was very largely sealed from the world economy, around the 1970s. Following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in the 1990s, they've joined the world economy, and there has been an acceleration of globalization since the 1980s, associated with the collapse of communism in Europe and the transformation of communism in China, which has created extraordinary conditions in expanding the world's economy. I think this is the reason why we've had such a long

period of economic growth. This may be a very special factor, maybe similar to the opening up of the world in the 19th century.

Q5 Globalisation is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growth of economy and cities. But it also has problems, such as economic imbalance between countries and extreme poverty within the cities. What do you think about these issues?

Part of creative destruction is that it creates a paradox. An economist said in the 1960s, that rapid development in a nation or city is associated with income disparity. For instance, what's happening in China in the last 20 years is a very interesting example. Income disparity occurs in two ways. First of all, it occurs between the regions and cities. The difference between Shanghai and the western provinces are much greater than they were in the 1970s. The other is within the city. In cities like Shanghai and London, rapid growth increases the income at the top. There are statistical evidences that very clearly states so. The high-income people gain more income and are pulling it away from rest of the population. So in London you have the group of super-rich, which has a distorting effect on the housing market. You have a relative large group of comfortably well-off people, but also have a small group at the bottom, who're relatively very poor. Some of these poor are relatively new immigrants, who are rising. More problematic is that some of them are over-established groups, who're sort of stuck. They're not successfully making the transition into the new economy. You can see this paradox in every European city, not just London, but it's quite observable in London.

Q6 World city London is no different on these issues. What steps is London taking to tackle these problems?

It's doing its best, but there are issues that are very, very difficult, because you do get the growth of a class, who can become permanently dependent on welfare benefits. Welfare benefit is a very important policy to deal with this. It's interesting that Bill Clinton tried to do this, to some success, in the US. His model was followed by Tony Blair, when he came to office. So both the American and British governments have tried to deal with this problem, by pushing this class into the labour force, by using combination of measures, which involves withdrawing welfare and also providing incentives to enter the labour force, even at low minimum wages. But it is a very complex set of policies.

Q7 Please tell us about gap between the rich and poor, the most important issue in creating a sustainable world city London.

I think this is a serious problem, because as I said, in successful cities, the rich will become richer, and the quality of life diminishing for many people, especially through distortions in the property market. The rich can always buy their way out of this, because many of them will own multiple properties. They can have an apartment in London and live in the countryside. They will have the best of all possible worlds. And this approach of living in two different places will be more commonplace, because what the very rich do today, the less rich will do tomorrow. They'll tell themselves, 'look it's horrible to live in this place. As we have to live here for a part of the week, we can live in the countryside for the other part'. So you get a pattern, which the demographers already described as living together apart. That is if one of the partner lives outside the city, has a job there and the children live there, and the other partner goes down to them in the weekends. But this isn't an option for low-income people, who can barely afford to live in one place. Here you get a distortion where the low-income people having to live in relatively poor conditions or they may have to live

far from their workplace, meaning different problems such as commuting time and travel costs.

Q8 Housing appears as a very important part in the London Plan, in relation to the quality of life in world city London. Please assess the housing policy stated in the London Plan.

I think many of them would do okay, but experience so far in London tells me that different groups of immigrants have very different success rates. If you see the performance of children in the school system, the most outstanding students are Chinese immigrants. The next most successful are Indian immigrants, but the Bangladeshi immigrants, from the same subcontinent, do appalling. A great deal depends on the local cultural conditions.

The quality is crucial. But by driving the density up, it becomes more and more difficult to produce a good quality of life, because you'd lose open space, and the city would become family-unfriendly. And it would also require a very high level of good social behaviour, in order for people to live in high densities. In cities like Hong Kong and Shanghai, people appear to live in very high densities, in appallingly high densities, but they do seem to survive.

Q9 What do you think about the expansion of the city and creating suburban towns, in order to solve the lack of housing in London?

I think that's a big mistake, and Ken Livingstone himself claims he's against that. He says he doesn't want to build them on open spaces. He just wants high-density

buildings in existing residential areas. But it isn't going to be that easy, because the total building stock doesn't change that fast. In fact, it changes very slowly, as we don't like knocking down houses. Some houses are very old and this gives them value, so you won't tear them down. This limits high-density housing to ex-industrial areas and port or dockland areas, which happen to have the land available for rebuilding.

Q10 The London Plan emphasises that diversity is what makes London the city, London, and emphasises the creation of diverse communities. What do you make of the related immigration policy?

I think it is the modern way, but it isn't just a sprawl. The way it's being done in Southern England, is very much like this, concentrated deconcentration. You deconcentrate on a broad scale, but you reconcentrate on a local scale, into a number of cities and towns, which themselves are reasonably compact. I think this is something we've done very well in this country, and something we could do on a larger scale, as we are beginning to do so. We could build up median size cities, between 100,000 and 400,000, outside London, and connect them with public transport.

I think it's a complex circular relationship. Successful cities, including successful global cities, are attractive to immigrants. Immigrants came to be young, active and mobile, and probably intelligent, as they wouldn't have made the journey here if they weren't so. Therefore, you do get an inflow of human capital, in economic terms. This has been a great asset to London, as it has been for other cities like New York. There are transitional problems, occurring during absorbing the immigrants. The problems are largely proportional to the degree of cultural adaptation the immigrants have to make. New York a century ago probably had the highest rate of immigration the world has ever known, until recently in London. London's immigration rate is said to be as high

as New York's a century ago. However, the immigration into New York around 1906 was mainly from Europe, and so the culture that came in was more homogeneous, than the culture being brought into London. This will mean longer time will be needed for cultural adaptation, and this may give rise to some difficulties. We now talk a lot about the Muslim population in London. I'm not so sure how large these adaptation problems are, but there are undoubtedly some among the young men, but most of the Muslim population in London and around Europe live perfectly well alongside the natives. The key to this is the integration of the second generation through the school system. That is the test. Normally, within one generation, the immigrants will be absorbed, not entirely, as they will retain their cultural identity, but they will be absorbed through the education system, into the mainstream. If that process fails, then I'd think there will be problems.

Q11 In his book 'the Clash of Civilizations', Samuel Huntington expresses negative views on relationships between communities with diverse cultural and racial background.

Huntington's thesis has been criticised by a lot of people, as it emphasises clashes between civilizations and that there are going to be world wars between these civilizations. I don't believe that people will necessarily accept that. But there are some difficulties in cultural adaptations that cannot be denied.

Q12 The immigration policy of a country seems to have a correlation with the openness of the society of the country. Richard Florida shortly but symbolically explains the openness of a society through the 'Bohemian Indicator', mentioning the 'creative class'. Please tell us your view on this.

The trouble is, that Florida's book was superficial, you know, he crunched the numbers. And it scored a large success by plainly telling you how to make a creative city. I think the whole process is much more complex than that. Also, the statistical correlations he made could work in either direction. But in order to understand what makes cities creative, I think you need much more of the sense of dynamics of how they happen over time, which is not what he really talked about.

Q13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time.

:: 영국도시건축연구소 UrbanPlasma(주)

1. 설립 : 2008년 8월 11일 영국정부(Companies House)에 공식 등록된 주식회사
2. 주소 : 영국 런던 소재
63-71 Collier Street, Kings Cross/St Pancras, London, N1 9BE, United Kingdom.
3. 설립취지와 소개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현대 도시문명의 발상지가 된 영국은 짧은 도시화와 현대화를 이룬 우리나라의 도시환경에 유용한 경험과 교훈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소는 영국의 도시계획, 도시디자인, 그리고 건축분야의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시도 그리고 미래의 방향을 집중 연구·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으로 현실화하는 교두보의 역할을 하고자 설립되었다. 현재 UrbanPlasma는 영국의 도시계획, 도시디자인 그리고 건축분야의 연구와 디자인 그리고 전문 컨설팅과 자문을 하고 있다.

근대 문화가 살아있는 홋카이도

권영현 |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I. 머리말

전통재래시장을 되살리려는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다. 버거운 경쟁 상대인 대규모 신유통과 대적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후한 장옥을 철거하여 현대화하고 주차장을 증설하며, 상인대학 운영, 경영 및 마케팅 기법 지원 등 쇠락해가는 재래시장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회생시키려는 다양한 처방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 사업이 전통시장의 외형과 이용 편의의 변화에만 치중되어 우리의 시장이 지니고 있던 고유한 정체성과 문화공간으로서의 맥이 희미해지면서 우리 자신도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재래시장의 매력인 정감과 푸근한 안식을 더 이상 찾아 볼 수 없게 되고 말았다.

이번 연수는 지역의 고유한 문화 역사자원을 자원화하고 상품화하는 선진사례를 배우기 위하여 일본 속의 또 다른 일본 홋카이도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메이지 시대 개척시기의 번성과 침체 그리고 극복과 재생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통하여 전통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여 보존하고 자원화 하는 그들의 전통 문화의 활용 방법을 통해 우리가 구상하는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목적을 두었다.

현지 연수는 2009년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일본 홋카이도(北海道)의 시라오이(白老), 노보리베츠(登別), 도야(洞爺), 오타루(小樽), 삿포로(札幌) 일원을 방문했으며, 각 도시의 대표적인 전통 문화자원과 재래시장, 상공회의소 및 마을만들기협회 등을 방문하여 고유한 전통 문화를 통해 새로운 지역 자원을 알아내는 지혜를 엿보며 선진 사례를 습득하는 기회를 가졌다.



〈그림 1〉 홋카이도 지도

Ⅱ. 시라오이

1) 고유성의 재발견과 정형화

시라오이 정(白老町)은 축산업과 어업, 수산가공과 제지업과 관광산업이 주산업인 홋카이도 이부리 지청에 속한 인구 2만명 가량의 소도시이다.

시라오이에는 홋카이도 선주민인 아이누족의 대규모 거주지인 아이누코탄이 있었고 지금도 아이누 혈통을 잇는 사람이 많이 살고 있다.

이런 연유로 이 지역에 아이누민족박물관이 세워져 아이누족의 문화를 전승, 보존하고 연구하며, 방문객에게 체험학습과 전시, 민속공연 등 문화체험을 제공하는 중심장소로 자리잡고 있다.

박물관 콘텐츠 중 중요 무형민속문화재로 지정된 아이누전통무용 공연이 단연 백미인데 관람객이 지루하지 않게 짧은 주제로 이어지며, 공연 도중 외국인 관객과 사설을 주고받는 등 관객이 공연과 일체화할 수 있게 진행되고 있었다.

아이누족 고유의 의, 식, 주 등 일상생활 또한 수공예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머무르지 않고 북방민족 특유의 목공예, 섬유공예, 수렵도구, 장식품, 모피의류로 상품화하는 등 지역이 보유한 전통성을 재현하고 발굴할 뿐 아니라 새로운 틀로 정형화하여 고객에게 가깝게 접근하는 적극적인 마케팅 수단을 보여주고 있다.

2) 지역 산물의 로컬푸드화



시라오이 특산물인 소고기 등을 주재료로 하는 햄버거와 베글을 판매하는 음식점. 전면에 B.B 마크사인을 부착했다.

식재천국(食材天國)을 자칭하는 시라오이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축산물과 수산물을 일반 유통하는 동시에 지역 음식으로 개발하여 지역 내에서 판매함으로써 시라오이의 우수한 식재료 이미지를 부각시키며 지역 브랜드를 더욱 명확하게 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시라오이 버거&베글 연구회의 'B&B' 브랜드인데 시라오이나 홋카이도 산 식재료를 만든 버거와 베글을 개발, 지역 특산물의 소비를 촉진하며 상품화하고 있다.

시라오이 버거 & 베글에 사용되는 재료

- 시라오이 소고기 : 브랜드 지명도가 상승세에 있는 시라오이 소(정내에 5개의 판매점이 있으며, B&B 회원 축산가에서 구매)
- 虎杖浜 명란젓 : 동경 어시장에서도 지명도 있는 시라오이 특산물
- 계란, 새우, 접시조개, 은대구, 연어, 연어알, 가리비, SPF돼지고기(특정병원체부재) 등 시라오이 산 육류와 수산물을 사용하며 홋카이도 산 보리로 만든 버거 빵을 내세워 지역 특산물의 브랜드 입지를 확고히 하며 새로운 상품도 아울러 개발 출시 (식자재와 신상품의 시너지 효과)

'시푸드 카레'는 시라오이가 개발한 또 다른 로컬 푸드로서 시라오이 산 접시조개가 주재료인 '접시조개 카레'를 정내 8개의 기존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로컬푸드 사업이다.

2009년 7월, 접시조개 카레를 정식메뉴로 시작하여 시라오이산 털게, 연어, 새우, 다랑어 등 80여종의 해산물을 재료로 하는 다양한 후속 메뉴가 연이어 출시를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지역 특산물 활용사업은 지역 고유성을 지닌 산물을 적극적으로 상품화하는 노력일 뿐 아니라 지역을 찾아오는 방문객에게 깊은 감흥을 줄 수 있는 한 차원 앞선 관광자원화의 결실이다.

홍보 대상도 지자체 내의 산물에 한정되어 홍보가 보편적인데 반해 자기 지역 뿐 아니라 광역 지역의 산물을 더불어 홍보하여 지역 브랜드의 가치를 연계 상승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회 결속 및 활동의 주체는 주민 또는 상인들로 사업 기획, 추진, 홍보, 실행을 스스로 진행하고 있으며, 행정 기관은 말 그대로 점포 장려, 사업 운전자금 대출에 관한 지원 장려에 해당하는 행정만을 담당하고 있다.

Ⅲ. 노보리베츠

1) 이야기로 만들어진 노보리베츠

노보리베츠시는 홋카이도를 대표하는 온천 휴양도시이다. 1858년 유황채굴업자 오카타한페가 이곳에 처음으로 대중 온천탕을 시작한 이래, 주민 스스로 접근이 열악한 교통기반을 개선하여 마차, 궤도마차, 연결전차, 버스에 이르기까지 현재의 모습으로 이루어 놓았다.

노보리베츠에서는 활화산 분화공의 수만크이나 많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또 만들어지고 있다. 분화공의 끓어오르는 열탕과 유황 내음 매캐한 노천 계곡이 마치 도깨비가 사는 지옥과 같다하여 자연스레 도깨비가 시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밖에도 온천 개발 역사와 유래, 염라 전설 등 스토리를 만들어 신비롭고 정감있는 노보리베츠 이미지를 이루는 탄탄한 기반이 되고 있다.

연수단의 숙소인 다이니치다키토모칸(第一瀧本館) 역시 창업자가 이곳에서 온천욕으로 아내를 치료한 이야기를 스토리로 브랜드화 하여 ‘瀧本の湯, 愛妻の湯’라는 누구라도 공감하는 브랜드로 활용하고 있다.

온천 외에 별다른 관광자원을 갖추지 못한 온천마을에서는 단조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규모 문화 공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도깨비에서 파생된 대금봉(大金棒) 조형물과 연주, 민속 공연이 주기별 마련되어 관광객들에게 또 다른 감흥을 선사한다. 노보리베츠도 지역 산물에 대한 배려가 예외는 아니며 관광 상점 뿐 아니라 호텔 내에서도 지역 특산물을 소재로 하는 다채로운 상품이 구비된 매장을 마련하여 지역의 매력을 관광객에게 한층 가깝게 보여 주고 있다.

2) 에도 시대로의 여행, 노보리베츠 시대촌

노보리베츠 시대촌는 지역 전통 문화를 소재로 하는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막연히 시대의 재



노보리베츠 시대촌은 코믹 시대극 공연이 주 콘텐츠이다. 공연 구성의 특징은 극 진행이 배우 외에 관객의 적극적인 참여로 장소에 대한 매력을 더욱 극대화하고 있다.

현을 넘어 에도(江戸) 시대 때 번성했던 다테항 마을을 면밀한 고증을 거쳐 재현한 민속촌이다. 입장 전부터 사무라이 복장을 한 피에로가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시작하여 단지에 들어서면 기념품상점, 찻집, 라면전문점, 전통과자점 등 전통풍 상업시설이 구비되어 있다. 철저하게 에도 시대의 특징을 재현한 건축물은 물론 시대촌 대표를 비롯한 상점 종사자나 스텝들이 완벽한 에도풍 의상으로 차려 입어 마을 전체가 시대를 거슬러간 듯한 착각에 빠지게 한다.

시대촌은 한 마디로 과거 생활상의 재현에 그치지 않고 지금 시대의 소구대상의 경향과 요구에 걸맞는 흥미 요소와 코믹하며 낭만적인 요소가 가미된 살아있는 예능 이벤트 랜드라 할 수 있다. 공연 콘텐츠는 닌자 이야기를 다룬 닌자도리데, 오다이진 놀이(부자놀이)인 난마게 등 관람객에게 적합한 시대 단막극인데 객석과 무대의 경계가 없는 현장극으로 진행되거나, 관객이 공연 전에 배역을 맡아 함께 공연에 참여하는 등 언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외국 관광객에게도 감흥을 줄 수 있게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공연 콘텐츠 외에 우리의 서당에 해당하는 테라코야를 운영하는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한자 교육과 전통 예절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또 다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시대촌 입구에 위치한 대규모 전통건축으로 재현된 관광음식점 아오바고텐에서는 단순한 식단인 것 같지만 지역 특산물인 감자, 옥수수, 닭고기를 주재료로 하는 지역 고유의 소박한 전통 메뉴를 선보이고 있는데, 음식 맛 보다는 지역과 시대 분위기를 맛 보여주고 있었다.

IV. 도야

1) 도야 마을만들기 관광협회

도야호 및 활화산 온천 관광지역 내에 위치한 농촌마을인 도야마을은 농업과 여름철에 도야호

를 활용한 체험 수상관광이 주 수입원이다.

비영리 단체(NPO법인)인 도야 마을만들기 관광협회를 중심으로 '도야 마을만들기'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데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역 농산물과 특산물 판매와 여름철 캠프촌 및 수상 레저 시설의 임대가 주된 사업이다.' 판매 사업은 관광 버스 휴게소와 호수 전망대 사이에 판매 센터인 미즈노역기(수변역, 일본에서는 역이라는 명칭을 흔히 사용함)를 설치하여 이 사업의 거점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

보다 많은 외부인의 방문을 촉진하기 위하여 미즈노역기 내에 개방화장실을 설치하였고 관광 버스가 정차하는 휴게소를 노선 버스 정차 휴게소로 확대 활용하여 관광객 외에 주변 주민들까지 목표시장으로 확대하고 있다.

도야 마을의 특성 및 규모에 적합한 홍보방식을 활용하고 있는데, 미즈노역기에 진열된 상품의 하단에 효능, 조리법 등 상세한 상품 정보를 기입하는 섬세함을 보여주는가 하면, 매체를 활용한 대규모 홍보 보다는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형 이벤트나 마을 내 음식점과 관광시설이 소개된 간단한 리플릿을 제작·배포 하는 등 실효성을 위주로 하는 홍보를 펼치고 있다.

현재는 2008년 G8 정상회담 개최지였음을 상기시키는 고객 응모 이벤트인 '2009 홋카이도 도야호 애프터 서밋 스탬프러리'를 시행하고 있었다.

'2009 홋카이도 도야호 애프터 서밋 스탬프러리'

도야마치츠클리관광협회 주관으로 인근 음식점 6개, 관광 체험장 18개, 미즈노역기(농산물 판매점) 등 분야별 1개 업소의 스탬프를 응모엽서에 해당란에 찍어 반송하면 추첨하여 가맹점 숙박권이나 신선한 야채를 증정하는 이벤트로 가맹 회원점의 존재를 관광객에게 분명히 인식시키는 효과를 기대

2) 살아있는 활화산의 상품화

도야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도야호와 현재도 활동중인 활화산 군인 쇼와신잔과 우수잔을 들 수 있다. 쇼와신잔은 쇼와(昭和)시대인 1943년에 평탄한 보리밭이 화산 폭발한 이후 지반이 지속적으로 융기되며 생성된 해발 402m의 활화산으로, 산기슭에 있는 쇼와신잔 미화센터에서 쇼와신잔의 생성과정과 분화할 당시의 모습, 주변 식생 등을 영상자료로 볼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우수잔은 대우수, 소우수, 우수신잔, 화구군 등 1663년 부터 주기적으로 분출한 화산군으로 둘



보리밭이 지속적으로 융기하여 생성된 쇼와신잔의 기록과 보존을 개인적으로 수행한 우체국장의 기념동상

레를 따라 전망 지점이 마련되어 있어 살아있는 화산의 모습을 살펴 볼 수 있다.

도야는 주기적으로 화산 분출이 발생되어 피해가 이어지는 지역임에도 이곳 주민들은 이러한 재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자연 재해인 화산분출과 화산지역 일대를 기록하고 상품화 하고 있는 열정스러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쇼와신잔의 생성과 지형 변화를 관측하고 기록한 주인공인 우체국장의 동상건립을 하여 주인공 만들기과 함께 관련된 스토리를 부각시키고 있으며, 이 장소가 겨울철 행사인 눈싸움을 시작한 지역임을 각인하기 위해 '雪合戦(눈싸움 이벤트)'의 발상지 쇼와신잔'이라는 새로운 기원을 만드는 등 관광자원에 실감을 더하는 생명력을 넣고 있다.

V. 오타루

1) 로맨틱 스트리트, 오타루

메이지(明治) 중기부터 타이쇼(大正) 시대에 걸쳐 번창했던 항만도시였던 오타루 시는 지금은 관광이 주산업인 소도시이다. 오타루 시내 곳곳에는 이 시기에 세워진 역사적인 건축물이 많이 남아있어 유럽의 중세도시에서 느낄 수 있는 이국적이고 낭만적인 도시 풍경을 자아내고 있다. 북쪽의 월스트리트라고 불리었던 이로나이 거리 주변에 있는 일본은행을 비롯한 여러 은행의 석조건물과 중후한 석조 창고 등이 대표적인 근대 건물군으로서 지금은 내부를 개조하여 관광객용 음식점이나 쇼핑점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오타루시선정 역사적건축물로 지정되어 있는 '오르골당' 역시 1912년 세워진 벽돌과 석조로 마감된 2층 목조 건물인 미곡회사 창고를 재건축하여 지금은 대규모 오르골 전시판매점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곳에는 유리제품의 진품 오르골을 비롯하여 15,000점이 넘는 진귀한 오르골이 전시되고 있어 오타루시의 낭만적이고 환상적인 이미지를 더욱 뚜렷하게 하는 명소가 되었다.

오타루 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소로 오타루 운하를 들 수 있는데 항만기능이 쇠퇴하면서 철거될 위기도 있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그 모습이 남게 되었다. 석재 보도로 된 산책로에는 각종 기념 동판과 가스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인력거 등 근대 시기로 거슬러간 듯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어 오타루의 도시 모습을 형성하는 주요한 장소가 되고 있다.

오타루시의 매력은 한마디로 작은 도시이지만 뚜렷한 도시 색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초기 도시가 형성될 시기에 유행했던 네오 바로크 양식의 석조 건물 양식을 도시 전체에 적용하는데, 새로 지어지는 건축물에도 동일한 유형이나 입면 모습을 갖도록 하여 일관된 도시의 시대 모습을 연출하고 있었다. 여기에 이러한 도시의 외형에 딱 들어맞는 관광 콘텐츠인 오르골, 유리공예, 초콜릿 등의 소재를 담고 있는 것이다.

활용도가 없어진 운하를 재정비하고, 방문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관광 명소로 재탄생 시키며, 근대 건축물을 없애거나 단순히 보존하는 단계를 넘어 새로운 활용 방안을 접목시켜 재탄생시키고 있는 노력들은 점차 사라져가는 근대건축물을 놓고 고민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도시이다.



근대 석조건축물의 형태를 표준으로 시가지가 일정한 건축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다.

2) 오타루 「 시내에서 쇼핑하기 운동」

소비성향의 다양화나 도시간 경쟁의 심화, 인구의 감소, 중심상점가의 대형점 폐쇄의 영향으로 2003년 오타루시의 소매상품 판매액이 1,592억엔으로 지난해에 비해 150억엔이 감소하는 등 상권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타루상공회의소를 주축으로 오타루 시의 상권 회복을 위하여 시내에서 쇼핑이나 음식점 이용 추천을 행정, 각종기관, 단체등과 연계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먼저 오타루상공회의소, 오타루시광보, 신문보도를 통해 공모하여 결정된 캐치프레이즈 '우리 모두 거리의 서포터, 오타루에서 쇼핑은 오타루의 원기'(みんな街のサポーター 小樽で買物 小樽

〈표 1〉 오타루시의 연도별 상업통계수치

연 차	점포수(점)	종업원수	판매액(억엔)	비중(%)
1987	2,479	10,606	1,492	2.5
1990	2,414	10,315	1,793	2.6
1993	2,276	10,933	1,786	2.5
1996	1,960	10,355	1,872	2.5
1998	1,946	12,249	1,856	2.6
2001	1,812	11,215	1,743	2.6
2003	1,775	10,570	1,592	2.4

*2003년 홋카이도 점포수 :48,858, 종업원수 359,897, 판매액 :65,651억엔

の元氣)를 행정, 각종기관, 단체나 상인 등이 사용하는 광보지, 서류통, 신문, 리플렛, 스티커 등 매체나, 상공회의소건물에 게시하는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광고사업으로는 노선버스, 택시 차내에 포스터 및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FM오타루 「상공회의소소식」 등 매체활용과 홋카이도 중앙버스 차내 방송을 실시하는 한편 시내 중심 상가에서 사은품과 함께 홍보물을 배포하는 캠페인을 실시하며, 계발상품으로는 탁상용 미니 노보리기(배너의 일종)를 제작, 배포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Ⅵ. 삿포로

삿포로는 홋카이도의 도청소재도시로 1899년 미농무성 추천으로 초빙된 메사추세츠 농과대학장 윌리엄 클락(William S.Clack)에 의해 계획된 도시이다.

아이러니하게 일본 속의 또 다른 미국적인 도시로 시가지는 바둑판처럼 정연한 가구(街衢) 구획을 보이고 있다.

1) 전통시장의 진수, 장외시장

장외시장이란 중앙도매시장 밖에 위치한 소매시장으로 대개 새벽 4시쯤에 개장하여 오전 10시에 파장한다. 이곳 삿포로 장외시장 역시 삿포로 중앙시장 밖에 위치하여 수산물과 일부 청과물을 판매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취급하는 신선한 수산물을 재료로 하는 초밥이나 덮밥을 판매하는

음식점이 구색을 이루어 시장다운 분위기를 한껏 풍기고 있다.

삿포로 장외시장의 구조는 한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상회가 연립한 형식의 시장이 도로를 따라 길게 늘어서 있는데, 한 건물에는 주 상점과 여러 개의 소형 상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일된 형식의 연합 간판을 사용하고 있어 건물간의 차별성과 건물 내에서의 통일성이 조화롭게 유지되고 있다.

시장 건물은 지은 지 오래되었고 상점 입구 보행로의 폭도 좁은 편이지만 지속적인 건물의 개보수와 외관과 달리 내부의 진열상태나 상품설명이 잘 되어있으며 상점 앞 적재 라인을 준수하기 때문에 재래시장에서 통상적으로 느끼는 혼잡함이나 불편함은 없었다.

또한 인근 지역 주민에게 식재료를 공급하는 시장으로 그치지 않고 각종 관광 협회와 제휴를 맺어 관광객이 들르는 장소로 명소화하여 시장을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2) 삿포로 시장의 역사, 다누키코지

다누키코지란 말은 일본어로 '너구리 골목'이란 뜻으로, 옛날 삿포로에는 능숙하게 사람을 속이는 여성들이 많아 그렇게 이름 붙였다고 전해진다.

1873년 홋카이도 개척사 관사가 구도본청(舊道本廳) 옆 터에 세워지면서 몇몇 점포들이 점차 모여들기 시작하여 현재와 같은 아케이트의 모습과 규모로 형성되었다. 동서 약 90m 거리, 7개 블록에 걸쳐 약 280개의 상점들이 집중적으로 몰려있으며, 특산품점과 음식점, 영화관, 의류점, 파친코 등 점포가 늘어서 있고 주변에는 백화점과 100엔 숍도 모여 있어 시장다운 북적임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장소이다.

모든 아케이트가 1차 비가림 시설을 한 이후 1~6정목 아케이트는 1972년 11회 삿포로 동계올림픽 개최 시기에 재차 개폐식 비가림 시설을 하여 지금까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상권이 침체된 7정목은 재래식 함석 비가림



농수산물에 풍부하여 지역 산물을 판매하는 상점이 눈에 띈다. 상점이름도 둔전사로 지역 특성을 띤다.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모든 정목의 비가림 아치의 형태나 색상과 개별 점포 전면의 돌출식 간판의 형태는 일정하지만 돌출 간판 면의 상징색과 디자인이 정목 마다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개별 간판은 일정한 물이나 크기, 벽면 돌출 정도, 수량 등에서 기준은 없었으나 일정 수량 이상 설치할 때에는 시에서 간판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외 업소 전면부의 상품 적재 진열 라인이나 자동차 통행금지 등 자체 규약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 다만 통로 중앙부에 접이식 벤치 설치 외에는 휴식 공간 마련이 부족한 점을 보였다.

3) 홋카이도의 심벌, 홋카이도 구본청사



홋카이도 구도청사 건물. 붉은 벽돌 외장으로 아카렌카로 불리는 홋카이도 상징물.

아카렌가(赤煉瓦)붉은 벽돌라는 별칭으로 알려진 구본청사 건물은 홋카이도 개척 초기인 1888년 도청 건축기사에 의해 당시 유행하던 미국풍의 네오 바로크 양식으로 설계되었다. 건축에 소요된 벽돌, 석재, 목재 등 대부분 재료가 홋카이도에서 생산된 자재를 사용하였다.

건물 넓이 61m, 폭 36m 탑정상부까지 높이가 33m로 현재의 10층 건물의 규모와 같아 고층 건물이 없던 당시에는 보는 이를 압도시키기 충분한 위용을 지닌 홋카이도의 명

물이었다.

내부는 바로크 건축 특유의 아치형 천장과 실내장식이 아름다우며 낭만적인 맛이 살아있다. 1909년 화재로 내부가 소실된 후 1911년 복구를 마쳤으며, 1968년에는 1896년 철거했던 중앙 팔각탑과 환기구 등의 복원공사를 마치면서 지금의 모습을 되찾게 되었고, 1969년 국가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다.

내부는 역대 장관과 지사의 집무실, 홋카이도의 역사 문서를 대대로 모아놓은 도립문서관과 개척자료 전시실로 사용되고 있다. 역사갤러리에는 북해도 출신 화가가 제작한 개척 내용을 담은 기록회화 20점이 전시되어 있다.

VII. 종합 시사점 및 제언

홋카이도의 도시는 일본의 전통적인 도시라기보다는 개척기 이후인 메이지 시대와 타이쇼 시대인 근대에 형성된 도시로서 미국의 도시 계획에 의하여 서구식 이미지로 개발된 도시이다. 그럼에도 선주민인 아이누민족의 문화와 생활상 재현, 전통의 모습과 근대 건축물의 보존 및 복원은 100여 년 개척기간 속에서 새로운 문화 소재의 발굴과 개발이라는 일본 특유의 이야기와 전통 만들기의 한 단면을 볼 수 있었다. 단순히 희미해져가는 전통의 재발굴을 넘어서 지금 시대의 소구자에게 어필할 수 있도록 새로운 틀로 재유형화하는 시도를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다.

① 외관의 개선사업

새로운 시설의 신설보다는 시장이 추구하는 시대성에 걸 맞는 외관으로 보존하며, 신축 시에도 시대적으로 동일한 스타일의 유지가 필요하다.

- 간판의 획일화보다는 게시 영역, 수량과 면적의 총량 등 일정한 기준만 정하고 그 외 부분은 상인연합회와 업소에서 개별적으로 구상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상가그룹 당 연대감을 확실하게 구분 지어주며, 간판 의존도가 높은 업종의 경우 초과 설치한 간판에 대해서는 시에서 간판세를 징수하도록 함.
- 설비의 개선 등 허물고 새로 짓기보다는 적합한 용도의 파악, 개선 방안, 분위기 연출 등으로 해당 상품 뿐만 아니라 분위기를 판매함.

② 상인자치의 활성화

중앙 정부 및 지자체에서 상인연합이나 개별 업소에 시설 개선비용 등을 지원하는 경우는 드물며 상인연합회 차원의 자발적인 사업과 활동이 원동력이 되고 있다.

상인연합이 개별시장 별 마케팅 및 홍보 활동, 시설 개선 및 관리 유지, 시장 아카데미 등 지방 정부의 간여를 최소화 하면서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능력을 배양하여야 한다.

③ 끊임없는 스토리 텔링

이야기로 생겨나 이야기로 유지되는 스토리텔링이 일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야기가 후대에는 전통이나 역사가 됨을 인식하여 스토리를 창출하여야 한다.

- 옛 시장터나 주요 상업시설 등에 대한 터 찾기, 자료 수집 등 역사나 유래의 발굴
- 장소의 유래에 대한 장소 마케팅의 활성화가 요구

④ 다양한 문화 콘텐츠의 발굴과 공급

시장이야말로 축제가 태동하고 이어져야 하는 대표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이벤트 소재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발하여야 한다.

공연거리로만으로는 소재의 한계가 있으며 지역적 고유성과 특성이 충분히 가미된 다변적인 소재를 이끌어 내야 한다.

- 공연 등 동적인 요소와 정적인 요소의 결합 모색
- 먹고 마시는 노래자랑 류의 축제 탈피, 전통의 기점이 될 수 있는 유형 개발
- 시군별 공연 이벤트 아이템을 발굴 육성하여 시군 간 교차 지원 시스템 마련

⑤ 개별 브랜드와 광역 브랜드의 결속

홋카이도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나 가공품에는 지(地)자를 앞에 붙여 지역산임을 강조하며, 상품 브랜드나 상호 등에도 지역색을 강조하고 있다.

- 예/地酒, 屯田舎, 히구마(불곰) 등을 사용하고 있음
- 타누키코지 아케이트 내 '道産食彩 HUG イート'브랜드 매장 성황을 이룸

⑥ 농특산물 유통의 차별화

농협 등의 대형 유통이나 시장 출하 외에 신선도나 생산량이 적은 품목, 생산자의 특색이 강한 상품의 경우 지역 내 유통 체계가 필요하다.

- 미즈노엑기나 도야의 미즈노엑기와 같은 지역 인근의 공급 체계의 구축이 외부 방문객을 지역으로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이 됨

달콤한 초콜릿, 가나의 자연환경

정종관 |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2009년 5월 17일부터 22일까지 서부 아프리카 가나에서 "영향평가와 인간의 행복(Impact Assessment and Human Well-being)"을 주제로 제29차 세계영향평가학회(IAIA)가 열렸다. 이렇게 주제를 설정한 이유는 생태계 서비스와 인간의 행복을 지식기반으로 연계하여 발전과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대세로 만들어가기 위한 수단의 개발에 중점을 두려고 했기 때문이다. 새천년생태계평가

(2005) 기준에서 본 인간의 행복 요소는 안보, 삶의 영위를 위한 기본적인 물질 욕구, 건강, 좋은 사회적 관계, 선택과 행동의 자유로 구성되어 있다.

금년에는 전세계 90개 국가에서 550명의 환경영향평가 전문가들이 참가했는데, 참가자들의 면면을 보면 환경평가방법론을 다루는 각국의 환경학자와 교수,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환경컨설팅 업체,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 제 3세계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차관을 제공하는 세계은행 및 국제금융기구의 환경성평가 담당자 등이 대부분이다. 세계영향평가학회는 환경평가기법 개발, 각국의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친 영향이나 사례 등에 대한 정보



〈사진 1〉 제 29차 세계영향평가학회 학술대회

교환 및 경험공유의 장으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의 환경영향평가의 연구방향 추세는 환경지속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도구로서 정책, 계획, 프로그램, 사업추진 등 전과정에 대한 전략 환경평가(SEA)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삶의 질 향상이란 점에서 건강영향평가(HIA), 사회영향평가(SIA) 등 평가기법의 다양화, 세분화가 점점 더 강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방법론이 성숙해지고 적용되는 요인 변수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영향평가의 실제 성과 신뢰성도 도전을 받게 된다. 그 결과 환경영향평가 수단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하는데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되는지 조사해보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학회의 주제는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평가의 영역과 사안에 대해 주제포럼(theme forum)과 분야별 발표(concurrent session)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학회에서 다뤄진 주요 주제로는 공동체의 복지와 건강수호, 새천년목표로서의 빈곤타파, 석유가스자원의 개발, 정보통신과 지속가능한 발전, 공급사슬과 영향평가의 연계, 남북간의 저에너지 해결책, 환경영향평가 수단과 방법론, 환경과 사회를 고려한 동향 등을 다루고 있다.

현재 세계적인 영향평가의 동향은 의사결정 지원시스템으로서 전략환경평가가 강조되면서 사업단계의 환경영향평가, 사람과 생태계의 건강성을 반영하는 건강영향평가, 시공간적 복합사업 시행에 따른 누적영향평가의 통합을 통해 인간의 복지를 어떻게 증진시킬 것인가를 고려하는 전략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추세다.

특히 제3세계에서 열린 학회의 특성상 그들의 자연환경 여건과 국가의 보전관리정책 동향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흔히 아프리카하면 내전, 빈곤, 말라리아, 에이즈 등 부정적인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환경적 관점에서 인류문명 발달사를 기술한 「총·균·쇠(Guns, Germs and Steel)」로 유명한 환경학자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언급했듯이 21세기는 더 이상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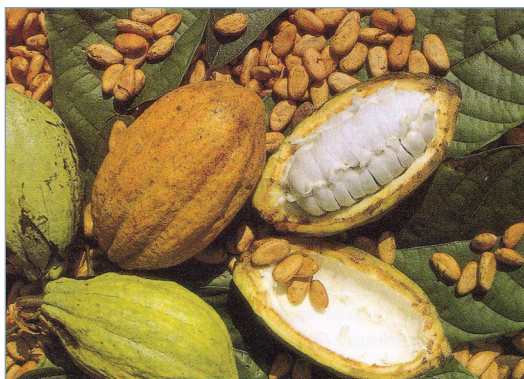
아프리카의 농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펴낸 보고서(2009. 6)에 따르면 아프리카는 전세계 인류의 식량을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면적의 비옥한 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보고서는 '16억 헥타르의 토지를 아프리

카와 남미에서 추가로 찾을 수 있으며, 이는 현재 경작면적인 14억 헥타르와 합하면 증가하는 인류 모두에 식량을 제공할 수 있는 토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FAO와 세계은행이 작성한 이에 대한 자세한 2차 보고서에서는 약 4억 헥타르의 경작지를 현재 25개 아프리카 나라에서 구할 수 있으며, 이 토지는 경작하기에 아주 비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특히 이 같은 경작지 확보 노력은 바로 태국 등에서 최근 시행한

경작개량사업을 예로 들면서 관개시설과 토지의 비옥도 문제 해소를 최적의 경작지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아프리카에서도 개간한 토지를 경작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는 강력한 정부의 조치만 있다면 충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보고서는 아프리카 지역의 광대한 토지들은 보기와는 달리 비옥한 토지이며, 단지 관개시설의 미비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치체제가 갖춰지지 않아 식량을 계속해서 다른 지역에서 수입해야 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사진 2〉 초콜릿의 원료가 되는 카카오열매

아프리카의 환경

전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각국은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고 배출권(CERs: 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을 확보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매립가스의 포집, 폐기물의 자원화 등에 대한 CDM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프리카 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아프리카 도시들은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대기오염도가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으며, 산업오염, 농업폐기물과 쓰레기소각, 낡은 자동차 사용, 질 낮은 연료사용 등으로 인해 환경, 건강, 농작물에 까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국제사회는 아프리카가 산업화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여 청정에너지를 개발하고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세계은행(World



〈그림 1〉 가나의 여행지도

널확보가 요구된다. 따라서 각국의 관련 전문가들과 정보 및 인적교류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기후변화분야의 협력의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가나의 환경

가나의 기후조건은 열대기후로 연평균 23-31도 수준이며, 1년에 우기는 3-7월, 9-10월 두 번이다. 건기인 10월 중순에서 다음해 3월 중순까지 사하라사막에서 불어오는 북풍(Harmattan)으

Bank)과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이 주도적으로 아프리카 대륙내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화사업 등 선진국의 투자를 보다 활발하게 진행시켜 주기를 요구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의 공통점은 각국 정부가 기후변화협약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정부차원에서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이와 관련된 사업을 개발·추진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기후변화 및 CDM관련 유관 정부기관들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자국의 기후변화정책 및 투자환경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가나에서는 폐기물매립지와 CDM 연계사업을 비롯하여 전통적 농업국가의 특성상 자트로파 등 바이오디젤 연료 생산사업 등에 큰 관심을 가지고 각 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기후변화 및 CDM 관련사업을 개발하고 당사국간 공동연구의제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협력 채

로 인해 시정(視程)이 상당히 줄어든다.

학회가 열리기 전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수도 아크라에서 동쪽으로 40km 떨어진 샤이 자원보호구역(Shai Resource Reserve)인데 이곳은 사반나 식생으로 비교적 경사가 완만한 지형으로 오래된 바오밥나무가 시선을 잡는다. 1892년까지 샤이족이 거주하던 곳으로 도기, 유리구슬 공예품, 코끼리와 야생들소 뼈 조각이 발견되었다. 그 외에 31종의 포유류, 175종의 조류, 13종의 파충류 이외에 원숭이 등의 중요한 서식지 기능을 갖고 있다.



〈사진 3〉 샤이 자원보호구역의 바오밥나무

이 지역에서 90km 더 가면 가나 북쪽 부르키나파소에서 발원하여 가나 동부지역과 이웃나라 토고를 관통하는 유명한 볼타강을 가로막은 아코숨보담과 볼타호가 있다. 볼타호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인공담수호로 호소 표면적이 8,502km²로 거의 충청남도 면적 크기에 해당한다. 이 댐은 가나가 1957년 영국 식민지에서 독립한 이후 수자원개발과 용수공급, 홍수조절 기능을 담당하는 국토개조를 목표로 한 거대한 프로젝트로 1962-66년까지 이루어졌다. 이렇게 호소표면적이 큰 만큼 52개 지역 8만명의 수몰민 이주와 지역사회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호소면적과 담수량에 비해 발전량은 840MW로 소양강댐 전력생산능력의 4배 정도이다. 그만큼 지형이 완만한 상태인데다 호소면적이 커서 일반적으로 홍수 시에 유입되는 부유쓰레기 문제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진 4〉 아코숨보담 수력발전 설비(좌)와 볼타호의 아코숨보담에서(우)

수도 아크라라는 대서양에 연한 도시로 고층빌딩이 적고 나지막한 건물이 숲으로 둘러싸인 도시이다. 그런 점에서 생태도시의 특성을 갖추고 있으나, 도시의 평면적 확산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심한 도로교통 체증, 미처리된 하수도, 낡은 자동차에 의한 매연과 석유냄새 등 취약한 도시기반시설로 인한 도시환경문제가 지역적 이슈로 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에서 수입한 낡은 차에다 차량유류의 옥탄가가 낮아 휘발성 유기화합물 냄새가 심하여 건강상으로도 취약하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먹는 물은 우물물이나 비닐봉지에 담긴 생수를 사용하는데 사용한 비닐과 펌트병 등이 무분별하게 버려져서 도시미관과 경관 등을 크게 해치고 있다. 그리고 전력기반시설이 부족해서 에어컨을 가동하면 과부하로 인해 전등불빛이 흐려질 정도로 전력사정이 불안정하다.



〈사진 5〉 아크라 해안의 청소년축구단(좌)과 아크라 교외의 우물물 나르는 여인(우)

아크라는 식민지시절 노예 수출의 거점도시였으므로 내륙에서 끌고 온 노예들의 집결지로, 지금도 노예감옥이 남아있다. 역사의 아이러니이지만 노예감옥이 지금은 관광객의 방문지로서 인간의 존엄성과 역사의 엄중함에 대해 교훈을 주는 곳이다. 그래서 아크라의 옛 시가지는 오래된 낡은 집과 좁은 길, 혼잡한 거리 등으로 아프리카다운 느낌을 준다. 지금은 도시재생 사업과 미처리하수로 오염된 습지 복원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나 워낙 사회간접자본이 부족하고 수질이 나빠 환경정화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콜레 라군(Korle Lagoon) 복원지역의 경우 부유쓰레기를 차단하는 차단막과 수처리 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나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호소습지의 수질은 과거 난지도 매립장 침출수 수준인데 혐기성 분해가 일어나고 있어 악취가 심하다. 그런 가운데에도 망그로브 나무는 호소 주변에 자라고 있고, 나무에는 새들이 곤충 등을 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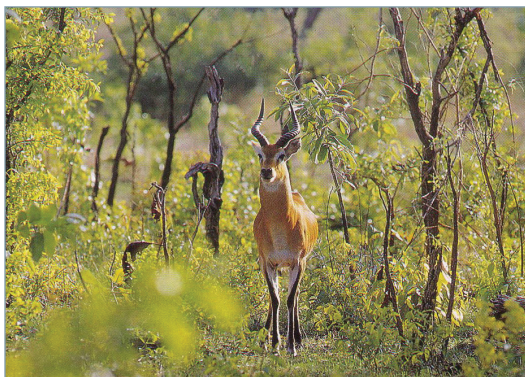
아 먹으며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수질이 개선되고 호소와 바다가 연결되어 물 순환이 원활해지면 점차 개선될 전망이다. 한편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노예해안에 위치한 망루가 해안침식에 의해 유실되었고, 수변구역에 위치한 건물이 무너져 내린 흔적을 볼 수 있다. 그래도 해안에서는 중학생들이 축구를 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낙천적이고 우리 한국 사람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자세를 보인다.



〈사진 6〉 콜레 라군 생태복원 사업의 유입수 차단시설(좌)과 아크라 해안침식에 의한 유실(우)

아크라에서 서북쪽으로 200km 떨어진 카쿰 국립공원은 면적 357km²이며 1932년에 지정되었다. 이곳은 최고 90여km에 이르는 거목 열대우림지역으로 생물종의 다양성을 직접 느끼고 자연의 경이로움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희귀한 나비, 조류, 사냥감 이외에 붕고영양, 숲코끼리 등이 있는데 코끼리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과일을 주워가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지상 30-40m 높이로 설치된 단집관찰로(canopy walkway)는 쇠줄과 그물망으로 거목사이를 연결하고 있는데 못으로 박은 흔적이 없었다. 그만큼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하였고 탐방객이 유격훈련하듯 천천히 걸으며 자연의 위대함을 맞볼 수 있다.

열대우림은 재질에 따라 경목(hardwood)과 연목(softwood)으로 구분된다. 대체로 상록수림으로서 마호가니 종류처럼 경목이 대부분이지만 침엽수는 아니나 재질이 부드러운 연목도 있다. 성장속도가 빠르고 많은 동물들의 서식지이며 지역주민에게는 식량, 연료, 의약, 목재 제공기능을 갖고 있어 신약개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립공원 안내자는 이 공원의 역사적, 생물자원의 가치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터전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다.



〈사진 7〉 사반나지역의 붕고 영양(좌)과 카쿰 국립공원의 숲코끼리(우)



〈사진 8〉 카쿰 국립공원 안내판(좌)과 국립공원의 당과(糖菓)나무를 설명하는 안내원(우)

탐방객 센터에는 국립공원의 가치, 열대우림 잠식화의 원인, 서식하고 있는 다양한 생물종에 대해 상세한 설명과 함께 탐방객이 직접 만져보고 생태적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차원에서 배려한 흔적이 묻어났다. 그 상황을 보면 교육이야말로 인간의식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며, 아이들이 일찍 학교에 가는 모습만 보더라도 이 나라의 장래가 밝고 탄탄함을 보여준다.

가나는 1957년 독립이전에는 황금해안의 나라(Gold Coast)로 불렸다. 이 나라의 자연환경 조건은 강우량이 충분하고 동부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250m 이하의 평탄지형이므로 옥수수, 카카오, 사탕수수 재배에도 적합하다고 한다. 그래서 식생이 양호한 야산 지형을 개간하거나 농업



〈사진 9〉케이프 코스트 해안지역 마을 풍경

용지로 개발하기도 비교적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바이오연료 생산을 목표로 열대농업 기술을 전수하고 세계로 향한 한국인의 부지런함과 열정이 이들과 힘을 합치면 우리나라에게도 황금의 나라로서 협력관계 구축이 용이할 것이다. 무엇보다 가나가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서부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경제발전 속도도 빨라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 정립 차원에서도 향후 관심이 집중될 것이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 가나자와(金澤)

이충훈 | 충남발전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장

I. 가나자와(金澤)

1. 가나자와 현황

- 가나자와시는 지형학적으로 일본의 중간 지점인 호쿠리쿠(北陸)지방에 위치하고 있고, 약 45만의 인구를 가진 정치·문화·경제의 중심지로서 해안도시이다. 가나자와는 사찰마을이나, 성(城)을 중심으로 발달된 도시형태를 가지고 있어 전형적인 일본의 중세도시로 분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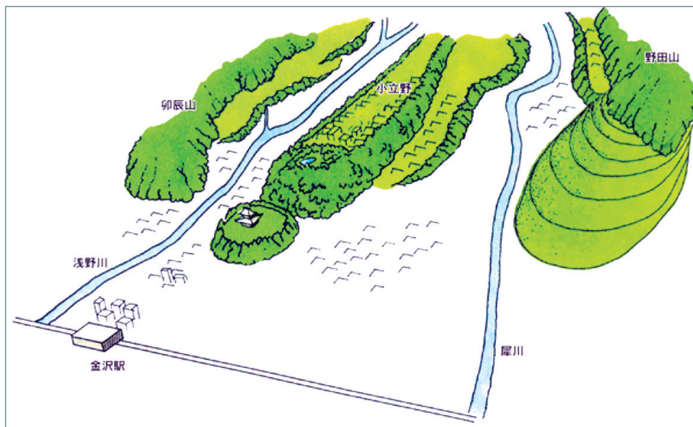
2. 가나자와시 경관정책

- 가나자와시의 경관정책은 단순히 관광객의 증가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주민의 생활향상, 환경미화, 문화예술, 기회창출 등 정주환경으로서 쾌적한 환경조성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 가나자와는 제2차 세계대전 중 공습을 받지 않아 전통도시로서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인구의 유출이 매우 적고, 공간구조의 원형이 거의 그대로 남아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

본 내용은 충남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연구의 일환으로 일본 현지 자료조사를 위해 '09년 6월 19일부터 6월 23일까지 4박 5일간 일정으로 가나자와, 다카야마, 시라카와고를 방문한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한다.

다. 이러한 장점을 지키기 위해 일본 최초로 "전통환경보존조례"를 제정하였고, 지역 특성을 살리고 개성있는 역사문화경관의 보호와 유지를 해나가고 있다. 또한, 활성화된 전통산업을 기반으로 관광산업과 연계된 지역경제를 구축하고 있다.

- 경관정책의 기본방향은 전통건축물과 현대적 건물과의 조화를 이루는 개발과 보존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옛마을 풍경을 보존하면서 동시에 신도시 개발을 병행하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를 추구하고 있다.
- 가나자와시의 도시경관관리의 특징은 크게 2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첫째, 과거의 흔적을 보존하려는 지속적인 노력과 실천적인 정책의 추진과
둘째, 시민과 사업자에 대한 이해와 설득을 위한 합리적 프로세스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다.



〈그림 1〉 가나자와 경관 구조

- 역사문화경관 관련 조례 제정 현황은 다음과 같다.
1968년 전통환경보존조례, 1974년 문화재보호조례, 1977년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 보존조례, 1989년 : 전통환경보존 및 아름다운경관 형성에 관한 조례, 1994년 : 코마치나미 보존조례, 1997년 : 사면녹지보존조례, 2002년 : 조망경관보존조례, 사찰풍경보존조례, 2005년 야간경관보존조례, 가로경관보존조례

1) 옥외광고물 조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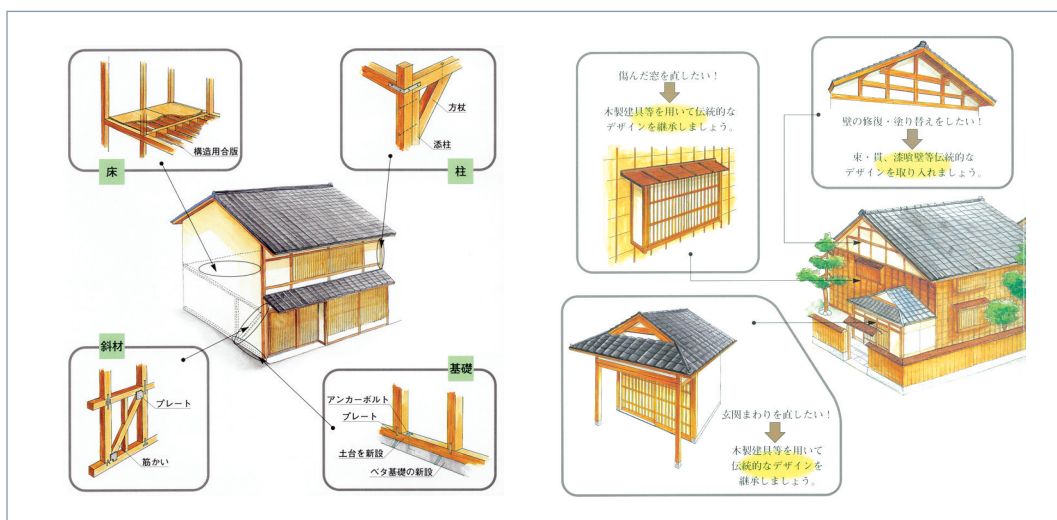
- 옥외광고물 관련법규 제정목적 - 아름다운 경관 유지

매주 1회 광고물 심의회를 개최하며,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은 없으나, 심의회에서 개선을 유도시키고 있다.

- 녹색지역의 경관에서는 건축물의 색도 동일하게 유도하고,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색채를 가나자와 지역에 맞게 적용하도록 하며, 강제성은 없으나 주민의 90% 정도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야간경관지역에서 상업지역은 밝게, 그 외 지역은 어둡게 조절하도록 한다.

2) 마찌즈구리 협정 - 마을가꾸기

- 바닷가와 시내도심의 사인형태는 구분하여 설치된다.
- 주민이 참여하는 경관형성사업은 고속도로 주변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청소를 하며, 시에서는 청소도구 및 음료수, 타올 등을 지원한다.
- 가나자와 주변환경의 조화를 위한 도로표식 개선 - 도로주변환경에 조화를 이루기 위한 안내표식 개선, 문자축소, 안전성 검토, 안내사인의 크기를 축소한다.
- 가나자와 마을 가꾸기 중심에서 시 전체로 확대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그림 2〉 건축물 복원 메뉴얼

- 설계자(연출가) - 시민(주역) - 사업가(기업, 지역단체, NGO) - 시(행정, 조정자 역할)가 협력을 통해 활동한다.

3) 건물개선 디자인 제시

-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건물디자인 개선방안 제공하고 홍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4) 색채기준

- 원색(R, Y, YR), 형광색 등 금지색 지정, Y계열에서 채도가 4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시 경고 및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 원색(R, Y, YR)이외의 색은 채도 2를 초과하지 못한다. 상표의 원색 면적이 넓은 경우 건물의 20% 이상 면적을 초과하지 못한다.
- 전통건조물이나 자연소재에는 착색을 금지하고 있으며, 목조건조물이 많아 나무색(소재색)을 권장한다.
- 금지색으로는 노랑, 보라, 적색계통의 색은 자연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5) 경관서포트 제도

- 가나자와시는 시민과의 경관학습, 경관교육을 통해서 협력관계를 이뤄나가고 있다.
- 같은 지역에서 주민들이 사진을 촬영하여 개선효과 여부를 측정하는 평가방법을 모색한다.

3. 가나자와 지역 활성화사업과 공공디자인 전개

1) 세계도시 구상과 도심 르네상스 계획

- 메이지유신 이후, 근대화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가나자와는 이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의 폭격이나 피해로부터 무사할 수 있었지만, 쇠락한 시골마을로 전락할 위기를 맞이하였다.
- 대도시로의 인구이동, 중심지의 상업화를 비롯한 급격한 지가 상승을 비롯한, 공공시설의 교외이전, 대형할인점의 진출, 자동차 증가에 의한 교통체증 및 환경오염 등은 지금까지 중심

시가지가 길러온 다양한 도시기능의 저하를 가져왔다.

- 이러한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가나자와 시는 1995년 '가나자와 세계 도시 구상'을 계획하고, '도심 르네상스 추진본부'를 설치하여 가나자와의 중심시가지 활성화를 최우선 중요시책으로 지정하였다.
- 이는 대규모 도심의 급속한 성장보다,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고 활용하여 도시의 성장과 발전에 있어 중심시가지의 활력과 매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다.

① 제1차 기본계획 (1998년~2003년)

- 테마 : 발전과 전통이 조화된 활력 있는 중심시가지의 형성
- 기본방침 : 역사, 문화, 자연을 활용하여 매력 있고, 활기 있는 '건는 마을'만들기와 상업가의 특성을 살린 상업 환경 형성
- 도시기반 정비 추진에 의한 활기 창출

② 제2차 기본계획 (2004년~2008년)

- 테마 : 마을안의 주거와 교류의 촉진
 개성을 살린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생활의 즐거움을 실감하는 정착 추진
 건강한 상점가, 도심 비즈니스의 형성
 마을 안의 교류활동



〈그림 3〉 가나자와 시청 도시정비국 브리핑

- 가나자와는 지역골격을 유지하는 가나자와성과 겐로쿠엔, 그리고 이것을 둘러싼 수로와 조망을 배려한 도로 등 역사적인 도시구조를 비롯한 중심시가지에 많이 남겨져 있는 문화적 유형 자산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예능, 전통공예 산업기술로 이어지는 무형자산 등 가나자와의 전통문화가 새롭고, 현대적인 것과의 조화를 이루고, 활기차게 사람이 살고, 모이고, 어울리는 도시,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도시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이를 위한 실천방안은 가나자와의 개성을 살린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활기와 교류가 넘치는 중심시가지를 추진하는 것이다.



〈그림 4〉 겐로쿠엔 정원 입구



〈그림 5〉 겐로쿠엔 정원

2) 경관 및 가로환경 정비사업

① 전통 환경보존지구 정비사업

- 지역 특성을 살리고 개성 있는 역사문화경관의 보호와 유지를 위해 '전통환경보존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조례에 근거하여 조망경관보존구역 내 고층건축물 제한 등 각종 건축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설계자가 직접 경관 진단서 및 경관 시뮬레이션을 작성하여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도록하고 있어 공간변경으로 야기되는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 가나자와 시는 혜택 받은 자연과 지형을 배경으로 중심시가지의 약 절반 이상을 '전통 환경 보존지역' 및 '근대적 도시경관 창출지역'으로 지정하고 개발과 보존이 조화된 아름다운 지역 만들기를 가로경관 측면에서 추진하고 이에 따른 정비를 진행하였다.
- 2006년 3월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간판정비 지구를 위한 기본방침을 마련하고 이후, 경관과 교통의 안전성을 중시하면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가나자와 만의 도로 표식 간판설치를 추진하였다. 또한 전통 환경을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을 전통 환경 보존 지구로 정하고 근대적 도시경관 창출에 필요한 각 지역의 건축물 및 조형물의 규모, 위치, 색채, 의장 등에 관한 기준을 수립하여 시의 개성 풍부한 아름다운 경관 형성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 고마치나미의 '고'는 '역사적 경관과 정서를 지닌 가로'를 뜻하는 '古'와 '작다'는 의미의 '小'를 모두 포함하는 말로서, '고마치나미'(小町並み)라는 이름의 사업을 통해 역사적으로 가치를 지니는 사무라이 가옥, 옛 가옥, 사원 등 건축물이나 유사 양식을 계승한 건축물이 모여 있어 역사적 가치가 높은 골목은 물론, 생활과 경제활동의 장소로서 가나자와만의 분위기를 자아내는 골목을 선정해 경관을 정비했다.
- 고마치나미 사업은 ①보존이 필요한 가로를 '고마치나미 보전구역'으로 지정하여, ②지역 특성에 맞는 '보전 기준'을 정하고, ③보전구역에서는 신축이나 개축이 필요할 경우 사전 협의를 통해, ④시가 개축과 수리 비용의 최대 7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구역 내의 역사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건물은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고마치나미 보전 건조물'로 등록하고, 시와 소유주가 보전계약을 체결하고, 구역 지정과 보전 기준은 주민과 전문가(대부분 가나자와 내부 전문가)로 구성된 '고마치나미 보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문화가 일상에 흐르는 가나자와를 만들기 위한 성숙한 주민 의식을 높일 수 있었다.
- 골목에 문화의 손길이 닿아 골목이 다시 활기를 띠고, 진정한 의미의 공간으로 자리 잡은 고마치나미 사업의 가장 대표적인 곳이 히가시차야 도오리(東茶屋通り)다. 히가시차야 도오리

는 이제 가나자와의 대표적인 관광지이자 이미지 공간이다. 이 거리는 가나자와의 이미지에 어울리는 공간으로, 일본 전통차, 가가유젠(加賀友禪, 일본 전통의상 염색법), 금박(金箔), 구타니 자기(九谷焼) 등 지역 특산물을 파는 거리로 재정비되었다.

- 이 과정에서 건축·조경·마케팅 전문가가 투입되어 건축물의 높이, 지붕의 형태와 재질, 외벽의 색채와 재질, 외벽의 위치, 식재(植栽)와 문이나 울타리 등의 조성, 외부로 드러나는 설비기기 지침, 옥외 광고물과 차양 등의 설치 지침을 마련하고, 업종 선정과 인테리어, 마케팅 관련 노하우를 전달했다. 또 간판·안내판·안내지도 등의 공공 사인 디자인 등의 경관을 정비해 전체 경관의 조화를 추구하고, '걸으면서 문화를 느끼는' 골목을 만들었다.



〈그림 6〉 히가시차야 도오리(東茶屋通り)지구

② 지역 보행 공간 정비사업

- 지역 내 벤치나 화장실, 식재 등, 시민과 관광객들의 걷기 쉬운 보행환경 정비 추진사업으로 가나자와 내에서 보행자 우선, 공용교통 우선 정책을 진행하여 가나자와 성을 중심으로 지역 특유의 역사유산이나 상점가를 즐기며, 둘러볼 수 있도록 보행환경 정비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정비에도 모두 지역의 특성과 이미지를 최대한 반영하는 디자인으로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였다. 가나자와 무사 가옥 주변의 공중전화 박스와 공중화장실은 옛 무사 가옥의 구조와 재료를 적용하여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③ 아트퍼니처 설치

- 가나자와 시의 아트퍼니처 설치는 문화예술이 살아있는 가나자와의 특성을 살리려는 시의



〈그림 7〉 공간, 시설물(인도, 블라드)

정책으로 가나자와 역에서 21세기미술관을 잇는 가로축을 중심으로 예술성이 넘치는 조각 작품 및 공예작품을 설치하였다. 이를 위해 가나자와 시에서는 세계 각국 에서 공모한 뛰어난 조각 작품을 설치하고, 기업의 쇼윈도우에 학생들의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가로경관의 매력을 높여 지역 전체에 즐거움과 활력을 부여하였다.

③ 가나자와 시냇물 정비사업

- 가나자와시 대로상의 정비에 따라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하는 도심 축 보행공간의 정비는 사람들에게 편안함과 친근함을 느낄 수 있는데 주안점을 두고 물, 녹음 등 자연의 요소를 최대한 활용하여 쾌적한 보행공간을 창출하였다. 특히 예부터 내려오는 가나자와시의 전통 수로를 적극 끌어들이 시냇물이 흐르는 도심의 쾌적함과 여유로움을 더욱 높였다.



〈그림 8〉 가나자와 시내 수로조성



〈그림 9〉 가나자와 무사촌에 조성된 수로

④ 자원을 낭비하지 않는 조밀한 구성

- 지역의 공공디자인 개발은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보행 공간 내에서 여러 가지 요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자원을 순환시키면서 지속적으로 지역사회가 운영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조밀한 구성은 각각의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고, 물, 바람, 녹음 등 풍부한 자연과 이들 요소가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이어지고 유지되어 이러한 지역 환경 속에서 질 높고 풍부한 거주공간과 쾌적함이 나온다.

- 가나자와 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중심의 도로정책을 통하여 지역의 활력과 매력을 증진시키고 이를 통하여 자동차 통행의 감소시켜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유도하였다. 또한 이를 통하여 에너지 절약 및 활발한 지역 교류활동을 가져왔다.

따라서 지역공간에서 보행자 중심의 보행권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공공디자인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림 10〉 차도와 인도의 턱이 없는 보행자 중심공간

- 스트리트퍼니처 디자인에 지역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소재나 형태를 적용하는 것은 지역 경관을 구성하는 하나의 큰 축이 될 수 있다.

가나자와시는 전통 환경 보존 지역을 설정하고 그 지역의 가로 시설물에는 가나자와 전통 건축물의 구조 및 소재, 패턴 등을 적용하여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게 하였다.



〈그림 11〉 가나자와 성주변 공원



〈그림 12〉 가나자와 시내 음성정보 신호등

- 가나자와 시는 특히 중심시가지에 사람을 불러 모으고 지역의 매력을 재발견할 수 있는 기회 창출 및 시민들의 문화, 예술의 새로운 창작활동의 장을 제공하는 시민 교류 활동에 큰 중점을 두고 있다.
- 지역교류 활동사업으로는 마에다 자료관,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 가나자와 문예관, 가나자와 노카쿠 미술관 등 교류 활동 시설을 개설하고 이들 문화 시설에 있어 합동기획전 전개 및 공동입장권 발행을 통하여 관광객의 회유성 유도 및 시민 참여활동을 유도한다.
- 시가 앞에서 끌고 시민이 뒤에서 미는 전통 문화 보존 정책과 시민들의 3분의 1을 아마추어 예술가로 만들 만큼 잘 갖춰진 문화적 인프라는 '문화 도시' 가나자와 시를 만드는 밑거름이다.



〈그림 13〉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

- 가나자와 시를 진정한 문화 도시로 만든 것은 시민예술촌이다. 시는 방직공장이 폐쇄되면서 남은 9만 7000㎡에 이르는 광대한 부지를 사들여 지난 1996년 시민들을 위한 문화 공간으

로 개방했다. 설 새 없이 돌아가는 기계가 들어찼던 공장은 문화 공연을 위한 연습실로 탈바꿈 했고, 주차장은 미술 작품공간과 공원으로 변신했다.

- 예술촌은 시민들이 시간 제약을 받지 않고 편하게 쓸 수 있도록 365일 24시간 개방한다. 사용료도 6시간에 1000엔에 불과하다. 직원은 밤 9시 30분까지만 근무하고, 이후로는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 14〉 가나자와 시민예술촌

4. 시사점

- 지역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있어 지역의 다양한 관계 주체와의 합의 형성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 지역의 요구를 충분히 이해하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함께 세우면서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적극적으로 합의 형성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 역사와 문화를 기반으로 한 매력 있고, 활기 있는 '걷는 마을' 만들기과 상점가의 특성을 살린 상업환경을 형성하는 창조도시를 조성하였다.
- 자연의 요소를 공공디자인에 활용하여 도시의 쾌적성을 높였으며, 가로 시설물에 지역전통 건축물의 구조 및 소재, 패턴 등을 적용하여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있다.
- 가로공간의 기능성 · 시각성 · 기호성 · 무대성 이외에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문화생활을 반영하고 우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인프라 정비, 환경미화 차원에서 아름다운 골목을 수동적으로 향유하기보다는 많은 주민과 방문객에게 쾌감과 감동을 주고, 그것이 생활향상, 문화예술 기회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II. 다카야마

1. 다카야마시 현황

- 다카야마는 기후현[岐阜縣]에 속해 있으며, 일본열도의 가장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인구 9만 7000명의 소도시다. 에도시대에 지어진 격자창의 가옥들과 전통적 산촌풍습이 고풍스럽게 남아있어 '작은 교토'라고 불린다.
- 메이지[明治]유신(1868) 이후 여러가지 변천을 거쳐 1936년에 다카야마시가 되었으며, 그 후 여러 행정구역들과 통합된 후 2005년에 주변 9개 구역과 통합, 도쿄도와 비슷한 면적을 가진 큰 도시가 되었다.
- 최근에는 "살기 좋은 도시는 방문하기 좋은 도시" 라는 슬로건 아래 전통적 거리의 보존과 아울러 고령자와 장애인들도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생활 환경을 조성하여 장벽 없는 도시 조성하였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내책자, 인터넷 정보, 안내 간판 정비 등을 통해 쉽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 다카야마시의 도시디자인 정책

1) 베리어프리디자인

- 다카야마시는 '살기 편한 도시는 놀러가기 편한 도시' 라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하여 장벽없는 도시공간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 노약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관광 도시가 되도록 장벽 제거를 위한 시책에 주력하고 있다.

다카야마시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편리성을 높이고 또 사람과 사람, 사람과 지역이 서로 교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의 원활화 및 정보에서의 장벽 제거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15〉 보행자를 위한 안전한 트랜치 시설



〈그림 16〉 인도와 차도의 턱 제거

2) 장벽 없는 도로 만들기

-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을 위해 차도와 인도 간 턱이 5cm이상인 곳을 2cm이하로 낮추거나 없앴으며, 네거리 등에서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도로 옆 빗물받이 덮개 창살은 휠체어나 유모차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1cm이하로 촘촘하게 좁힘으로서 안전성을 높였다.

3) 휠체어 대응 화장실 설치

- 시가지에는 깨끗하고 휠체어를 탄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공중 화장실이 40개 이상 설치되었으며, 호텔, 레스토랑 등에서도 휠체어 대응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인공배설기를 단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하였다.



〈그림 17〉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 설치

4) 관광지 도로표시

- 시내 도로 주요위치에는 일본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번체, 간체) 등 4개 국어로 된 표시판을 설치하여 편리성을 높이고 있다.



〈그림 18〉 방문객을 위한 정보서비스 픽토그램 설치

5) 길거리의 벤치

- 시가지 중심부에는 많은 벤치를 설치하여 쉼터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19〉 길거리 벤치 설치

6) 이동수단 지원

-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승하차 보조기구를 구비하거나 휠체어에 대응 가능한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3. 전통건조물 보존지구

1) 산마치 전통건조물 지구

- 다카야마는 오래된 마을의 모습이라는 뜻의 '마쓰나미'를 지역의 중심적인 가치이자 상징으로 삼고 있으며, 전통의 다양함이 마을의 모습에서 펼쳐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다카야마 시내에 흐르는 미야가와(宮川)강 동쪽에는 전통건조물 거리가 남아 있으며, 그 중에서도 에도시대의 집들이 남아 있는 것이 산마치 지역으로서(이치노마치, 니노마치, 산노마치) 성곽도시인 다카야마의 모습을 가장 많이 남기고 있다.



〈그림 20〉 전통건조물 보존지구

- 술양조장과 전통공예품 판매점 및 격자집들이 이어진 곳으로 이 지구는 국가로부터 중요 전통적 건조물군으로 지정 되었다.
- 다카야마는 도시전체가 전통집과 거리로 채워진 것은 아니며, 현대적인 거리에 옛길의 흔적을 살리기 위해 안내사와 이정표를 설치하였다.
- 현대적인 생활과 기반시설을 영위하면서도 도시 전체가 옛길과 어우러진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과거에서 현재까지 이어져온 지역의 모습에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녹아들어 지역적 자원과 활력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Ⅲ. 시라카와고

1. 시라카와고의 전통가옥

- 1976년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 중요전통건축물보존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1995년유네스코 세계 유산 취락지구로 지정되었다.
- 시라카와고의 전통가옥인 갓쇼즈쿠리(合掌造)는 두 손을 합장한 모습의 가옥형태를 띠고 있다. 역새폴로 엮은 집 내부는 3, 4층으로 나누어져 양잠에 이용되었으며, 갓쇼즈구리 가옥은 에도시대 말에서 메이지시대에 걸쳐 조성되었다.
- 갓쇼즈쿠리 가옥의 지붕보수비는 국비(90%), 현(10%), 마을(25%)의 비율로 공동부담하고 있으며, 보존을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 계획서를 토대로 건축물의 신축 및 보수, 크기 및 색채 등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림 21〉 시라카와고 전경(여름:좌, 겨울:우)



〈그림 22〉 전통가옥(갓쇼즈쿠리) 내부 모습



〈그림 23〉 시라카와고 마을



〈그림 24〉 시라카와고 안내사인, 맨홀, 마을골목길

종교와 농경문화의 중심도시, 합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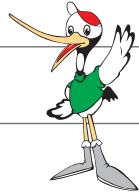
이인희 |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1. 지리적 특성 및 현황



〈사진 1〉 합덕읍의 전경

충청남도의 최북단 당진군의 동남쪽 끝자락에 위치한 합덕읍은 면적 51.32km², 인구 10,923명(2007년 기준)의 작은 도시이다. 대전에서 공주, 예산을 거쳐 당진으로 향하다 보면 드넓은 평야 지대를 만나게 되는데 합덕은 바로 이 예당평야의 한 부분인 소들강문 평야(우평·강문평야)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합덕읍은 삼교천, 무한천, 곡교천이 합류하는 곳으로 후빙기 해수면 상승에 인한 퇴적작용으로 넓은 규모의 범람원과 해발 100m 이하의 낮은 구릉성 산지로 형성되어 있다. 신흥리, 점원리, 도리, 옥금리, 신석리, 신리 등은 삼교천의 간석지성 충적평야에 형성된 마을들로 집촌의 형태를 띠고, 합덕리를 포함한 운산리, 소소리, 도곡리, 석우리, 성동리, 대전리, 대합덕리 등은 낮은 구릉성 산지에 입지한 마을들로 배산형태로 가옥들이 입지하고 있다. 합덕읍의 산업별 인구 구성비를 보면 농림업에 58.3%(2005년 기준)를 점유하고 있어 전형적인 농업 기반의 산업구조를 보인다.



논농사를 중심으로 하는 합덕읍은 겉으로는 다른 농촌과 다를 바 없으나, 오래 전부터 한국 천주교의 못자리라고 할 만큼 천주교 세력이 강한 곳이었다. 합덕리 주민의 96%가 천주교 신자이며, 그동안 서른 명 이상의 신부를 비롯하여 많은 수사와 수녀를 배출한 독특한 이력을 가진 마을이다. 김수환 추기경과 정진석 추기경의 연고지로도 알려져 있다.

합덕읍은 당진을 관통하는 서해안 고속도로,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국도32, 34호선 등이 주요 도시권을 연결하는 광역교통체계를 구성하여 수도권 및 중부권, 호남권과의 접근성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그러나 합덕읍 중심시가지 부근은 도로폭이 협소하여 차량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주변 상권과 연계된 지역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지역 내부의 교통환경은 열악한 실정이다.

합덕읍은 합덕성당(도기념물 제145호), 합덕제(도기념물 제70호) 등 몇몇 상징적 경관들이 합덕의 장소 특성을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경관요소들을 통해 합덕이라는 장소가 종교와 농경문화의 중심이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2. 유래 및 역사

합덕읍은 고려시대 덕풍현(德豊縣)에 소속된 합덕부곡(合德部曲)이었는데, 고려 제25대 충렬왕 24년(1298년)에 합덕현으로 승격되었다. 그러나 조선 제7대 세조 때 폐현되어 홍주목(洪州牧)에 속했으며, 고종 32년(1895년) 면천군(沔川郡)에 편입되었다가, 1914년 군·면 통폐합에 따라 합덕면이라 지칭되면서 당진군에 편입된 이후 1973년 합덕읍으로 승격되었다.

특히 합덕리의 지명은 합덕제(合德堤)와 관련해 유래했다고 하는데, 합덕제의 보수, 개축 작업 때 참여했던 장정들의 '합심적덕(合心積德)'을 의미하는 '합덕(合德)'에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그만큼 합덕제가 갖는 실제적 필요성과 상징적 의미가 마을 지명에까지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가 생기기 전 합덕의 소들강문 평야는 삼교천의 곡류가 심하고 조석의 영향으로 인한 홍수의 피해를 많이 입는 '갯땅'이었다. 따라서 이 지역 농민들에게 논농사를 위한 수리·배수 시설의 완비와 삼교천의 제방 축조가 가장 큰 숙원과 과제였고, 합덕이라는 지명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과 염

원이 지명에 투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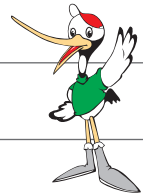
또한 합덕마을은 감조하천인 삽교천의 바닷물이 내포평야 깊숙이 들어와 합덕읍 구양도를 거쳐 예산군 고덕면 구만포에까지 이르기에 예부터 수상교통이 편리하였다. 그리하여 삽교천 변에는 구만포·암두포(합덕읍 합덕리)·유궁진(합덕읍 점원리 궁원마을), 범근내포, 우평포, 대각포 등의 포구가 많아 조운선과 지토선이 많이 드나들었다. 그러나 육상교통에 있어서 1900년 초까지 합덕지역은 당진군 내에서 길다운 길이 없던 오지로 인식되었으나, 1931년 장항선의 개통, 1933년 구양교의 준공과 더불어 현재의 32번 국도가 완공되자 수상교통 외에도 철로와 도로라는 육상교통을 통해 외부 세계와 연결되었다.

합덕읍에는 한때 예당평야에서 제일 큰 시장이었던 합덕시장(합덕읍 운산리)이 있다. 합덕시장은 원래 버그내장이라 하였고, 버그내는 삽교천의 최하류를 옛날에 범근내포라고 부르면서 유래했다. 아마 내포지방의 중심포구로서 각종 물산의 교류가 활발하였기에 버그내장이 생겨난 것으로 추측된다. 이후 현 구합덕성당이 건립되면서 많은 토지를 매입하였고, 이 토지를 경작하기 위해 사람들이 합덕으로 모여들기 시작하여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합덕 지역은 일제 말부터 해방 이후 인천항을 거점으로 서산과 강진지방의 각 포구를 연결하는 연락선이 취항하여 주로 미곡을 반출하는 포구로서 활기가 넘쳤다. 그러나 1970년대 말 이후 토사의 퇴적, 육로의 발달과 삽교천의 제방 축조 등으로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3. 천주교 전래의 거점, 합덕읍

합덕성당

합덕읍이 위치한 내포지역은 19세기 초반부터 천주교의 포교지로 활발했던 곳이었다. 이 지역에서는 천주교 박해로 인해 선교를 펼치던 외국인 신부들이 체포되는 사건들이 빈번하였는데, 1886년 한불수교에 의해 천주교 포교가 자유로워지자 산간에 숨어들었던 천주교도들이 평야지대로 내려오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퀴를리에 신부가 1898년 합덕읍 합덕리 대지를 매입하여 성당



겸 사제관을 짓기 시작하여 1899년 합덕성당을 완공하였고, 이리하여 천주교 마을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합덕에 성당을 마련한 퀴를리에 신부와 그의 후임자들은 교회의 재정 자립과 천주교 교우촌 건설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계속 인근의 농지를 사들였다. 그리고 이 토지들을 합덕리를 비롯한 타 소재지 인근 마을의 농민들에게 소작을 주고, 소작인 모두를 천주교회에 다니도록 하였다. 따라서 합덕리의 주민들은 모두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였고, 타지의 천주교인들도 소작을 얻기 위해 합덕리로 이주해오기 시작했다. 따라서 합덕리의 주민들은 집과 땅을 모두 교회에 의지하였고, 이는 자연스럽게 충실한 신앙생활로 이어졌다. 이후 천주교회는 근현대를 거치는 동안 합덕마을의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 중심체 역할을 하면서 합덕 주민들의 결혼, 제사 등의 생사의례부터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깊은 영향을 미쳤다. 이로서 합덕마을은 해방 이후 현재까지 30여 명의 신부와 50여명의 수녀를 배출한 독특한 이력을 가진 마을이 되었다.



〈사진 2〉 합덕성당

신리공소

구합덕 본당에서 남쪽으로 6km지점에 있는 신리공소 건물은 1866년 천주교 박해 당시에 조선 교구 제5대 교구장 안토니오 다블뤼 안 주교가 거주했던 곳이다. 안 주교는 복음을 효과적으로 선포하고자 출판 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책자 번역 및 교회사를 엮었다. 1801년 신유박해, 1839년 기해박해, 1846년 병오박해 때 순교한 주교와 신부, 신도들의 행적을 조사 기록하고 한편으로 한국 가톨릭 교회사를 집필하였는데 이곳에서 기록·수집한 순교사 및 역사 자료 7권이 1862년



〈사진 3〉 신리공소의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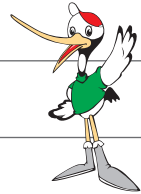
〈사진 4〉 신리공소의 대들보

10월 홍콩의 리브와 신부를 통하여 파리로 전해져서 '한국교회사' 2권이 나오게 되었으니 한국 교회사에 유서가 깊은 곳이다.

1863년 화재로 많은 서적과 함께 인쇄소가 소실되었는데, 그 때 건져낸 대들보가 현 공소 강당의 대들보로 사용되었고 그 위에는 '1815년 상량'이라는 글귀가 남아 있다.

솔피성지

솔피성지는 한국 최초의 사제 성 안드레아 김대건 신부의 탄생지로서, 그가 박해를 피해 용인의 골배마실로 이사갈 때인 7세까지 살았던 곳이다. '소나무가 우거진 동산'이라는 뜻을 가진 '솔피'는 김대건 신부의 증조부 김진후(1814년 순교), 종조부 김한현(1816년 순교), 부친 김제준(1839년 순교) 그리고 김대건 신부(1846년 순교) 등 4대의 순교자가 살았던 곳이며, 김대건 신부가 전세계 카톨릭 교회의 공경의 대상이 됨에 따라 역사·종교적 중요한 문화유적으로 부각되었다. 합덕읍의 북쪽 경계와 접해 있는 우강면 송산리의 솔피성지는 '솔피성지-합덕성당-신리공소



(조선비밀교구청)를 잇는 성지순례코스
의 개발로 종교관광의 자원 발굴 및 지
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어 그
가치가 주목되는 곳이다.



〈사진 5〉 솔뫼성지 내 김대건 신부 생가

4. 수리농경문화의 역사적 상징, 합덕제

후백제를 세운 견훤이 신라말기에 축조한 것으로 추정되는 합덕제는 곡창지대인 합덕평야를
관개해주던 방죽이었다. 합덕제(合德堤)는 합덕지(合德池), 연제(蓮堤)라고도 불리는데, 조선시대
에 김제 벽골제, 연안 남대지 등과 함께 3대 제언(堤堰) 가운데 하나로 꼽힐 정도로 큰 규모를
자랑하였다. 합덕제의 최초 기록은 조선시대에 『세종실록지리지』에 언급되었고, 후에 『조선왕조
실록』등 각종 고서에서 빠짐없이 기록되면서 그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1800년 이후에는 합덕
제가 집중적으로 관리된 모습을 제 주변에 남아 있는 비석군을 통해 알 수 있으며, 일제 때
(1913)에는 제 내부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수문을 신설하였다.

연이 많아서 그 꽃이 매우 장관이었으며, 남생이가 많이 있어서 날이 좋을 때는 저수지 가에
나와 줄지어 앉은 것이 또한 구경거리여서, 사람이 많이 늘어앉은 것을 보면 "합덕 방죽에 줄 남
생이 앉듯 하였다"는 속담이 있다.

이후 지역의 관개 농경에 중요한 젖줄 역할을 하던 합덕제는 60년대 초 예당저수지가 축조되
면서 관개지로서의 기능이 약화되고, 마침내 내부는 농지로 전용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제방은
훼손되지 않고 지금까지 원형이 잘 남아 있으며, 현재 남아있는 제방의 총 길이는 약 1,770m에
달한다. 제방 남쪽에 군도가 개설되기 전까지는 합덕에서 고덕으로 통하는 주요한 간선도로의 기
능도 하였다. 충청남도에서는 합덕제에 대한 역사성을 감안하여 도기념물 제70호로 지정하였다.



〈사진 6〉 합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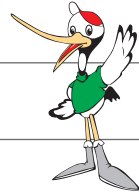
〈사진 7〉 합덕 수리민속박물관

합덕제 옆으로는 종합농경문화박물관인 수리민속박물관이 위치하고 있다. 조선 3대 저수지 중 하나였던 합덕제를 기념하기 위하여 2005년에 개관하였고, 부지면적 16,089㎡, 연건축면적 869㎡,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2개의 전시실과 수리체험장 등이 있다. 합덕 수리민속박물관은 지금은 거의 사라진 수리농경문화를 이해하고, 선조들의 지혜를 느껴 볼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체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미디어처를 통해 합덕 지역의 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연출하고 있다.

5. 합덕읍의 발전과제

2025 당진군 도시기본계획에서 합덕읍은 3개 권역 중 동남생활권(합덕·우강 소생활권)에 속하며, 고부가가치형 생태영농과 역사, 문화, 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합덕읍 주민들의 주된 생업은 미작농업이지만 정부의 수매가는 하락하고 쌀 소비는 줄어들어 마을 주민들의 수입은 예전 같지 않다. 그렇다고 다른 작물을 재배하거나 특용작물 등의 재배를 하는 농가는 극소수이며, 주민들이 점차 고령화 되고 있어 새로운 시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합덕이 남부권의 중심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형 생태영농으로 나아가야 한



다. 그러기 위해서는 향후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그린투어리즘 시범마을로 지정될 수 있도록 군 차원에서 농어촌의 소득향상과 연계한 민박, 삼베, 약쑥, 단호박, 주말농장마을 등 다양한 형태의 특색마을로 선정하여 육성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또한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선도마을과 농업인을 육성 지원하여야 한다.

특히 합덕읍은 합덕성당의 교세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으며 발전했다. 합덕성당의 신자 수가 합덕리 주민의 수와 비례하여 증가했음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기반시설과 경제적 자립이 되어 있지 않아 이농현상으로 인해 주민들이 유출되면서 과거의 종교적 영향력이 약화되고 독특한 마을의 모습도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합덕읍은 성지순례의 중심지로서 상징성이 높은 합덕성당, 솔피성지, 신리성지 등 종교문화자원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천주교라는 합덕 고유의 자원과 연계한 관광상품화와 천주교 문화의 메카라는 장소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성지 등 천주교 관련 자원의 적극적인 개발에 앞서 본래 모습의 발굴과 복원, 역사적 사실의 재규명을 통한 원형의 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홍보표지판 설치, 홈페이지 제작, 공동화장실 개선, 주차장 확보 등의 기존 상권의 재정비를 통해 성지순례객들을 중심으로 유인함으로써 중심상권의 상업·서비스의 재생과 합덕시장을 중심으로 주변 농촌과 연계된 농특산물을 육성시켜 자생력 있는 경제기반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합덕읍은 서해안 고속도로와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서해안 철도(계획) 등의 건설로 당진 및 타 도시간의 교통시간 단축이 가능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리적 요인이 이 지역 산업의 매력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의 승수효과가 발생하고, 수도권 및 대전권 생활권역에 포함되는 근거리 지역으로 부각되어 자족적인 지역 발전을 통한 당진군의 중심으로 도약할 것을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1. 당진군, 당진군지.
2. 대원사, 당진 합덕마을, 2008.
3. 당진군, 당진통계연보, 2008.
4. 당진군 합덕읍,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중장기 발전계획, 2007.
5. 당진군 홈페이지, www.dangjin.go.kr

매콤한 붉은 빛의 참을 수 없는 유혹

이용원 | 월간 '토마토' 편집실장



신종플루 위협으로 많은 지역 축제가 개최를 포기한 가운데 '제10회 청양고추 구기자축제'는 계획대로 진행했다. 이번 축제는 9월 4일부터 6일까지 청양읍을 가로질러 흐르는 지천 둔치, '백세건강공원'에서 열렸다.

아마, 조류독감이 유행했을 때부터였던 것 같다. 그 과학적 근거를 떠나 국민 사이에서는 우리 고추와 마늘 등이 조류독감을 이겨내는 근원적인 힘이라는 믿음이 확산됐다. 그 때문일까, '청양고추 구기자축제'에는 적잖은 사람들이 몰렸다. 신종플루에 대한 위협과 더불어 막바지 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도 말이다. 몇 가지 부정적 요인만 없었더라도 아마 지천 둔치는 사람들에게 치여 발 디딜 틈도 없었을 터다.

청정환경에서 자란 질 좋은 고추



대부분 지역에서 벌어지는 특산품 축제와 마찬가지로 청양고추 구기자축제도 세 가지 큰 축으로 구성되었다. 장터 마련을 통한 특산품 판매, 찾아온 손님들에게 청양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부대 홍보 부스, 마지막으로 위안잔치 성격의 다양한 공연과 체험장 운영이다.

서산·태안 지역의 육쪽마늘 축제나 금산군의 인삼축제 역시 마찬가지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유형이 대부분 지역 특산품 축제에서 큰 줄기를 구성하고 있다.

축제가 열리는 구획 초입에 설치한 판매장은 임시 장터임에도 일사 분란했다. 속이 다 들여다 보이는 투명 봉투에는 태양의 빛깔을 담은 매혹적인 마른 고추와 함께 품질보증서가 들어 있었다. 지역 농협 직원 등으로 보이는 붉은 티셔츠를 맞춰 입은 판매원들은 오가는 손님들을 향해 고추의 우수성을 홍보하느라 여념이 없다.

이번 축제기간에 일반 건고추는 600g에 8,000원, 청양고추는 이보다 조금 비싼 11,0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청양고추는 무엇보다 청정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좋아요. 일교차도 심해서 껍질이 두꺼워 고춧가루도 많이 나오죠."

한 판매원의 자랑이다. 집에서 조금씩 말린 고추는 보았지만 한자리에 그렇게 많이는 처음이다. 그 빛깔이 참 오묘하고 곱다. 잘 들인 천연염색 작품을 보는 것 같다. 코를 강하게 자극하는 매콤한 향도 싫지 않다.

고추와 함께 청양 특산품인 구기자는 축제 이름에도 포함이 되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고추에 밀리는 모양새다. 몇몇 농가에서 구기자와 구기자주 등 구기자 가공품을 가지고 나왔지만 고추에 비해 그리 조직적이지는 못하다. 구기자를 잘 모르는 이방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수준이다.



매콤한 보리밥 먹고 김치도 내 손으로

공연무대를 설치한 축제장 중앙부문에는 청양군 내 마을을 자랑하거나 특산물 등을 홍보하기 위한 천막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중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끄는 것은 역시 체험장이었다. 맥주를 시원하게 보관하기 위한 쿨러박스처럼 생긴 것을 하나씩 어깨에 걸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기에 궁금했는데, 김치였다. 체험장 중에서도 청양고추를 짹 짹 넣고 매콤하게 김치를 담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한 코너가 가장 인기가 좋았던 모양이다.

'청양 고추장으로 보리밥 비벼먹기 프로그램'은 축제장에서 맛있고 저렴한 한 끼 식사를 제공했다. 시뻘겋게 비벼낸 보리밥도 맛있었지만 반찬으로 푸짐하게 건네 준 열무김치와 무채는 최고의 맛을 선사했다.

땀을 뻘뻘 흘리며 큰 대접에 한 가득이었던 보리밥을 똑딱 해치우고 밖으로 나와 보니, 둔치에 심어둔 형형색색의 코스모스가 잔바람에 좌우로 몸을 흔든다. 쳐다보고 있으면 더위가 조금은 가시는 듯하다.

지천 둔치의 코스모스와 지천을 한가로이 떠다니는 오리떼를 보면서 통나무로 만든 다리를 건너면 아이들이 좋아할 어린이 체험장과 동물농장에 다가가갈 수 있도록 했다.

그 곁에는 축제 부대행사 형태로 진행한 '2009 청양 세계 고추 박람회' 장을 만들어 두었다. 조금은 학술적인 곳이었다.

매콤한 즐거움 가득한 박람회장



입구에는 화분에서 잘 자란 고추가 시선을 끌었다. 색깔이며 모양이 어찌나 예쁘고 건강해 보이는지, 그 앞에서 베테랑 농민이 고추 재배 기술에 대한 노하우를 열심히 설명하고 몇몇 참가자들이 눈을 떼지 못한 채 경청하고 있다. 자부심과 호기심이 묘하게 얹혀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이어지는 부스는 전시관이었다. 각종 고추품종 관련 종묘회사와 가공식품, 농기계, 건강식품 관련 회사들의 홍보가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반신욕 기구부터 신용카드 홍보 부스까지 만물박람회를 방불케 했다. 그 와중에 눈에 띄는 곳은 주한 베트남사회주의공

화국 대사관과 주한 태국대사관 주한 인도대사관에서 우리의 고추와 비슷한 자국의 향신료를 선보인 부스였다. 부스의 내용물이 그리 풍성하지는 않았지만 호기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그래도 역시 고추산업박람회장의 백미는 '세계 고추 전시장'이었다. 중국, 인도, 미얀마, 한국 등 아시아관에는 270종에 달하는 각국의 고추가 전시되었고 브라질, 멕시코, 미국, 페루 등 아메리카·오세아니아관에는 73종, 불가리아와 네덜란드, 영국, 헝가리 등 유럽·아프리카관에는 44종의 고추가 전시되었다. 전시된 고추만 총 60개국 387종에 달했다.

같은 고추에 속한데 생김이 얼마나 다른지 신기하기만 했다. 자라는 방향이 위와 아래로 제 각각이었고 길쭉한 것과 둥근 것, 큰 것과 작은 것, 신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고추가 다 정리되어 있는 듯했다. 생전 처음 보는 세계 각국의 고추에 정신이 팔려있을 때 뒤쪽이 소란스럽다.

아주머니 특유의 호탕하고 멀리 퍼지는 웃음이 귀를 파고든다. 돌아보니, 일군의 아주머니들이 입을 가리고 웃느라 정신없고 그 사이에 있는 아저씨는 객쩍은 웃음만 날리고 있다.

그 소란(?)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궁금증에 그 곳을 찾아가 보았다. 세상에, 본래 있는 품종인지 아니면 육종기술의 승리인지, 정말 알 수 없었다. 동음이의어인 '고추'와 많이도 닮았다.

태양은 여전히 여름의 열기를 간직하고 있지만 하늘 빛깔만큼은 가을을 담은 9월, 청양에서 열린 고추·구기자 축제는 '매콤한 즐거움'이 가득했다.



슬로시티 운동과 충남의 지역 및 도시 개발에 대한 소고

박 헌 주 | 카이스트 건설 및 환경공학과 초빙교수



머리글

산업혁명 이후, 산업화와 정보화시대를 거치면서 인류에게 공통으로 다가온 글로벌 트렌드는 도시화이다. 도시화는 인간에게 "빨리 빨리"라는 속도전을 요구했고 정보화시대를 거치면서 인류는 "더 빨리 빨리"를 생활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는 서구 선진국이 100여년 이상에 걸쳐 이룬 도시화와 산업화를 불과 30여 년 만에 이루면서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탈바꿈하였다. "빨리 빨리"문화는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브랜드이다.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는 수 없는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도시는 인구 집중으로 인한 혼잡과 교통, 주거, 환경문제 등이 일상화되어 있다. 농촌은 인구 유출로 인한 자생력 상실과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갈등과 혼란을 극복하고 우리 모두 더불어 잘 사는 진정한 선진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해온 산업화뿐 아니라 도시 개발과 지역 개발에 대한 패러다임을 재검토해야 할 때이다. 그 대안으로 태동한 것이 슬로시티(slow city), 즉 '느림의 도시 및 지역 개발 운동'이다.

느림이 과거에는 게으르고, 못사는 것의 전형(prototype)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인류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대안이 되고 있다. 인류 역사 발전의 아이러니라 할 수 있다. 느림이

美學이 되고, 지역 및 도시 개발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충청도하면 생각나는 단어는 "느림"이다. 충청도는 우리나라에서 느림의 대명사이다. 이제 는 이 느림이 새로운 지역 개발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글은 슬로시티의 의미와 이를 통한 충청도의 지역 및 도시 개발 방향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슬로시티의 이념과 특징

슬로시티 운동은 이태리語의 치타슬로(cittaslow)에서 시작되었다.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도시화를 지양하고, 지역 고유의 역사적과 전통적 특성을 기초로 여유롭게 생활함으로써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도시 및 지역 개발의 대안모델로 태동된 것이다. 이 운동은 산업화와 도시화의 산출물인 대량생산체제, 표준화 및 규격화, 기계화된 생활에서 벗어나 인간적인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철학적 사고가 이념적 기초이다. 이 운동의 궁극적 목적은 인류 환경을 위협하는 효율성과 속도 지상주의에서 탈피하여 자연적인 삶으로 복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천하는 데 있다.

이 운동의 초기 형태는 슬로푸드(slow food) 운동에서 찾을 수 있다. 먹거리에 대한 맛의 표준화, 기계화를 통한 대량생산을 지양하고 지역별 고유의 음식과 식생활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하고자 하는 새로운 문화적 추세 운동이 슬로푸드 운동이다. 이 운동은 지방 먹거리(local food) 운동으로 전개되었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지자체들의 참여가 확대되었다. 즉 인간 삶의 총체적 부분인 먹거리에서 지역사회의 정체성을 찾고 도시와 지역 전체의 문화 및 삶의 태도와 방식을 바꾸자는 삶에 대한 근본적 전환 운동인 셈이다. 슬로시티 운동은 1999년 10월 15일 슬로시티 운동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카를로 페트리니(Carlo Petrini) 등이 슬로시티 선언문을 작성하여 선포하면서 범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슬로시티 기본이념을 담은 슬로시티 헌장은 크게 아래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¹⁾

첫째, 도시 구조의 특성을 유지 발전시키며, 도시의 현대화를 위한 개발 또는 재개발보다는 再生을 중요시 한다.

둘째, 지역 내 전통적, 친환경적 방식의 농특산물 생산과 소비를 지원 장려한다.

셋째, 지역 내 상인들의 보호 및 그들의 생산방식과 생산품을 존중하고,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넷째, 방문객과 지역 주민들에게 해당지역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수준을 높인다.

다섯째, 지역의 커뮤니티가 슬로시티로서의 의식 고양, 홍보, 교육에 주도적으로 이바지한다.

이상의 현장에서 정리할 수 있는 슬로시티 운동은 지역생산품 생산과 소비의 연계 및 전통적 생산방식의 존중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의 지자체에서 전개하고 있는 슬로시티 운동은 그 모습과 내용이 매우 다양하다. 이 운동의 기본적 맥락은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고속화, 간소화, 표준화, 기계화되어지고 있는 현대인의 일상생활을 "본래적인 여유로운 생활모습으로 되돌아가기" 운동이다.

충남의 슬로시티 추진방향

슬로시티는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8년에 신안, 완도, 담양, 장흥군 등 네 군데 지자체가 이미 슬로시티국제연맹에 가입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슬로시티 지정지역이 모두 전남이고, 재정자립도가 열악하며, 대부분 섬으로 구성된 낙후지역이라는 특징이 있다. 전남은 이 운동을 낙후지역의 자생적 발전모델로 도입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들 지역이 슬로시티로 지정될 수 있었던 배경은 청정환경의 보유 및 유지 의지, 전통 생산방식과 특산품의 보호 육성, 지역 고유의 전통성과 정체성 지속 의지이다.²⁾

슬로시티 지정이 이처럼 지역성과 전통성에 바탕을 둔 이유는 당초 이태리 등 이 운동을 시작한 나라들이 이 운동을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생활 습관의 변화보다는 지역 생산품의 소비와 전통의 소비를 강조한 결과라 하겠다. 따라서 슬로시티 운동을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생활 습관의 변화에 중점을 두는 "인간성의 회복 운동"으로 전환하여 이를 지역 및 도시 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성과 전통성을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도시민의 일상생활에 변화를 주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슬로시티 운동을 대도시권에서 삶에 지친 주민의 휴양과 재충전을 목표로 전개하는 경우 충남은 地經學的으로 매우 중요하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주민생활이 상대적으로 가장 꺾박한 지역은 대도시권이고, 특히 수도권이라 할 수 있다. 충남은 수도권과 인접해 있고 인구밀집지역과는 교통거리로 1시간 안팎의 至近거리이다. 수도권은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48%가 넘는 2,400만 명이 살고 있다. 이들의 상당수는 틀에 박힌 기계적 문명에서 잠시라도 벗어나 지역성과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지역에서 여유로운 인간적인 삶을 꿈꾼다. 충남은 슬로시티 운동에 적합한 온천과 사찰, 태안반도처럼 육지와 해양을 아우르는 지역적 특성자원이 풍부하다. 이러한 지역 자원을 잠시라도 여유를 갖고 삶을 되돌아보며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삶을 재충전하는 장소인 슬로시티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즉 충남의 지역 및 도시 발전 기본방향을 근대적 물질문명의 확충보다는 이러한 문명에 지쳐가는 사람들이 과거로 복귀하여 여유롭게 생각하며 일상생활에서 인간성을 회복하며 즐길 수 있는 슬로시티 개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향후 10년 이내에 고령화사회로 들어선다. 사회의 고령화는 삶의 속도보다 여유가 더 중요한 가치로 부각될 것이다. 지역 고유의 자원을 문명적 시각에서 개발하기보다는 해당지역의 여건과 지역성, 고유성을 기초로 복원하고 生産產地消費를 실천할 수 있는 지역 및 도시 개발 모델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충남에 散在한 온천과 해안, 사찰, 명산을 도보길이나 자전거길로 연결하고, 지역에서 생산하는 먹거리를 소비하면서 지역의 특산품과 문화유산, 자연자원을 유람하고, 지역 주민과 더불어 숙박하는 슬로시티는 그림의 브랜드를 가진 충남에 썩 어울리는 지역 발전 패러다임이라 하겠다. 더욱이 수도권과 사통팔달하는 지역간 대량교통수단이 머무는 지역을 충남 슬로시티의 거점으로 정하는 경우, 旅遊를 원하는 수도권 주민의 충남 슬로시티의 주 고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 조영태 외, "한국형 슬로시티 추진전략", 토지연구 제82호(제24권), 한국토지공사 국토도시연구원, 2008. 01.

2) "위글"

시민참여형 마을(도시)만들기를 위한 제언

이 건 호 | 목원대학교 도시공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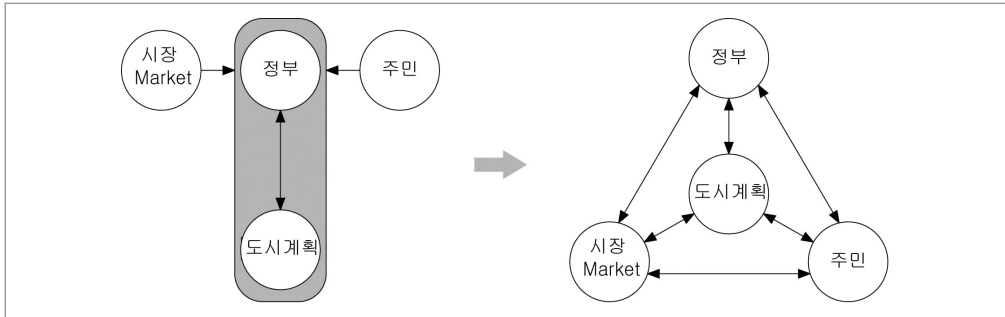
1. 들어가기

최근 들어, 중앙정부의 각 부처별로 '소도읍육성사업',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살기좋은 도시만들기' 등의 사업들이 주민제안형식을 빌어 봇물 터지듯이 시행되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관(官)주도의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인 것이다. 어쨌든, 이러한 움직임은 '우리 마을의 장래는 우리 손으로 결정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는 시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시민참여에 의한 마을만들기'라는 목적을 갖고 여러 제안사업들과 다양한 활동들이 전국 각지에서 나타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아직 관(官)주도에 의한 초기단계의 시민참여형태에 불과하지만, 도시계획분야에서는 본격적인 지방분권화에 걸 맞는 주민참여라는 시민사회제도의 의미 이상으로, 커다란 역사적인 의의를 갖는 전환점이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2. 도시계획 패러다임의 변화

현대사회가 정치적으로 민주화되어 전체주의사회가 개인주의사회로 변화하고, 중앙집권적 정치행정구조가 지방자치단체로 분권화되고, 시민사회도 성숙되면서 도시계획제도도 새로운 관점에서의 접근방법이 요구되었다.



사회가 전체주의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에서,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로 거듭 나면서 정부주도의 하향적 계획은 시민·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상향적 계획으로 변화되었다. 또한, 분권화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구조가 협력관계로 바뀌게 되었다.

또한 도시계획의 주된 사회적 과제가 고속도로와 간선도로등과 같은 광역기반시설개발 일변도인 확대형 사회(擴大型 社會)에서, 주변지역 주거환경정비·보전 중심의 안전형 사회(安全型 社會)로 넘어가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21세기는 20세기와는 달리 인구가 감소하고, 사회경제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저 성장·제로성장·마이너스 성장하의 도시계획'이 커다란 주제가 될 것이다. 이때는 도시주변부 신개발보다도 기성시가지의 재개발·정비가 중심이 되므로, 현재 살고 있는 시민들이 장래 목표로 하는 시가지상을 공유(共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민합의에 따른 계획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3. 시민들이 참여하는 마을(도시)만들기

● 왜 시민인가?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는 '주민참여'라는 단어일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 '주민'이라는 단어 대신 '시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데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선, '주민'이라는 단어는 공간적으로 지구차원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구체적이며 한정성에 대한 의미가 '시민'보다 강하고, 도시계획과 관련지어 생각할 때, '지권자(地權者)'로서 이해 당사자라는 의미를 내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시민'은 도시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인 일반인으로, '주민'보다는 보다 객관적이며 전체적 관점에서 도시계획 사안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왜 '참여'인가?

최근, 도시계획 분야에서 결정방식이 변하고 있다. 『도시계획 패러다임의 변화』라고까지 말하는 경향도 있다. 지금까지 결정패턴은 중앙집권적으로 정보·인재·재원(財源)·권한을 집중해서 관료와 정치가가 전체의 이익, 즉, 『공익(公益)』을 우선하고 개인의 이익은 『사리사욕(私利私慾)』이라고 멀리하였다.

이에 대하여, '마을만들기'를 생각하는 방법은 오히려 그 반대로 개인의 주체성(主體性)과 이익(利益)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당연히 사리사욕(私利私慾)만으로는 사회에서 통하지 않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보다 '공익(公益)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종래 결정패턴은 전체(全體)가 개별(個別)을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는, 소위 '위로부터 아래로'의 도시계획(Top-Down)'이었다. 이것과는 대조적으로 마을 만들기는 집 근처 생활환경인 '지구(地區)'단위를 기초로 해서 전체를 보는 '아래로부터 위로의 도시계획(Bottom-Up)'인 것이다.

●참여는 어렵다

그러나, 지자체 행정의 현장에서 참여는 별로 진척되고 있지 않다. 법률상으로 참여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그 운용은 지극히 형식적인 것이 현실인 것이다. 분명히 '참여'는 말로는 쉽지만 행동하기는 어렵다. 왜, 참여는 어려운 것일까? 참여가 어려운 것은 '모르겠다' '결말이 나지 않는다' '이기적인 것으로 된다'라는 세 가지가 겹쳐져 우리들이 나가는 방향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첫째로 시민들의 요구를 듣는 확대과정이 필요하며, 둘째로 시민들이 처음으로 자신의 이해관계를 알게 되면, 의논을 해도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조정·타협이라는 축소과정이다. 셋째는 시민들이 서로의 이익을 조정하여 종합이 되었다더라도 결정된 것이 좋은지 어떤지는 어려운 문제인 것이다. 이것은 '집단으로서의 종합'이기 때문에

전체적 관점으로부터는 그 집단의 '이기(利己)'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기적(利己的)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이더라도 하나로 합의해서 결정한 것'이 중요하며, 이에 더해 보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욱이 개별로부터 출발하는 '참여형 마을만들기'야 말로 '전체적 관점'에서 계획 수립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 '학습(學習)'없이 '참여(參與)'없다

'참여'에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습'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시민들과 지방자치단체 측이 알아야 한다.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학습하지 않는 사람이 참여해서 이익을 얻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으로 이것은 진리인 것이다.

참여의 장(場)에서 자신의 주장만 하고 양보 없는 사람들은 참여라는 게임원칙의 위반자로, 자신의 생각을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융통성 없는 가치관으로는 안 된다. 자신의 마음속에 유연한 가치관을 길러, 다른 사람들의 가치관과 부딪치고 합치면서, 자신의 생각을 수정해 나가는 유연한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결국 정(正) - 반(反) - 합(合)의 과정을 수행해 나가는 '지혜(智慧)'가 중요한 것이다. 마을만들기 학습은 자신이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배우는 '자기학습'과 자신과 같은 수준의 사람과 말하면서 함께 학습하는 '상호학습'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마을만들기 현장에서는 이 두 가지 학습방법이 유용하다.

참여수법과 인재양성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은 도시계획이라는 '기술'이 크게 변질됨과 동시에 그 기술을 담당하는 인재도 변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종래에 도시계획 기술을 담당하고 있던 관료와 컨설턴트에 더해지는 형태로 의식있는 시민층들을 육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시민참여는 현실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1. 渡 俊一 編著, 市民参加のまちづくり, 學藝出版社
- 이견호 역, 시민들이 참여하는 마을만들기, 목원대 출판부, 2004
2. 渡 俊一, 太田守幸 編著, 市民版まちづくりプラン 實踐ガイド, 學藝出版社
- 이견호 역, 시민들이 만드는 마을만들기 계획 실천가이드, 목원대학교 출판부, 2009
3.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도시계획론. 보성각, 2008, p109

주) 본 원고는 대전시의 도시·건축아카데미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하여 작성한 것임

4대강 살리기는 지역발전의 원동력

김 용 웅 | 충남발전연구원장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대비, 자연과 인간의 공생, 국토 재창조, 지역균형발전과 녹색성장 기반구축을 목표로 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이 지난 6월 8일에 발표되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거의 모든 국토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정책 실현 단계를 크게 기획, 계획, 건설, 유지관리의 4단계로 나뉘볼 때, 2011년까지 완료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현재 계획단계에서 실행단계로 진입한 상태이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한반도 운하 건설사업의 변형이라는 비판적인 시각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과정에서 우려되는 환경훼손 등 수많은 부작용과 사업의 변질을 막기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살리기는 예상되는 물 부족과 만성적인 홍수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수질오염을 최소화하여 강의 생태환경을 살리고, 22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투자를 통해 침체 일로에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긍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이제 우리는 4대강 살리기가 지역발전차원에서 어떤 의미와 효과가 있을지 꼼꼼히 살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온 힘을 모아야 한다.

첫째, 4대강 살리기는 새로운 연계통로와 발전축을 형성하여 지역간 교류 촉진과 지역발전의 선도역할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 강은 살기 좋은 자연환경과 풍요로운 물산을 배경으로 모듬사리가 시작된 근원이다. 도시는 강을 따라 형성되어 왔다. 그래서 흔히 강을 지역의

것줄이라고 표현한다. 4대강 살리기가 지역 간 교류와 발전축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4대강 주변의 도시 및 지역의 종합적인 정비와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상호연계망을 형성하여 지역 간의 상생과 도약을 위한 지역발전의 시너지를 확산시키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금강 살리기 사업이 추진되면 세계적인 도시모델인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대덕R&D특구, 공주의 백제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하여 지역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배가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둘째, 4대강 살리기는 주변의 도시와 하천의 연계를 강화하고 쇠퇴화된 기존 도심의 재생을 촉진토록 해야 한다. 산업화 초기단계에 형성된 원도심으로 불리우는 도시 중심부는 도시구조와 시설이 무정형적이고 취약하다. 특히, 오래된 도시 중심부는 새로운 변화와 수요에의 대응이 어려워 대부분 쇠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도시의 확산으로 신시가지와 신도시 건설이 증대하면서 원도심의 정주인구 이탈현상이 발생되어 도심 쇠퇴화를 부추기고 있다. 원도심 지역은 취약한 물적 기반에도 불구하고 도시서비스 및 상거래의 중심지로서 전통과 문화 및 생존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친수,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하천과 연계하여 재생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셋째, 4대강 살리기는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재조명과 활용기회를 확대하여 지역 고유의 관광, 여가, 문화산업을 활성화하는데 힘써야 한다. 혹자는 20세기를 국가중심시대, 21세기를 지역중심시대라고 말한다. 이것은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역의 경쟁력과 발전의 중요한 근간을 이루는 핵심에 바로 문화가 있다. 4대강 살리기는 지역의 역사적 전통과 문화를 구체적으로 형상화시키고 관광, 여가, 문화 산업의 육성과 지역발전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를 마련토록 해야 한다.

4대강 살리기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치중해야 한다. 4대강 주변지역은 상당수가 고립된 입지와 접근성의 제약으로 인해 그 낙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4대강 살리기가 추진되면 지역 간 소통과 교류가 크게 확대되고, 그동안 묻혀있던 지역 고유의 발전 잠재력이 발휘되어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더욱이 4대강 살리기는 새로운 친수 체험 및 문화 공간을 창출하여 지역과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크게 기여할 것이다. 4대강 살리기가 지역 살리기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기대해 본다.

[충청투데이 7월 10일자 20면]

삶의 2모작, 평생교육을 위하여

'요람에서 무덤까지' 학습하는 삶, 평생교육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평생교육은 전 생애에 걸쳐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 형식적·비형식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모든 교육활동을 의미하는 말로써, 방대한 영역만큼이나 교육의 형태와 내용이 매우 포괄적이고 다양해서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현재 전 세계 26개국 175개 도시가 "교육도시" 건설을 천명하면서 국제적 연합체를 형성하는 등 평생교육 확대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양질의 인적자원 개발 및 지역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평생교육을 활성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비율은 23%로 OECD 최하 수준이다.

그러면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이토록 높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원인은 끊임없는 기술혁신과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라 할 수 있다. 기술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어제의 유망 산업이 내일의 사장 산업이 될 수 있고, 전통적 생산방식에 익숙한 노동자는 신기술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된다. 기업 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제품과 생산 기술 및 경영 전반의 혁신이 필요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지식의 창출을 위해서는 개인과 집단의 지속적인 학습과 교육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원인은 정보와 지식의 빠른 변화뿐만 아니라 그 양도 방대하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새로운 정보와 지식에 대한 끊임없는 학습노력 없이는 생산 및 경제활동 등 사회생활은 물론 육아와 자녀교육 등 가정생활도 만만치가 않다. 정보와 지식의 격차로 세대 간 소통에 장애가 발생하고, 더구나 취약계층은 생산적인 사회활동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이처럼 자기발전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요건이 될 수밖에 없는 평생교육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노력을 해야 할까?

첫째, 생애의 일정기간에만 허용되는 정규교육의 학습경로를 평생교육에 개방하고 다원화해야 한다. 특히, 대학은 고등학교 졸업 즉시 입학하는 교육기관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나 생애의 어느 시기라도 진입이 가능한 평생 전문교육기관으로 발전해야 한다. 외국에서는

성인의 대학진학을 촉진하기 위해 입학 특전과 장학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폐쇄적이고 단선적인 학습경로 때문에 35세 이상 성인의 대학 재학률이 3%로 미국 16%, 영국 22%, 뉴질랜드 24% 등과 달리 OECD 중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다.

둘째, 지역 내 정규교육, 전문 직업훈련, 공·사립의 사회교육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연계, 협력 및 보완할 수 있는 지역중심의 평생교육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다양한 교육·훈련 매체들이 지닌 자원을 통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상호 역할 분담과 보완,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

이에 충남도는 2008년도에 "충남평생교육진흥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고, 현재 충남도의회, 충남도교육위원회, 대학 및 평생교육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충청남도평생교육협의회"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아산시 등 7개의 시·군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는 등 명실상부한 '평생학습 道'를 건설해 나가고 있다.

끝으로 평생교육의 실용성을 높여 지역주민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우선해야 한다. 평생교육은 단순히 여가 활용이나 취미생활을 가르치는 인식에서 벗어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육아와 자녀교육, 가사 및 미교육 이수, 재취업 등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급자 중심의 일방적인 교육 프로그램 양산보다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시스템 구축에 보다 힘써야 한다.

'배워야 사는 시대', 배움과 학습을 통한 제2, 제3의 전성기는 자신의 경쟁력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우리 모두 평생교육을 생활화하는 데 실천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할 때이다

[충청투데이 8월 7일자 20면]

지역 먹을거리 활성화는 녹색성장의 밑거름

지역 먹을거리 활성화를 위한 "로컬 푸드 운동"이 주목받고 있다. 일정한 지리적 거리 안에서 먹을거리를 생산, 가공, 소비하게 되면 자원고갈이나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믿을 수 있는 먹을거리를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또한, 지역에서 생산한 먹을거리를 지역에서 소비하게 되면 지역 내 자원순환체계가 형성되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교류와 이해가 증진될 수 있다.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것은 출처를 알지 못하는 먹을거리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먹을거리 위기는 전통적인 농사가 산업인 농업으로 전환되면서 생긴 일이다. 산업화된 먹을거리 생산방식이 일반화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는 멀어지게 되었고,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보다는 경제적 이익 극대화만을 추구하면서 소비자 보호는 어렵게 됐다.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먹을거리 대량생산방식은 집약적 영농, 유전자 조작, 화학비료와 동물사료 사용 확대를 가져왔고,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 양산, 에너지와 자원낭용 및 환경훼손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교류 단절은 먹을거리의 장거리 운송을 초래하여 에너지 소비, 탄소배출 및 환경훼손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대량의 균일화된 식품을 양산하여 지역고유의 전통적 식(食)문화를 붕괴시키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가 오랫동안 유지해 왔던 자생적 영농기반과 식량의 자급역량을 크게 약화시켰고, 이제는 농가의 생존기반마저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앞으로 농산물 교역 확대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먹을거리 위기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더 이상 먹을거리 위기를 방치하기 어렵게 된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식품위기의 악순환 고리를 끊는 지속가능한 환경과 안전한 먹을거리를 확보할 수 있을까?

첫째, 먹을거리 위기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확대와 참여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지역 먹을거리 활성화는 지역사회 단위의 소규모 생산·소비자 집단의 실천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

다. 자연영농, 유기영농을 실천할 농가, 영농조합 및 마을단위 생산자 집단의 참여와 안전한 먹을거리를 소비할 지역사회 내 각 급 학교, 연수기관, 숙박음식업체, 식품가공업체 및 주부 등 소비자 집단의 참여를 동시에 이끌어 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전략과 수단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 먹을거리 활성화는 생산자와 소비자간 교류와 신뢰 확대에 치중해야 한다. 지역 먹을거리 활성화가 단순히 지역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는 데 치중해서는 안 된다.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효율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소비자는 안전하지 못한 식품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생의 거래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일부 선진사례에서는 소규모 친환경 농가에 의한 친환경 농산물 직판, 전통식품 가공 및 농가식당 운영을 적극 활성화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교류증대와 신뢰강화에 기여토록 하고 있어 우리에게도 좋은 시사점을 보여 주고 있다.

셋째, 지역 먹을거리 활성화를 위한 지역지원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지역의 지원조직 설립,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먹을거리 활성화를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민-관 협력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는 의미다. 즉, 지역사회 단위에서는 새로운 영농 및 먹을거리 생산방식을 도입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먹을거리의 새로운 생산-공급-소비 시스템 구축에 따른 다양한 정보, 기술, 금융, 마케팅 등 광범한 지원서비스 기반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지역 먹을거리 활성화는 주민의 건강과 안전한 먹을거리를 확보하는데만 한정되지 않는다. "로컬 푸드 운동"은 전통적 생활문화를 보전하고, 자원순환체계를 형성하여 생태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새로운 삶의 실천운동이다. 지역 먹을거리 활성화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위기의 농업과 농촌을 살리고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도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동안 국내외 투자유치와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충남이 지역 먹을거리 활성화에도 리더십을 발휘했으면 한다.

[충청투데이 9월 4일자 20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훼손하면 안 돼

민주적 입법절차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거쳐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일부 정치권 반대로 수정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일부 정치권이 제기하는 반대 논리는 이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 및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과정 속에서 이미 충분한 논의가 끝난 내용들이다.

모든 국가적 시책은 부정과 긍정적 파급효과가 공존하기 마련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다양한 파급효과를 객관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된 사항이다. 일부 부정적인 영향만을 근거로 행정도시 건설을 중단·축소시켜서는 안 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에 행정부처 이전만으로 50만 명의 도시가 조성될 수 없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계획 자체를 모르고 하는 소리다.

행정도시의 건설은 처음부터 행정부처와 함께 국가중추기능을 하는 문화, 교육, 연구개발, 과학기술 및 국제 업무기능 등의 이전을 포함하고 있다. 행정중심도시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거점도시로 건설되기 바란다면 정부부처의 이전과 함께 인구흡입력이 큰 과학기술벨트, 국립대학캠퍼스의 이전 등 첨단기술과 연구개발, 교육 및 문화 기능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지금에 와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을 훼손하면 135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의 이전과 현재 전국 10개 시·도에서 건설 중인 혁신도시의 추진도 무산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적 대 혼란과 갈등도 피할 수 없게 된다.

백해무익하고 실현 가능성도 없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수정 논란, 지금 당장 거두어들이는 것이 상책이다.

[세계일보 9월 16일자 29면]

충남도, 내년도 다문화 지원사업 결정

- 2010년 다문화지원사업 신규사업 6건, 그 외 3건 중·단기로



충남도는 9월 10일 오후 2시 도청 대회의실에서 지난달 열린 다문화정책토론회 및 분과회의 결과를 토대로 다문화정책위원회를 열고 2010년 다문화 지원사업 등에 대해 심의 했다.

이날 위원회(위원장 행정부지사 김동완)는 그동안 추진해 온 다문화정책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원사업이 필요한 사업과 중복·유사사업을 통합해 금년도 사업비에 준해서 지원토록 하였고,

신규로 정책 제언한 다문화가족 생활 길잡이 책자 발간 다문화 이해 DVD 제작 다문화공감, 행복충전 5개년 계획 수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프로그램 매뉴얼 제작 등 다문화 가족간 공감시간 운영, 다문화정책위원회 운영 등 6개의 단위 사업을 명시화하여 2010년도 지원사업에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이외 정책 제언 사업은 중·단기별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3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0년도 다문화 지원 사업을 알차게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 조치하고, 중·단기 사업에 대하여는 점차 보완·수정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문화정책위원회는 도내 다문화가족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집행부에 사업방향을 제시하고 지원 정책·예산 등을 종합 조정·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지난 5월 25일 창립총회를 열고, 8월 6일 다문화정책토론회 및 분과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프레2010대백제전, 행사 취소 결정

- 200만 도민과 국내외 관람객의 건강과 안정 중요시
- 총 사업비 108억원 중 13억원 손실 예상



(재)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위원장 최석원)은 프레2010대백제전을 D-30을 앞두고 행사를 전면 취소한다고 밝혔다.

9월 9일 오후 도청회의실에서 프레2010대백제전과 관련된 충청남도, 충청남도의회, 공주시, 논산시, 부여군 등 3개시군의 시장, 군수와 의회의장 및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임원, 범도민지원협의회 회장단 등이 모여 합동 협의회를 개최하고, 국내외적으로 나날이 확산되는 신종 플루에 따른 200만 도민과 국내외 관람객들의 건강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올해 행사는 부득이 취소하고, 내년도에 개최될 2010대백제전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이완구 지사에게 건의하였다.

이완구 지사가 공주시·논산시·부여군과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및 범도민지원협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임으로써 올해 행사를 취소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추진위는 행사취소에 따라 대규모 축제 대신, 공주, 부여에서 제례행사를 간소하게 거행하여 54년간 이어져온 백제문화제의 전통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그동안, 추진위는 총 108억원의 예산 중 프로그램 운영 관련 11억원, 홍보비 3억원, 사무운영 경상비 7억원, 공주시와 부여군에서 17억 원으로 총 38억원을 집행하였으나, 내년도에 재활용이 가능한 17억원을 제외하고, 손실액 21억원 중에서 사무운영비로 집행된 경상비 7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손실액은 1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최석원 추진위원장은 "그동안 준비하면서 각계각층에서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주셨는데, 정부의 국가관리 위기지침에 의해 전국적으로 축제의 취소 내지 중지 지시가 있었고, 특히, 관람객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지역 안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부득이 올해 행사를 취소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완구 충청남도지사는 "내년도에는 700년 대백제의 융혼한 기상과 찬란한 역사문화를 간직한 백제인의 후예인 200만 도민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2010대백제전」을 기필코 성공적으로 개최하자"고 당부하였다.

충남도, “2010 대충청 방문의 해” 30개 자체사업 확정

— 관광객 10,700만명(순증 529만명) 방문 예상



충남도는 정부가 공식 지정한 '지역 방문의 해'인「2010 대충청 방문의해」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자체적으로 시행할 30개 사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24일에는 3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할 사업인 '엽서는 정을 싣고' 등 9개 사업을 정한 바 있다.

이번에 확정된 충남의 30개 자체사업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전문가를 비롯한 관계자간 회의는 물론 충남 관광시책자문단의 다양한 자문 등을 통해 당초 76개 사업을 가다듬어 '2010'이라는 상징성을 부여(20+10=30)한다는 차원에서 최종 30개 사업으로 확정시켰다.

이는 충남·대전·충북이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9개 사업을 밑바탕으로 30개 사업을 선정한 것으로「2010 대충청 방문의 해」사업을 더욱 빛내고자 하는 사향으로 앞으로 더욱더 긴밀한 협조와 지원 태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전과 충북에서 하지 않는 사업 중 특별한 사업으로 KBS N-TV를 통해 전 세계에 중계되는 등 수백억원의 홍보효과가 있는 ▲“R-16 대회”, 우리나라 전 관광인이 모이는 ▲

“2010한국관광총회”, 서해안 유류피해 극복을 통해 관광 활성화를 위한 ▲“태안 환경축제 및 연계사업” 등이 있다.

또한 눈여겨 볼만한 사업으로는 그 옛날 신혼여행 및 수학여행 등의 추억 여행을 떠나는 ▲“충남 옛이야기 투어”, 주요관광지에서의 기념품, 공예품, 농수특산물의 깜짝 경매인 ▲“Auction 경매”, 충남 출신 유명인사(스타)와 일반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는 ▲“명사(스타)와 함께하는 고향 여행” 등이 있다.

도 박윤근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메가 이벤트인『대백제전』과 『2010 대충청 방문의 해』양대 사업을 주축으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 사업 및 환대서비스 개선 사업 등을 공격적으로 전개해 나감으로써, 「2010년」을 충남관광 발전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원년으로 기억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 도정발전 "아이디어 304건" 쏟아냈다.

-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간, 도 간부 등 합동워크숍(합숙토론)개최



2010년도 도정발전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도 간부 등은 휴일을 반납하고 아이디어를 생산해 냈다.

충남도는 9월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간 충남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이완구 지사를 비롯한 실국원장과 주무담당이상 간부, 道 출연연구기관장 등 110명이 모여 '2010년도 도정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합동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道의 주요 간부들이 함께 모여 휴일까지 반납하고 전원 합숙을 하면서 보다 발전적인 도정 운영을 위해 부서별로 추진하고자 하는 도정에 대해 상호 공감의 폭을 넓혔다.

또한 충남발전연구원 등 6개 출연연구원장도 함께 참여해 연구기관별로 타 시도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내년도 신규 시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특히, 어윤대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과 김상협 대통령실 미래비전비서관을 초청, "국가브랜드와 도시(지역)브랜드" 및 "녹색성장의 길"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통해 중앙정부의 주요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기회도 가졌다.

금번 도정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합동워크숍에서는 ▲충남도가 벤치마킹을 통해 습득하고 발

굴한 타 시·도 우수사례 60건 ▲내년도 신규시책 166건 ▲6개 출연연구기관에서 발굴하여 제안한 국내외 우수사례 22건과 내년도 신규시책 56건 등 총 304건의 시책을 발표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심도있는 토론을 실시했다.

또한 지난 제64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대통령이 제시한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중앙 부처와 유기적인 정책 공유를 통해 친서민 정책 등 주민과 밀접한 과제를 선도적으로 도정에 반영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이완구 지사는 국정과 도정 운영기조의 균형을 통해 강한 충남의 위상을 더욱 높혀 나가자고 강조하고, "他시·도 벤치마킹을 통해 발굴한 우수시책은 우리도 실정에 맞도록 도정에 접목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남은 민선 4기 4년차 도정을 더욱 알차고 내실 있는 성과를 창출해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충남도, 관광객 지난해 대비 36.3% 증가

- 지난해 2분기 대비, 충남도 방문한 관람객 561만7,510명 늘어
- 충남관광홍보전용열차 운행, 고속도로 개통 등 영향

충남도를 찾은 관광객이 지난해 동기(2분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11일 충남도에 따르면 금년도 2분기 충남도를 방문한 관람객은 2,107만 5,643명으로 지난해 1,545만 8,133명 보다 561만 7,510명이 늘어 36.3%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 같은 관광객 증가는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울 지하철 1호선 「충남관광홍보전용열차」를 이용한 홍보 등 각종 시책들이 가시화되고 있는 증좌라고 분석했다.

특히, 서해안 인근 6개(보령, 서산, 서천, 홍성, 태안, 당진) 시·군은 1,090만 4,500명으로 45.1%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그중 최고 많은 207.5%의 증가를 보인 태안은 최근 성공적으로 추진된 "2009안면도국제꽃박람회"의 개최가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올 5월에 개통된 당진-대전 간 고속도로와 수도권 전철의 연장운행의 영향으로 예산과 아산은 각각 109.6%와 47.3%가 증가됐고 이는 교통 여건의 변화가 관광수요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결과로 "2010대백제전", "2010 대충청권방문의 해" 등 충남도가 추진하는 주요 관광 시책사업의 대한 성공 예감과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충남,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 전국1위

충남이 경기, 경북 등 산업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제치고 우리나라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 전국 1위를 차지하였다.

8월 29일 통계청이 지역내총생산(GRDP) 기준년도를 2000년에서 2005년으로 변경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충남은 2000~2007년까지 산정한 연평균 성장률이 9.7%를 기록,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충남 다음으로는 경기(8.3%), 경북(7.2%), 인천(5.6%), 경남 (5.2%)의 순이었다.

또한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도 3만불을 돌파(30,652\$)하여 울산에 이어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충남이 개도 이래 처음으로 3만불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충남이 디스플레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신성장동력산업을 중심으로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유치 등 지속적인 투자유치 노력에 기인한 결과로 평가된다.

한편 충남도는 민선4기 출범이후 2009년 6월말 기준으로 외자 26건에 48억 21백만불, 기업 2,502개를 유치하는 등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실적을 나타냈다.

권희태 도 경제산업국장은 "앞으로도 충남은 20년간 장기 표류되었던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 사업의 정상 추진, 도청이진 신도시 건설, 황해경제자유구역의 본격 개발, 국방대학교 논산이전에 따른 국방과학클러스터 구축 등 여러 호재에 힘입어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충남발전연구-한국농촌경제연구, 연구협약 체결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 CDI)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오세익, KREI)은 9월 10일 오전 11시에 대전리베라호텔 1층 토치홀에서 양 기관장을 비롯한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 연구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충발연과 농경연 간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경쟁력있는 정책 개발에 공동 협력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협약의 주요 내용에는 ▲공통 연구과제 발굴 및 협동연구 수행 ▲양 기관의 특화된 지식 정보의 상호 교류 및 확산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학술세미나 등을 포함하고 있어 연구교류 활성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충발연 김용웅 원장은 인사말에서 "농촌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충남에 대해 보다 전문적·학술적 공동연구가 가능해져 충남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농업부문 녹색성장, 녹색기술 활용과 신제품 육성에 관한

CDI-KREI 주최, '기후변화 대응 농업부문 녹색성장 전략' 국제심포지엄서 주장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 CDI)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오세익, KREI)은 9월 10일 충남대학교 정심화 국제문화회관 대덕홀에서 김동완 행정부지사, 송용호 충남대총장, 관계 공무원 및 학생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 농업부문 녹색성장 전략'이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열린 행사는 기후변화 대응 관련 미국, 일본, 유럽·OECD 등 주요국과 국제기구의 최근 동향 및 정책 프로그램 정보 교류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부문의 전략을 수립하고 농업의 미래 비전 및 농정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열렸다.

첫 주제발표자인 미국 예일대학교 로버트 멘델존 교수는 '기후변화와 농업: 영향과 적응'이란 제목의 발표를 통해 "농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은 국가 전체 배출량의 2%에 불과하다고 밝힌 뒤 "농업은 비료사용 감소, 저경운 농법, 가축사육방법 개선 감소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OECD 월프리트드 레그 무역·농업국 과장은 '기후변화와 농업: 영향, 적응 그리고 완화'란 제목의 발표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은 온실가스 감소와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두 가지 정책을 통합하고 다른 정책과 연계하여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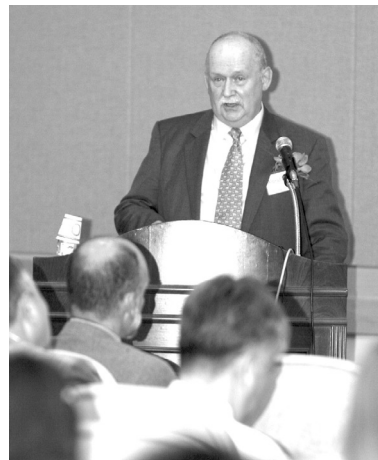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창길 연구위원은 '한국의 농업부문 기후변화 대응방안'이란 제목의 발표

를 통해 "기후가 변화하면 기온, 강수량, 일사량 등 농업기 후자원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적응하기 위해 농업지대 재편, 병해충관리 및 재배 기술 보급, 저탄소 녹색기술의 활용 및 신품종 육성, 위험관리시스템 활성화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키요타다 하야시 농업·식품산업종합연구기구 팀 장은 '일본 농업의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과 완화 전략'이란 발표를 통해 "농업의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과 완화전략을 농업활동의 전 과정 관점에서 살펴 볼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전방과정에서는 토양 및 농기계사용으로부터의 직접 배출 저감, 후방과정에서는 농기계, 비료 및 농약 생산, 폐기물 관리 등이 중요하다."고 발표했다.

충남발전연구원 이인희 책임연구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촌의 녹색성장'이란 발표를 통해 "농업분야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기후변화 적응기반 구축, 신재생 에너지의 활용, 신품 종, 대체작목, 저투입 농법 등 온난화 대응연구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완구 충남도지사는 인사말(대독)에서 "기후변화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녹색기술과 녹색에너지로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녹색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면서 "충남에서도 농업의



생명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설채 소의 녹색에너지 확대, 태양열 등의 신 재생에너지 활용, 가축분뇨 자원화와 녹색 축산 등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추진 등 저탄소 녹색성장의 농업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해나갈 계획"이라고 말 했다.

‘당진항 발전’ 배후단지에 달렸다

충발연 워크숍서 내항개발 · 연륙교 건설 필요성 제기



당진항이 국제적인 항구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동북아 물류환경 변화와 물류지원기능 강화를 위한 항만 배후단지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증가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당진(신평)과 내항을 연결하는 연륙교 건설을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같은 견해는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이 9월 8일 오후 당진문예의전당에서 개최한 당진내항지역 개발과 내항진입도로건설 대응방안을 논의키 위한 워크숍에서 나왔다.

충남발전연구원이 주관한 이날 워크숍에는 항만 전문가와 함께 기관단체장을 비롯한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현재 당진항은 15선석의 부두에서 연간 3900만t의 물동량을 처리하고 있으며, 향후 2020년 49선석의 부두에서 연간 1억이상의 물동량 처리를 목표로 환황해권 중심 국제 무역항으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워크숍의 첫 발제자로 나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성우 연구위원은 ‘당진항 항만배후단지 중요성과 연결교량 필요성’이란 주제 발표에서 세계물류시장 규모의 급성장에 따른 동북아

물류환경 변화를 예고하며 항만과 내륙 간 물류 네트워크 형성과 물류지원기능 강화를 위한 항만 배후단지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배후단지 접근성 강화와 부가가치 공동창출을 위한 내항과 당진 간 연결 교량 건설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서 '내항지역의 산업단지 조성 등 활용 방안'이란 주제의 발제자로 나선 국토연구원 장철순 연구위원은 국내외 항만배후단지 개발 사례를 들어가며 제조, 물류 등이 복합된 고부가가치 물류기능 강화를 위한 복합물류단지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복합물류단지와 연계한 당진 내항 배후단지 개발을 위해서는 국토해양부, 경기도, 충남도, 평택시, 당진군, 아산시 등의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공동이용방안 마련을 위한 지원조직구성과 공동사업추진을 위한 지역투자발전협약 체결 등 협력사업을 구체화 할 것을 제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당진군청 이능호 해양정책관 등 토론자들은 당진군의 현안인 내항 배후단지 개발에 대한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함을 강조했고, 당진항이 환황해권 중심 무역항으로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내항과 당진(신평)간 연결도로 건설이 시급히 앞당겨져야 함을 강조하는 등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출처 - 중도일보 9월 9일자]

충남발전연구, 호주 퀸즈랜드 대학 초청 행사 가져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 CDI)은 한발대와 공동으로 7월 29일 오전10시부터 충발연 대회 의실에서 호주 퀸즈랜드 공대(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QUT)와의 공동 워크숍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QUT에서 '지역발전계획 실습' 교과목을 수강중인 30여명의 학생들을 한발대가 초청, 지역개발정책에 대한 대전·충남의 현황을 배우기 위한 일환으로 충남발전연구원을 방문하면서 성사되었다.

워크숍은 충발연 김용웅 원장의 '한국의 공간 변화와 지역개발정책', 충발연 이인희·오용준 책임연구원의 '동북아시아에 대응한 충남의 개발 전략'이란 주제로 특강을 가진 뒤, QUT 학생들과 함께 대전·충남권의 지역개발정책에 대한 질의응답 및 토론을 벌였다.

QUT 4학년에 재학중인 '크리스 루이스'(Chris Lewis, 21)는 토론에서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한국의 연도별 지역발전정책을 살펴볼 수 있었고, 특히 충남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동북아시아에서의 지역적 경쟁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이날 행사에 의미를 부여했다.

대 중국-충청권-영남권 교역의 동서핵심축 견인해야 IC 인접 시·군의 자원 잠재력 조기 발굴 등 필요

- 당진-대전, 서천-공주간 고속도로 개통 심포지엄서 제기

지난 5월 28일 개통한 당진-대전, 공주-서천간 고속도로가 서해안 시대 새로운 개발축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을 중심으로 대 중국-영남권 교역의 동-서간 성장동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은 대전발전연구원(원장 육동일)과 공동으로 7월 17일 오후 2시 30분부터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대전광역시 김홍갑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학계, 언론계, 관계 공무원 및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진-대전, 공주-서천간 고속도로 개통 이후 대전·충남 발전 전략과 재발전" 심포지엄을 가졌다.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두 고속도로 개통 이후 제기된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대전과 충남을 중심으로 한 상생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제발표에 나선 목원대학교 김원배 교수는 "두 고속도로 및 청원-상주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연간 총6,474억원의 물류비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존 경부축 중심의 개발로 인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당진-상주간 고속도로는 대중국 교역량을 촉진시키고 충청권과 영남권을 잇는 소통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라고 언급하면서 "대전권의 대덕연구개발특구, 아산만권의 산업단지, 서해안물류거점으로 급부상한 당진·평택항, 관광객 접근성이 용이한 청주공항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하고, 고속도로 인접 지역의 핵심 관광 명소를 개발하고 홍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발전연구원 강영주 연구위원 역시 "서해안, 호남, 경부, 중부내륙, 청원-상주 고속도로가 동서로 연결돼 남북축 고속도로의 교통 혼잡이 크게 개선되어 물류비 절감효과가 예상된다."며 "당진지역의 경우 우리나라 중부 및 동·남부지역 대중국물류의 수출입 거점지로 육성해야 함은 물론, 영남권과 강원·충북 등에서 들어오는 교역량을 처리할 수 있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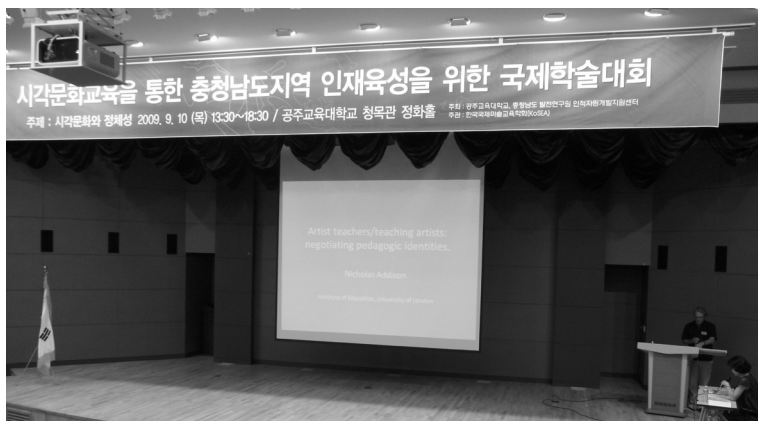
간 물류기지 필요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두 고속도로 개통으로 교육, 의료, 문화 등의 경계가 허물어질 것이 예상되는 만큼, 충청광역경제권 사업의 추진을 계기로 지역 내 동질감 증대를 위한 각종 교류행사, 지역농산물의 권역 내 소비를 위한 지산지소 운동, 관광자원의 교차이용, 축제 등의 공동개최, 해외마케팅의 공동추진 등 인적·문화적 노력도 필요하다."면서 향후 발전 과제와 전망을 제시했다.

공주대학교 정환영 교수는 "당진-대전, 서천-공주간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충남 북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간구조의 변화 등 여러 부문에서 많은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두 고속도로와 연계하여 효과적인 지역발전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변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 잠재력 조기 발굴 ▲고속도로 주변지역 개발사업을 국가 및 지역의 핵심정책·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 발휘 ▲개별적·지역적 개발보다는 광역적 협력을 통한 지역개발 추진 ▲고속도로 주변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기존 사업의 고도화·소프트화 노력 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한남대학교 정순오 교수의 진행으로 남서울대학교 김항배 교수, 충남발전연구원 한상욱 연구위원, 대전광역시 이중환 정책기획관, 충청남도 안병량 균형발전담당관, 서천군 이덕구 정책기획실장, 당진군 손인옥 기획감사실장 등이 참석하여 두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다양한 발전 방안들을 함께 논의하였다.

충청남도 예술분야(시각문화교육) 인재육성을 위한 국제학술대회 개최



충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센터장 최병학)에서는 공주교육대학교(총장 전우수)와 공동주최로 9월 10일(목)에 이 대학 청목관 정화홀에서 국내외 시각문화교육분야의 전문가, 공주교육대학교 교직원 및 미술교육과 재학생, 충청남도 지역 초·중등학교 미술교사, 충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연구진 등이 참여한 가운데 「충청남도 예술분야(시각문화교육) 인재육성을 위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국제학술대회에서는 시각문화 전공 미술교육학의 세계적 석학인(미국 Brent Wilson 교수, 미국 Christine Ballengee Morris 교수, 영국 Nicholas Addison 교수)들을 초빙하여 주제발표를 하였으며,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은 선도적이며 창의적인 미술교육 인재육성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함께 글로벌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2009년도 충청남도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선정·추진 및 도·시·군 담당관 설명회 개최



충남발전연구원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광역자치단체 평생학습 네트워크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특별교부금 1억 5천만원, 충청남도 대응자금 1억 1천만원 등 총 2억 6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다. 이번 공모사업은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5개 유형의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중 충청남도는 전국 16개 시·도가 경합한 가운데 6개 시·도(서울, 부산, 인천, 경기, 충남, 경북)가 최종 선정되는 과정에서 「충청남도형 광역자치단체 평생학습 추진모델 구축사업」이 우수성을 인정 받아 선정되었다.

이번 사업에는 평생학습 기반구축을 위한 협의기구 운영, 평생학습 운영에 참여하는 평생교육사 및 전담공무원·평생학습 도우미 양성과정 운영, 시·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평생학습 지식·정보를 취득함과 동시에 앞으로 진행될 「평생학습 계좌제」와 연계될 수 있는 충남도 평생학습 D/B구축사업이 기대된다. 이에 따라 9월 9일(수) 충남발전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각 시·군의 평생학습 담당자들을 불러 전체사업에 대한 설명을 갖고 향후 사업수행에의 협조를 다짐하였다.

2009년도 제1회 「Job아라! 포럼」 (산·학·관 HR전문가 포럼)개최



충남발전연구원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에서는 8월 14일(금)에 천안종합고용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충청남도 관계관, 「Job아라! 포럼」공동대표(최병학 충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장, 정영화 남서울대학교 취업정보센터 소장, 천안종합고용지원센터(신호철 소장), 충청투데이(이의형 부장), 충청남도 내 8개 기업의 인사담당자, 대학(교) 취업담당자, 충청남도내 대학생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 제1회 「Job아라! 포럼」(산·학·관 HR전문가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Job아라! 포럼」행사에서는 충청투데이 취재부(이의형 부장)이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지역 중소기업의 홍보전략"을 발표하였고 크루셜텍(주), (주)에나인더스트리, (주)우리미디어, (주)부방테크론, SKC Haas 디스플레이 필름(유), (주)재능교육, 비스티온IK, 태산엘시디(주) 8개 기업에서 기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충청남도 관계관 및 기업인사담당자, 대학(교) 취업담당자들이 질의응답 및 토론을 하며 충남지역 대학과 기업의 구직·구인간 mismatch 해결을 위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 「Job아라! 포럼」은 도내 전 대학과 지역기업체가 참여하여 충청남도 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고용촉진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충청남도 녹색성장 인적자원개발 세미나 개최



충남의 녹색성장정책을 전국차원에서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인재양성 추진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남발전연구원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센터장 최병학)는 7월 23일(목) 오후 2시부터 충남발전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와 충청남도 후원으로 최병학 충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장, 이영훈 충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 위원장, 서철모 행정안전부 지역녹색성장과장, 박정현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충청남도 및 16개 시·군 녹색성장관련 관계자 등 각계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녹색성장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정부의 녹색성장 인재양성 추진전략과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의 연계성을 도모하여 충남의 녹색성장 인재양성 기본계획 및 인적자원 개발 프로그램을 도출하고자 마련되었다.

행정안전부 서철모 지역녹색성장과장은 기조연설에서 "충남을 비롯한 각 자치단체는 정부가 계획한 자전거 교통 분담지원, 공공청사·시설 및 민간건물의 저비용·고효율 에너지 시설 도입 시 인센티브 제공,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등 주요 선도 사업과 연계한

지역별 사업 추진체계를 명확히 확립해야 한다"며 지자체의 녹색성장 역할을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직업개발원 황규희 소장은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은 융합녹색기술의 개발과 확산에 주력하면서 기술인재양성을 위한 체계 및 구체화 전략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면서 "인력양성 실용성 제고를 위해 산업체 융합인력 양성 참여 지원, 정부 및 지방출연(연)과 해외 우수 인재를 통한 교수요원 확보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고,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글로벌 공동연구를 확대시켜야 한다"며 "신성장동력산업 개발을 위한 원천기술 확보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충남발전연구원 신동호 책임연구원도 마찬가지로 "정부가 내세운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에서 언급되었듯이 2013년까지 매년 GDP의 2% 수준으로 총107.4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특히 인력수요 측면에서 보면 기후변화 대응 및 신성장동력 창출 등 총152.9만명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면서 "제조업 중심의 고용없는 성장지역인 충남의 특성을 분석하여 신재생에너지 산업기반 확대에 따른 일자리, 기후변화 대응 녹색일자리, 핵심 녹색기술 개발인력 및 환경건설링 전문인력 등을 중점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충남의 체계적인 녹색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녹색기술수요에 부합한 필요 인력의 최적 공급시스템 구축, 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위한 녹색일자리 창출, 충남녹색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단위 녹색파트너십 구축 등을 고려한 기본방향과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09년도 하반기 운영계획 및 「갈등예방시스템 구축」 실무협의회 개최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은 지난 7월 21일 화요일 오후 4시부터 충남발전연구원 1층 회의실에서 갈등관리 및 금강살리기 관계관, 사회갈등연구소 전문가 및 충남포럼, 4대 권역별 포럼 임원 및 회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도 하반기 운영계획 및 「갈등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금강살리기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갈등의 예방·중재·조정의 필요성과 방법론에 대해 의견이 모아졌으며, 道 차원에서의 갈등관리 예산확보 및 조례 제정을 포함, 강력한 의지 표명 및 협조 당부, 道, 시·군 갈등관리 담당자의 포럼의 중요성 인식 및 협조 요청, 금강살리기 사업 관련 포럼의 세부 추진사항에 대한 협력체제 구축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포럼의 장기적이고 안정적 운영을 위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공감, 통일성 있게 추진키로 합의하였다.

“원전 안전성”과 “주민수용성”간의 적절한 관계설정을 위한 경주시월성원전민간환경감시 센터 공식방문 및 워크숍 참여



충남포럼의 최병학 운영위원장과 이준건 갈등중재위원장 등은 지난 7월 10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경주시월성원전민간감시센터 회의실에서 개최된 「환경감시기구 워크숍」에 참석하여, 각각 주제강연 실시 및 토론에 참여하였다.

이 자리에서 최병학 박사는 "지역의 갈등사례와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주제로 그동안 충남에서 발생한 갈등과 해결사례, 충남포럼의 운영사례, 경주 방폐장 유치사례 등의 검토를 통하여 지역갈등의 예방을 위한 실천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원전시설의 이해와 발전적 접근방향 모색”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워크숍에서는 경주시의 주요산업인 원자력의 현안을 공유하고,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 지역발전의 주체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며, 충남포럼과 민간환경감시센터간의 상호협력과 교류를 재다짐하는 기회가 되었다.

「예산군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입지갈등 관련 좌담회 개최

충남포럼은 지난 8월 25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충남 예산군 예산읍 신암면사무소에서 충남 포럼 임원 및 회원 등 전문가, 道 관계관, 아산시 관계관, 예산군 관계관, 사업자 대표 및 관계자, 시공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군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사업” 갈등문제와 관련한 제1차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현재 아산시와 예산군 간 잠복된 갈등문제를 본 포럼 주최의 좌담회 개최를 통하여 대화의 물꼬를 트고, 소통기회를 마련함에 따라 갈등 완화의 길을 모색하고, 특히 아산시와 예산군 간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 지역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번 좌담회를 통하여 충남포럼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시·군간 갈등관련 현장갈등예방사업으로서 포럼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함께 현장의 특성과 제약조건을 재확인하게 되었으며, 각 시·군의 주민대표 및 의회의원들의 참여를 전제로 할 때, 아산시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실효성 있는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향후 충남포럼에서는 현장지향적 갈등예방관리 역량강화 및 관련분야 전문가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충청남도 갈등관리 조례제정 및 갈등조정사제도 도입」 관련 자문회의 개최



충남포럼은 지난 9월 4일 금요일 오후 4시부터 충남발전연구원 1층 회의실에서 충청남도의 갈등관리 조례제정 및 갈등조정사제도 도입을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자문회의에는 국무총리실·행정안전부·충청남도 갈등관리 관계관, 한국행정학회 위기관리특별위원회 위원, 사회갈등연구소 전문가, 충남포럼 임원 등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현재 추진중인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갈등 관리법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면밀한 분석과 법령제정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연계된 충청남도의 조례제정 방향 및 갈등조정사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충청남도 갈등관리 조례제정을 통해 상생협력·갈등관리 충남포럼의 운영지원 활성화 및 권역별 포럼 및 시·군 단위 관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갈등관리 및 조정의 전문적, 지속적 운영을 위한 전문자격 도입은 향후 전문화, 체계화된 갈등관리 및 조정영역의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디자인 교육을 통한 공공디자인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충남공공디자인클리닉센터는 지난 2009년 2월 23일에 센터를 개소한 이래로 충청도내 16개 시·군 공공디자인 담당자를 대상으로 워크숍과 세미나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공공디자인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지자체가 공공디자인의 중심점 모색을 위해 너도나도 뛰어 들고 있지만, 정작 일선에서 공공디자인을 접하게 되는 공무원들은 교육의 부재와 업무의 중복으로 인해 기피하게 되는 대상이며, 접근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8월 27일에 충남공공디자인클리닉센터(센터장 이충훈) 주최로 16개 시·군 공공디자인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공공디자인 모범지역 답사에서는 전주한옥마을과 진안군 백운면을 방문, 충청도 지역과 유사한 환경에서 적용 가능한 우수한 공공디자인 체험 및 진행 과정등을 알아 살펴보았고, 이번 답사를 통해서 일선에서 공공디자인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관심과 디자인에 대한 의식을 전환할 수 있었다.



원 고 모 집



열린충남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열린충남은 충남 발전에 관한 연구논문, 정책제언 등
참신한 내용과 정보를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교료를 드립니다.

| 원고투고 | 충남발전연구원 홈페이지(www.cdi.re.kr) 참조 (작성요령, 투고신청서 등)

| 보내실곳 | 충남 공주시 금흥동 101 충남발전연구원 기획조정연구실

전화 (041) 840-1123 팩스 (041) 840-1129 E-mail : cdipr@cdi.re.kr

제2회 전국 대학(원)생 대상 충청남도 상생협력·갈등관리 우수논문 발표대회

전국 대학(원)생들에게 충남지역의 상생협력과 갈등관리에 대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학문적 발전을 꾀하고, 지역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등 갈등문제 해결능력을 증진하기 위한 제2회 전국 대학(원)생 대상 충청남도 상생협력·갈등관리 우수논문 발표대회를 개최합니다.

■ 논문공모내용 ■

- ◆ **응모분야** : 사회통합, 갈등해소, 상생·협력·공존공영 등 충청남도과 관련한 각종 갈등사안에 대한 정책문제로 이론과 현실을 효과적으로 연계, 접목시킬 수 있는 내용
예) 상생협력사례 및 갈등해소방안, “금강살리기사업” 및 시·군통합 등을 비롯한 남비시설 관련 공공갈등예방, 갈등해소, 각종 민·관 협력 사례분석 및 정책대안 발굴·제안 등
- ◆ **응모자격** : 전국 대학원생 및 대학생이면 누구나
- ◆ **응모방법** : 개인 또는 5명 이내 팀별 응모가능
- ◆ **논문분량** : A4 용지 20매 이내로 한글 문서로 작성, 본문 글자크기 11, 줄 간격 160%을 기준으로 함 (원고 매수 초과는 감점) [A4 2장 분량 요약본 별도제출]

■ 논문접수 및 1차심사 결과발표 ■

- ◆ **접수기간** : 2009년 11월 9일(월) ~ 11월 13일(금)
- ◆ **접 수 처** : (우 : 314-140) 충청남도 공주시 금흥동 101번지 충남발전연구원 부설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사무국 (☎ 041-840-1238~9)
※ 전자우편접수 : lky1981@cdi.re.kr / lydian21@naver.com (접수후 필히 전화확인 요망)
- ◆ **1차심사결과 발표** : 2009년 11월 20일(금)
※ 별도의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진행

■ 발표대회 및 시상식 일시와 장소 ■

- ◆ **때** : 2009년 11월 26일(목), 14:00~ [예정]
- ◆ **곳** : 충청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 대강당 [예정]
- ◆ **발표형식** : 발표는 파워 포인트(PPT)를 이용하여 20분 이내 발표
※ 학습효과 증진을 위해 발표자 격려팀(응원단) 다수 참가 적극 권장

■ 시상내역 ■

- ※ 2차(최종)발표심사 : 논문발표대회 행사당일 심사 후 결정, 시상식 개최
- ◆ **최우수상** : 대학생 / 대학원생 각1편 상장 및 상금 100만원
- ◆ **우 수 상** : 대학생 / 대학원생 각1편 상장 및 상금 50만원
- ◆ **장 려 상** : 대학생 / 대학원생 각2편 상장 및 상금 30만원
※ 참가팀(학생·지도교수)은 충남포럼의 명예회원 기회 등 특전 제공

■ 안 내 ■

충남발전연구원(www.cdi.re.kr) 및 충남포럼(www.pcpf.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충청지역연구」 제3호 논문 모집 안내

「충청지역연구」는

1. 충남발전연구원(CDI)이 발간하는 충청지역의 상생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각 분야별 학문적 발전과 우수한 연구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문학술지입니다.
2. 본 학술지는 1년에 2회 발간이 원칙이며, 매년 6월말, 12월말에 발간됩니다.
3. 원고 투고 분야는 농촌개발, 도시 및 지역계획, 지방행정, 문화예술 및 관광, 산업경제, 환경생태 등으로 한정하되, 충청지역과의 직·간접적 연관이 있는 논문이어야 합니다.

논문 투고 및 게재

1. 투고를 희망하시는 분은 “논문 원고”와 “논문투고신청서”를 아래의 E-Mail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지역연구” 담당자

[314-140] 충남 공주시 금홍동 101번지

T : 041-840-1123 / F : 041-840-1129

E-mail : cdipr@cdi.re.kr

2. 원고 마감 : **11월말일 도착분에 한함**
3. 심사 후 채택된 원고에 한해 **100만원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4. 투고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투고되어 심사중이거나, 또는 기 게재된 논문이 아니어야 합니다.
5. 일단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원고는 본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가 확정됩니다. 또한 확정된 논문의 저작권은 충남발전연구원에 있습니다.
6. 「충청지역연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충남발전연구원 홈페이지(www.cdi.re.kr)를 참조하십시오.
7. 대한민국의 중심! 충청 지역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밑거름이 될 학술지인 「충청지역연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